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정치학

여 성 학 과
이 보 라
2009

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정치학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7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이보라

이 보 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김 은 실 _____

심사위원 조 순 경 _____

우 석 훈 _____

김 은 실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차 례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7
1. 연구방법	7
2. 연구과정	8
2-1. 주민-되기의 과정	8
2-1-1. '풍경'으로서의 주민과 구체적 '관계'로서의 주민	8
2-1-2. 어떠한 위치에서 '주민'과 소통할 것인가	11
2-2. 지방어와 '알아듣지 못함'을 둘러싼 지역·성별 권력관계	12
3. 연구참여자의 특성	14
II. 이론적 배경	17
A. 평화(폭력) 개념의 규범성 비판	17
B. 지구화 시대, 분석범주로서의 장소성(placeness)	20
C. 제주도, 자연(몸)의 이미지와 시선의 정치	21
III. '바당'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	24
A.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마을"	24
B. 사회경제적 배경	27
C. 주민구성: 대면(對面)사회로서의 친족체계와 마을공동체	30
IV. '발전'으로서의 군사기지	34
A. 군사기지 건설담론의 정착	34
1. 폭력이 배제된 군대: "~이 아닌 군대"라는 담론	34
2. '위기' 담론의 종착지로서의 "제주도 발전"과 군사기지 계획	41
B.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군사기지	49
1. '결핍(lack)'으로서의 '바당'마을	49
2. 이미지로서의 군사기지과 기획자가 되어가는 주민	54

V. 새롭게 인식되는 군사기지에 의한 폭력	60
A. 주민을 부정하는 폭력	60
1. 주민이 대리(代理)하는 폭력	61
2. 땅-바다에 대한 주도권의 전도	68
3. "자치도야? 망치도지" : 자율권을 박탈하는 '자치'	73
B. 주민을 대상화(objectification) 하는 폭력	77
1. '가만히 있어야' 가능해지는 마을 기획	77
2. 주민과 땅-바다를 '안다'고 하는 것	81
C. 소환(recall)되는 폭력의 기억	85
1. "4.3인거 닮다" : 역사적 기억과 중첩된 현재	85
2. 군사기지에 대한 성별화된 기억	91
3. 소결	94
VI. '발전'의 재의미화와 평화 만들기(peace-making)의 정치학	96
A. '주민됨'의 의미 생성	96
1. 질문자로서의 '주민'	96
2.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등'해지는 것	100
B. 장소성(placeness)의 재편, '삶'의 재편	104
1. "경하니까 판데 가라" : 취약함(weakness)의 자원화	104
2. '발전'의 재의미화와 장소성(placeness)의 생산	106
VII. 결론을 대신하여: 평화운동에 대한 제언	111
■ 참고문헌	114
■ ABSTRACT	123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군사적 폭력과 평화의 개념이 해석되는 방식과 시각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군사적 폭력(군사주의)에 대한 연구는 '폭력' 자체를 동원과 배제의 메커니즘, 국가주의, 남성중심성의 맥락에서 바라봄으로써 강력함, 권위,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은 피해를 '증명'하거나("고통받는 주민"), 피해자를 정치적 주체로 반등(反騰)시키는("진정한 평화") 방식으로 접근되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평화'의 개념은 본래 갖고 있었던 것을 잃었다는 맥락에서, 훼손시키지 않고 지키는 것(keeping)으로 의미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의 폭력과 피해의 구도는 이미 주어진 것, 미리 결정된 것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분석은 한국사회에서의 군사적 폭력이라는 것이 독재정권, 징병제, 분단 등으로 인한 경험과 해석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바당'마을에서의 군사적 폭력은 공포나 회유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군사기지(military base)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고 있었다. 때문에 군사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역들과 경쟁하기도 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며, 폭력의 개념과 평화의 개념 역시 과정적인 의미로서(peace-making) 재정의·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방법은 제주도 '바당'마을에서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바당'주민들 20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도청 공무원, 군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겪은 주민-되기의 과정을 통해, 주민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의 의미, 수행적 정체성의 문제, 지방어와 표준어(서울어), 성별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바당'마을에 들어서는 군사기지는 기존의 방식처럼 '국민'의 당위·의무·역할의 맥락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었다. 이는 군사적 폭력이 '적의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작동되는 한국 국방의 변화된 구조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폭력은 "~이 아닌 군대"라는 언설을 통해 부정되고, 주민들의 필요는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때문에 주민들 역시 보편과 원칙을 말하는 평화담론 보다는, 가장 지역화된(localized) 언어로 말하는 군사기지 건설 담론을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2) '바당'마을 주민들이 국가·국방부·제주도청과 대면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군사기지 담론에 전제되어 있거나 그 담론이 작동되는 효과로서의 폭력을 감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군사적 폭력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하거나, '바당'마을에 대한 주도권을 전도시키거나, 주민 자신을 대상화(objectification)하는 폭력으로서 주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다.

3)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제주도 '바당'마을 주민들은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주민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부정 혹은 극복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소속양식과, 삶의 장소성(placeness)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축된 '주민됨'의 자리는 폭력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좀 더 나은 삶'으로서 다시 기획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군사적 폭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성과, 평화라는 것 역시 주민들에게 내재(內在)된 것이 아니라 인식과 발견의 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바당'마을에서 군인들이 말하는 "지금의 군대는 옛날하고는 다르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현재 작동되고 있는 폭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바당'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옛날"의 폭력과는 다르다. 때문에 "옛날"에 일어난 폭력이 복제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폭력은 새롭게 드러나고 인식된다. 폭력은 특정한 시·공간에 따라 상황적으로(situationally)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이곳'에서 작동되는 폭력에 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체와 땅-바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인식되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본 논문에서 평화만들기(peace-making)의 정치학으로 의미화하였다.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군사기지(military base) 건설 예정지인 제주도 '바당'마을¹⁾ 주민들의 군사기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과정을 통해, 군사적 폭력이 형성·작동되는 과정에 대해 질문하면서 평화는 지키는 것(keeping)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것(making)의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바당'마을은 2007년 국방부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바당'마을은 2007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비율 56%로 제주도 내 다른 마을들보다 높은 찬성비율을 보여 기지 건설 '적정지'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주민들의 투표 결과 70% 이상의 반대로 '바당'마을회 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내걸었으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지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같은 '바당'마을 주민들의 시간에 따른 입장의 변화에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조건들이 이들의 견해를 바뀌게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근대 국민국가에서의 군사기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상징되는,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었다(Foucault, 1994). 군에서 제대하는 것이 "'사회'로 복귀한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군이 '사회' 밖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이다. 군사기지는 대표적으로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지대로서, 영토적 법칙 밖의 영토였다. 때문에 군사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와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저발전·환경오염·군인들의 폭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국가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누적된 경험들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군사기지는 대표적인 '혐오시

※ 본 연구는 다음세대재단의 '2008 문화다양성기금 석사논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연구조사를 후원해 준 다음세대재단(Daum foundation)에 감사드린다.

1) 본 연구는 마을을 알아 볼 수 있는 모든 명칭을 가명으로 하거나 무기명으로 기재한다. '바당'은 바다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며, 이 마을이 해안가 마을임에 주목해 '바당'마을이라는 가명으로 설정하였다. '바당'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글로벌사회로 편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의 군사적 폭력은 무엇이 폭력인지도 구분할 수 없게 되거나(폭력의 비가시화),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나 폭력의 대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폭력의 경제화). 최근의 한국군은 이제 내부를 희생시키면서 무력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히려 무력증강이 국민 내부를 살찌우는 방식의 (소)제국주의적 구조로 바뀌고 있다.²⁾ 때문에 기지건설론이 국가 외부로 향해서는 안보적 필요성의 강화와 군사력 확장이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기지로 인한 피해보다는 경제적 효과와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 중심의 담론이 형성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군사기지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고 있다. 군사적 동원의 논리가 포함과 배제의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³⁾

이때부터 '국익'이라는 언설은 국가적 위상이나 대외신인도와 같은 추상적 지표를 염두에 둔 '국민'으로서의 발화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개인' 혹은 '직원'의 이해관계에 따르게 된다. 이제 군사적 폭력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로가 되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군사기지가 이렇게 지역 발전의 촉매로 제기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주체적으로 기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틀(frame)과 질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을까? 안보문제

2)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이 이를 뒷받침 하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베트남 전시의 파병은 용병적 성격이 강했던데 반해, 이라크로의 파병은 '방위산업 강화'라는 한국경제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부의 결정이었다(우석훈, 2008a). 이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주목할 만한데,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그 정권이 추진하는 파병의 '국익론'에는 50% 이상 찬성하는 여론으로 인해 시민사회가 말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곤혹을 겪기도 하였다.

3) 전쟁이 삶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창조하는 규율이 되고 있는 징후는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특히 전투부대의 기동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효율화 방안은 군이 전투 이외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아웃소싱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피터 W. 싱어, 2005; 켄 실버스타인, 2007). 이렇게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민-군은 점점 더 긴밀함을 높여 가고 있고, 이는 군대를 안보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탱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주한 미군기지 이전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 추진과 한국군의 자체적인 부대감축으로 인해 군사기지의 민수(civil use)전환 전략은 필연적인 것으로 합의되고 있으며, 이것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의 논의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필중·장현주, 2007).

는 영토적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당위와 방법의 문제이지만, 기지가 들어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효용성(경제적 가치)과 주민동의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된다. 이는 기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쓸모를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대상, 한계에 대한 논쟁이자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住民)들의 삶의 양식과의 경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사기지는 국가의 행정기관이 있는 도심에서 멀수록, 외질수록 '최적지'가 되기 때문에,⁴⁾ 이 문제를 땅을 기반으로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사는 곳과 삶의 방식이 자기(self)를 주조(鑄造)하는 주민의 사고방식은 군사기지의 문제를 구체적인 장소성(placeness)과 연결시켜 논의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때의 장소성이란 '주민'들이 '지금-여기'에서 살고 있는 일상적 삶의 방식과 그 삶을 형성하는 논리에 주목하고자 하는 사유방식이다(김은실, 2004; Dirlik, 1999;2005; Escobar, 1999).

'바당'마을 주민들은 "잘 몰라서 찬성하게 되었주"라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잘 안다', '모른다'는 언어는 말하자면 '잘 알게 된' 현재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언어이다. 본 논문은 '잘 몰랐던' 그때의 주민들의 선택과 그것의 의미, 또 '모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군사적 폭력의 변화된 양상, 그리고 점차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시야에 포착되는 군사적 폭력의 형태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폭력의 현장성과 이를 목격하는 주민들의 시선을 통해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진행된 제주도 해군기지과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⁵⁾ 가장 크게는 ①기지 건설론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군사기지를 경제적으로 치환가능한 시설로 바라보며 기지건설이 '바당'마을을 포함해서 '저발전'된 제주도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사고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립하는 견해로는 ②수난과 피해로서의 제주의 역사성 속에서 군사기지 건설의 부당

4) 이를 반영하듯, 군사기지의 증설이나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적인 구호로서 "기지를 청와대 옆으로"가 등장하게 된 것도 항상 가장 소외된 지역에 위험한 시설을 '떠넘기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5) 실질적으로는 군사기지 건설의 당위를 국가안보 입장에서 제기하는 국방부의 입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의 담론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질 못하고 경제주의적 입장만을 부각시켜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함을 드러내는 입장이 있다.⁶⁾ 그리고 ③'바당'마을과 제주의 '천연'환경의 훼손을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모든 발전시설이든 군사시설이든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생태주의적 입장⁷⁾이 있다. 이 세 가지 담론들이 '바당'마을 수용에서부터 건설단계에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겹쳐지거나 경합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발전론자들은 '바당'마을과 제주도의 낙후성을 근거로 '미래'를 부여하고, 평화론자들은 피해 입은 역사의 단선적인(linear) '과거'를 통해 주민들의 현재를 규정하며, 생태론자들은 주민들을 자연환경과 동일시하며 이들의 물질적 관계와 역사성을 탈각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의 기저에는 주민들이 땅-바다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때의 관계란 완전히 경제적으로 교환가능한 대상으로서 말해지거나, 땅과는 분리된 역사 속의 존재로서 인식되거나, 아예 땅-바다와 같은 존재로서 동일화 된다.

이들 담론들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의 의미를 원칙·지향·당위·규범이라는 보편의 지위를 가지고 주민들을 향해, 혹은 그들을 대신하여 말해지게 된다. 동시에 이들은 군사기지 건설론에 대해 각각 찬성-반대라는 폐쇄된 영역을 구축한다. 즉 기지에 '찬성'하는 것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 vs. 마을을 팔아먹는 것"이고, '반대'는 "평화를 원하는 것 vs. 현실을 모르는 것"으로서 각각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언어 속에서는 주민들이 '발전'을 원하지만 또 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거나 이해될 수 없는 것, 즉 정치적 돌출일 뿐이었다. 특히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피해와 저항 중심의 서술은, 주민들이 무언가가 결핍(lack)되어 있고 그것에 저항하는 때에만 말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은 무수한 말들은 말해질 공간을 잃게 된다. 이는 군사적 폭력이 "~이 아님"이라는 식의, 폭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마을에 정착되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욕망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가로막는 사유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을 해석함 있어서 "억압 → 피해의 경험 → 정치적 주체화 ↔ 저항"으로 이어지는 담론적 구조⁸⁾는 생산되면 될수록 주민들이 오히려 고립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억압과 피해의 경험이라는 물적 조건으로부터 주민 정체성이

6) 고유기(2004; 2007; 2008), 김동주(2008a, 2008b), 양길현(2004; 2007), 이시우(2008), 구갑우(2007), 조성윤(2008).

7) 윤용택(2007), 제주환경운동연합(2008). 특히 생태주의적 접근방식은 가장 규범화되기 쉬운데, 현상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관계없이 답은 '이미-항상' 정해져 있는 담론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태주의적 접근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지속적인 호응을 얻긴 힘든 측면이 있다.

부여되기 때문에 저항은 1차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타자의 몫이고, 그래서 이는 고통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위계화 되어 배치된다. 때문에 경험은 독점되고 경험에 기반한 저항 역시 타자에게 떠넘겨진다. 이로 인해 주민이란 항상 문제해결의 '대상'("고통받는 주민")이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진정한 평화")이었지, 질문 자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장(場)을 바꾸는 존재로 가시화된 적은 거의 없다.

이것은 폭력-평화, 국가-주민, 인간(문명)-자연, 서울-지방의 이분법을 위계적으로 대립시키면서 전자에 의해 후자가 정의(definition)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유방식이다. 그리고 후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평화, 주민, 자연, 지방 등의 범주는 언제든지 치환가능한 것으로 위치지워진다. 바로 이러한 논리구조를 통해 "군사기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과 주민을 파괴하는 악(惡)"이라는 담론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평화'란 주민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것을 잃었다는 맥락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keeping)으로 의미화 되며, 이때의 평화는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기 위해 질문해야 할 것은, "주민이 어떠한 존재이며, 마을이 얼마나 평화로운 공간이었나"가 아니라⁸⁾, 그러한 주민의 존재와 '바당'마을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이다. 즉, '바당'마을의 '주민'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제주도민의 문화와 역사를 정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라는 것, 그 속에서의 '제주도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바당"마을 주민'에 대한 질문은 곧 마을 밖 '우리'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또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정의해가는 폭력과 평화의 개념은 평화와 폭력이 마치 선-악 구도처럼 여겨지는 기존의 이분법적 범주를 해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군사기지를 욕망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기지 반대'를 외치는 시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이라는 주민들의 일관된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의 경험에 따라 변화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적 준거인 땅-바다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사

8) 다음과 같은 논문들에서 '주민'은 국가와의 관계와 이에 대한 저항에 의해 정체성이 '부여'되고 있다. 이미숙, 2006; 황금희, 1999; 김혜진, 2007; 박종배, 1994; 최용환, 1997; 박미옥, 1999; 서정무, 1996; 고길섣, 2003; 이영민·허남혁, 2001.

9) "주민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은 주체의 지식생산을 위해 토착민을 타자화하며 '관찰' 하였던 서구의 초기 인류학적 시선과도 겹친다.

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국가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민들은 '제대로 된 국가'를 요구하고 그 국가와 마을에 대한 성원권('주민됨'의 권리)의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을 막혀있는 모순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peace-making) 가능성으로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당'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원이 되게 되었던 그 전도(顛倒)된 기원의 현장성을 포착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목소리들을 의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은실, 2008:157).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의 근거를 근원(아래)도 배후(뒤)도 초월(위)도 아닌, 현재적 삶의 구체적인 장소(place)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논리와 이와 부딪히는 주민들의 삶의 논리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혐오시설'로서의 군사기지는 무엇을 통해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는가? 그리고 이는 제주도의 어떠한 필요를 충족시키는가? 이를 통해 기존의 군사적 폭력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가?
2. "과거와는 다른 기지"를 강조함으로써 부정되었던 군사적 폭력은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과 계기로 새로이 인식되는가? 이때, 주민들에게 군사기지를 비롯한 군사적 폭력은 어떤 의미로서 재정의 되는가?
3. 군사적 폭력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서 마을 주민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는가?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것은 마을 밖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것(peace-making)의 의미는 무엇인가?

B.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은 현지조사(fieldwork)와 심층면접, 그리고 참여관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현지조사는 연구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의 적극적 개입이 전제되는 방법이다(Reinhartz, 1991). 이러한 방법은 군사기지 건설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바당'마을 주민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군사기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이는 군사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담론들을 주민들의 삶 속에서 맥락화(contextualization) 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지역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행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경험들을 의미화하려는 것이다.

민족지적 방법론에서의 핵심은 '연구대상(타자)과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통해 비롯된다. 원래 문화번역은 최대한 면밀하게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각과 의식을 연구한 다음, 다른 문화의 이국적 개념을 서구 문화 안에서 등가의 개념으로 옮기는 것을 뜻했다(테이비스, 2005:147). 하지만 이는 타자의 차이를 '이국적(exotic)'이라는 수식어로서 본질화함으로써 타자와의 위계를 재생산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문화(異文化)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타자는 '저기 바깥'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그 문화는 시간과 역사적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 정지된 상태로 보여졌다. 이는 문화 횡단에 필수적인 문화들의 동시대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자의 문화를 불변하는 실체로 보는 '물시간성의 환상'이라는 인류학적 수사학은 결국 '문명적 격차'를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Fabian, 1983:32-8).

때문에, 제주도 '바당'마을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3의 영역으로서의 문화번역(translation of cultures)의 방법론을 차용하고자 한다. 문화번역이란 번역을 단순히 언어와 언어만이 아니라 매체와 매체, 문화와 문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의 과정으로 그 지평을 넓힌 것이다(로잘도, 2000). 또한 번역이라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위라는 점에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읽고', 그것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수행성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미, 2001:136).

이는 연구자는 입장을 가진 주체(positioned subject)로서, '바당'마을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위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한 일련의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연구하는 과정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연구대상으로부터 변형된 자신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또한 연구자가 주민들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자 자체가 주민들과 공재(共在)한다는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연구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주민-되기'를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얻어질 수 있었다. 민족지는 대화로서 구축되는 것(클리포드: 2000:194)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시간대를 주민들과 맞춤으로써, 그때 발생하는 정치적 긴장, 충격, 새로이 알게 되는 사실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변형된 연구자의 몸(body)이 곧 논문의 내용(body)으로 구성된 것이기도 하다.

2. 연구과정

2-1. 주민-되기의 과정

페미니스트 연구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역동적 만남, 연구자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개방과 성찰, 연구자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더 나아가 연구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조순경, 1992:88). 연구를 준비하면서 이 마을에 대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연구자의 생활·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주민들의 입장에 비추어서 상대화하는 과정이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내내 연구자 자신의 위치를 비교-폐(포)기-재구성의 과정들¹⁰⁾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두 가지의 물음과 변화로 정리해 볼 수 있다.

2-1-1. '풍경'으로서의 주민과 구체적 '관계'로서의 주민

연구자의 '외부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마을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규

10) 인류학에서는 이를 자신이 속했던 문화에서의 분리(separation) -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liminal) - 다시 자신의 문화로 돌아오기(reincorporation)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조사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의레이다(윌렉스, 2004:28).

범의 틀 밖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마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이 되기도 하였다. 초창기 연구자에게 연구대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주사람'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특히 심적으로 인터뷰하기에 힘든 군인과 나이 많은 어른들을 상대할 때에는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연구대상자들은 먼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궁금해 하거나 경계하였고, 기본적으로 외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개인의 입장보다는 '바당'마을의 역사, 기지 반대운동의 역사 등의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초창기에 연구자는 찬성-반대측을 모두 인터뷰 하기 위해 그 경계에 서 있고자 했었지만, 주민들 모두가 찬성과 반대를 이분표처럼 달게 된 상황에서의 경계란 어디에도 없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 집은 아들은 반대고 어머는 해녀라 찬성이었는디 다시 돌아왔어. 그 처음에는
[양쪽 사이에서] 고생을 좀 해주게. <사례 14>

여기는 반대 슈퍼이고 저기는 찬성 슈퍼예요. 저기에 가시면 안돼요. <사례 E>

마을에서는 <사례 14>와 <사례 E>의 이야기처럼 "해군기지 문제를 빼놓고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주민들 모두가 이 사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어느 한 쪽에 소속되어서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는 것이 관계맺기의 출발지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였고, 이후에는 '바당'마을회에서 결성한 기지건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다.

연구자가 마을에 머물 당시 반대 입장을 가진 주민 전체가 모이는 회의가 1주일에 2~3차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연구자는 그 회의를 기록하는 일을 맡으면서 마을 내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연구자의 연락처가 '바당'마을회의 '부녀부'에 등록되어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회의와 각종 행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을회관에 모이는 등, 주민들의 생활패턴에 거의 함께 하면서 연구자와 주민들간의 시간대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외부자'의 위치에서 바라볼 때 마을은 따뜻하고 멋진 '풍경'이었지만 주민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난 후에는 이것이 '외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마을과 자연환경이 관계의 자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곳은 투쟁의 장소이자, 벗어나고 싶은 곳이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이따금씩 육지에서 내려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런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에 살아서 좋으시겠네요" 였다.¹¹⁾ 이때 연구자는 "아, 그렇죠"라고 대답하면서 새삼스럽게 마을을 '다시' 보게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멈칫하기도 했다.¹²⁾ '멋진 풍경'과 '따뜻하고 인정 많은' 주민의 이미지는 연구자 자신이 이 마

11) 제주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공기가 좋다'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옳은 듯 하지만, 이 말이 발화되는 방향과 내용의 실상은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발화주체의 입장을 마치 말해지는 상대(제주도민)의 입장인 듯 치환시키는 행위이다. 공기는 말 그대로 공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그 공기의 흐름이 바뀔을 인지하는 때, 즉 공향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만 의미를 가지는 한정적인 언어이다. 즉, 이는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감각이 아니라, 서울과의 대비 속에서 이동하는 사람이 감지하는 감각인 것이다. 때문에 이 말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썰음으로 여겨지는 말이지만, 이 모두 제주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대상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는 어린이 아토피 유병률이 전국(2.44%)에서 가장 높은 지역(3.23%)이기도 하다(제민일보, 2008년 1월 30일).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환경은 '공기 좋은 곳'으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A: 나도 사진 좀 찍어주쇼! 난 사람 아니요?

B: 그러지마라, 신혼여행 온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 심어준다.

이 대화는 어느 주점에서 운전기사가 신혼부부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자 이를 목격한 제주도민인 A와 B의 반응이다. 이는 제주도를 관광지로서만 인식하는 육지사람들에 대한, 제주도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감정과, 관광지로서 제주의 자기 재현(self-representation)과의 경합이라 볼 수 있다(유철인, 1984:128~131). 이 낯선 이의 존재 때문에 자신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분노로 자신의 현존을 주장하는 것과, 이들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겹쳐지는 것이다. 이 텍스트의 쓰여진 시기가 80년대임을 감안할 때, 현재는 관광지로서의 제주도,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자신이 보여지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거주하는 사람과 방문하는 사람이 만나는 순간에 벌어지는 입장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2) 이런 '멈춤'의 시간은 제주에 내려온 '외지인'들과 대화할 때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일방적인 관점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에 대한 경계, 또 서울서만 거주했던 연구자가 이렇게 반응하기까지 연구자 자신의

을에서 살고 마을 주민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의미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2-1-2. 어떠한 위치에서 '주민'과 소통할 것인가

마을에서 어떠한 '주민'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는 누구와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는 마을 내의 주요한 권력관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 역시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수행적 주체(performative subject)로서 관계맺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먼저 대립하고 있었던 現 마을회장과 前 마을회장을 차례로 만나서 마을의 전반적인 상황을 들었다. 이들은 마을의 찬성과 반대의 대표였으므로 연구자가 이들을 만날 때에는 '서울'에서의 경험과 자원을 가진,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체로서 연구자 자신을 위치지었다.

이를 시작으로 점차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는데, '바당'마을은 제주도 여느 마을과도 비슷하게 성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마을이어서 찬성측과 반대측을 막론하고 담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남성주민들이었다. 때문에 연구자는 상대적으로 남성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그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임'을 지우고 해군기지라는 정치적 사안을 주민들과 토론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한편, 표면적으로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여성주민들은 부녀회, 해녀회, 계모임 등의 공·사적인 모임과 여성들만의 노동과정을 통해 형성된 여성주민들만의 네트워크에 의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마을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마을에서의 생활이 조금 익숙해질 때 즈음에야 여성주민들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성주민들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자는 '여성임'을 가시화하면서, 마을 내부의 규범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성역할을 수행하였다.

변화에 대한 놀라움 등이 한데 뒤엉킨 데서 나타난 것인 듯하다. 이러한 '발견'은 강원도가 고향인 고미숙(2001)에게서도 드러난다. ““(내 고향의 풍경에 대해) 야 너무 좋아! 어쩔 이런 데가 있더니”라는 말로 연신 감탄을 해대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문득 '풍경은 외부자에게 발견되는 것'이라는 가리타니 고진의 명제를 새삼 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말하자면, 아우라지와 어라연이라는 풍경 역시 모더니티의 표상체계 하에서 비로소 '발견된' 기호인 셈이다. 청정 지대, 아리랑의 고향이라는 근대에 반하는 이미지가 강화되면 될수록 그것들은 근대적 시각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역설의 장 속에 들어와 있다.” 고미숙(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책세상, pp.8~9.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여성주민과 소통할 수 있었다.

2-2. 지방어와 '알아듣지 못함'을 둘러싼 지역·성별 권력관계

제주어는 다른 지방어와 달리 매체에서 재현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육지'¹³⁾의 입장에서 외국어와 다를 바 없는 언어이다.¹⁴⁾ 때문에 육지사람과 제주사람의 대화에는 번역이 필수적으로 따르는데 이럴 때 제주어를 '알아듣지 못함'에 대한 권력관계가 만들어진다.

통상 어떠한 지식이란 모르는 자가 아는 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보편(서울말)'의 지식이 아닐 경우에는 '안다'라는 것 자체가 보편이 되지 못하는 결핍(lack) 혹은 도달 불가능성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알려줘야 할 책임까지 부여받게 되고, 동시에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시연'을 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¹⁵⁾

그러나 제주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어를 육지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이 내면화되어 있어서 타지방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표준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언어자(bilingualist)인 셈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주민들은 '주요 정보자'였기 때문에 언어와 관습을 모르는 것의 책임은 모두 연구자 자신에게 있었고, 때문에 현지에서 살기 시작하자마자

13) 제주인들이 제주 외 지역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본 논문에서도 특정한 지역이 아닌 제주 외 지역 일반을 가리킬 때에는 '육지'라는 제주인의 언어로 표기하였다.

14) 서울 중심의 재현물들에서 지방어는 재현과 동시에 그 지역의 특색을 타자화함으로써 일반화된다. 이를테면 한때 자주 등장했었던 조폭 영화는 대부분 '지식'과 대비되는 기표로서의 전라도어를 통해 구현되고(<목포는 항구다>, 2004, 김지훈), '억척스러운 어머니'는 톤이 높은 경상도어를 통하게 되며(<효자동 이발사>, 2004, 임찬상), '도시의 때묻음'과 대비시키면서 인물의 순수함을 강조할 때에는 ('오지' 언어로서의) 강원도어가 등장한다(<웰컴 투 동막골>, 2005, 박광현; <선생 김봉두>, 2003, 장규성).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주어는 서울의 입장에서 "혼저 읍서예"와도 같은 '관광용' 인사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제주어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한 외국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호기심어린 시선(curious gaze)'으로 종종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이 시선으로 인해 제주인들은 종종 '동물원의 원숭이'와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정희진, 2006:131).

15) 현기영(1979), 『순이삼촌』.

제주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제주어는 그 '알아들을 수 없음'의 조건 때문에, 다른 지방어 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결속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연구자가 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주어로 말하거나, 적어도 제주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제주에는 현지어를 지키고 보존하는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하고, 또 해녀를 비롯한 제주인들의 일상사를 기록하는 구술·녹취 작업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¹⁶⁾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현지 언어를 조금 더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

한편, 젠더관계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연구자와 현지어 대신 표준어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가 마을에서 거주할 때의 대내외적인 정체성은, 연구자라기보다는 (새로 진입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했다. 때문에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연구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일상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입장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젠더관계에 있는 몇몇 남성들을 대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사적화 되는 위치(마을에 대해 잘 모르는/ 비혼/ 여성)를 일정부분 교정(reform)하기 위해서 부러 (공적 위치로서의) '연구자'로서 정체화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젠더관계에 진입함으로써 서울-여성이 되기보다는, 제주의 맥락 속에서 질문하고 듣는 제주-연구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서툴게나마 제주어로 말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다보니 어떤 때는 연구자의 '엉터리(broken) 제주어'와 제주남성의 '엉터리(broken) 서울어'간의 대화가 오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¹⁷⁾

16)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제주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제주어를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제주의 속담, 설화, 역사, 문학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제주어를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한라일보> 2008년 9월 11일자 기사). 한편 제주도청 차원에서도 제주여성의 생활사에 대한 구술·녹취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2006), 『(제주여성의 생애) 살았지만 살았주』; 제주도 문화예술과·제주도지 편찬위원회(2004), 『(제주여성) 전승문화: 삶과 문화이야기』;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2004),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등.

17)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이 남성들은 '남자임'에 대한 보증(guarantee)은 서울말을 통해 구현된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정치에서 한나라당의 보증은 경상도어를 쓰는 것이고, 통합민주당의 보증은 전라도어를 '쓰지 않는 것'이다. "권력의 표준어 경상도 말", 『한겨레21』, 2008년 5월 1일, 제708호.

3.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현재 '바당'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40-80대 주민들이다. '바당'마을 주민들이 군사기지와 마을발전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갖는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를 연령, 생업형태, 보상여부, 기지건설에 대한 태도(찬성-반대) 등에 따라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조참여자는 주민 외의 관계자들로서, 관련 기관 공무원, 현역 해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조사는 '바당'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 댁에서 3개월(2008년 6월~7월, 9월~11월) 동안 거주하면서 진행되었다.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관련 NGO단체들의 행사(마을회의, 캠페인, 지역 평화축제 등)에 거의 대부분 직접 참여하면서 참여 관찰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마을에서는 현안과 관련해서 일주일에 2~3차례씩 마을 전체 대책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자는 이 회의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내부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현지조사와 참여관찰 한 내용들을 매일 기록하고 그 상황의 맥락을 있기 전에 매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2회 이상 많게는 4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초반에는 연구참여자와 이들이 마을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대체적으로는 거의 듣는 편이었고, (입장이 어떤지 먼저 알고 있었으므로) 그 입장에 반하는 이야기들은 꺼내지 않았다. 이후 후속 면접에서는 그러한 연구참여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중심으로, 현재 처한 갈등적인 상황, 경험적인 선택에 놓인 상황들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이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연구자가 마을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고 주민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부터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심층면접은 주민들이 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는 저녁시간에 마실 다니면서 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마을에 머무를 당시 지역뉴스에는 연일 "해군기지 문제"와 "4.3위원회 폐지" 관련한 기사들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같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

문헌은 그간 기지추진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 도의회 등에서 발간한 기지시찰 보고서, 활동백서, 토론회 자료집, 성명서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제주어를 배워서 대체로 제주어를 통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내용의 인용도 주민들이 쓰는 제주도 사투리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다. 대신 서울어 번역을 병기하였다.¹⁸⁾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 례	성 별	연 령	경작 형태	기지에정 지 내 땅 소유 여부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	비고 (권당관계)
1	남	57	자작	없음	찬성	기지유치위원회
2	남	49	자작	없음	찬성	기지유치위원회
3	남	52	숙박업소 운영	없음	찬성	기지유치위원회 위원장 /前 마을회장
4	여	68	자작	있음	찬성→반대	20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5	여	60	소작	없음	반대	
6	남	65	소작	있음	찬성→반대	
7	남	44	자작	없음	반대	반대대책위원회 집행국
8	남	85	자작	없음	반대	전 노인회장
9	여	62	*잠업(하군) /자작	없음	중립→반대	24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10	여	52	잠업(상군) /자작	없음	찬성	해녀회 부회장 / 22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11	남	41	자작	없음	중립→반대	
12	남	52	자작	있음	찬성→반대	전 마을감사
13	여	61	자작	없음	찬성→반대	24세 때 결혼해서 '바당'마을로 이주
14	여	62	잠업(하군) /소작	없음	찬성→반대	

18) 구술기호 표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기호와 의미

구술기호		의미
대괄호	[]	생략되거나 맥락 상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자가 삽입함
소괄호	()	제주어→서울어 번역
물결표시	~	말을 늘임
말줄임표	...	말끝을 흐리거나 잠시 말을 멈춘 상태

15	남	52	자작	없음	반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16	남	40	소작	없음	중립→반대	
17	여	52	자작	있음	중립→반대	
18	여	52	잠업(상군)	없음	찬성	해녀회 부회장
19	남	71	소작	없음	반대	
20	남	41	식당운영 /자작	없음	중립→반대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표 3> 보조참여자의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직위	비고
A	여	46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특보	여성단체 전 대표
B	남	52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공무원	서울 공공기관에서 10년 동안 근무
C	여	31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D	남	40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 회 집행위원장
E	남	37	제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F	남	24	현역 해군	'바당'마을 상주 군인

* 잠업은 해녀들이 작업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물질의 경력·실력에 따라 상군/중군/하군(하군은 주민들 사이에서 '톨파리'로 불린다)로 나뉘고, 각 군에 따른 해녀의 수도 피라미드 구조로 어느 마을이든 상군 해녀수가 제일 적다. 상군 해녀는 해녀회에서 더 큰 발언력을 갖는다.

** 연령과 직위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2008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 평화(폭력) 개념의 규범성 비판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평화는 “전쟁이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평화를 ‘not A’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유함으로써, 전쟁 개념의 잔여범주(residual)로 위치시킨다. 이 구도에서는 전쟁이나 폭력의 행위자가 평화의 상태·개념·주체·의미 등을 정의(definition)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때의 평화는 힘의 결과(부산물)로 밖에 사고되지 않는 강자의 정치학일 뿐이다. ‘not A’는 결국 ‘A’의 변주(variation)이기 때문이다. 폭력-평화를 구성하는 주체-대상의 이분법은 국가-주민, 남성-여성, 서울-지방, 인간(문명)-자연 등의, 외형은 다르나 동일한 논리구조를 통해 작동되는데, 이로 인해 전자의 항들에 의해 후자의 항들은 수동적인 상태로서 지키는 것(keeping)으로서 의미화 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평화는 오랫동안 휴전협정과도 같이 강대국 간의 관계에서 ‘배당’받는 것과 이를 독자적인 힘으로 형성하고자 했던 세력들 간의 논쟁이었다(한미동맹 vs. 민족자주). 하지만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미군일 경우 국가와 남성중심의 논의구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매개로 남성간의 힘 대결 구도를 구축하는 적대적 공모(共謀)의 방식이었고, 이러한 담론의 독점으로 인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말할 공간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정희진, 2005).

이로 인해 여성주의 평화정치학에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평화나 폭력을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특히 국가가 독점한 논의구도에 균열을 내기 위해 “여성이 먼저인가? 국가가 먼저인가?”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논쟁을 해 왔고 이를 시작으로 여성, 병역거부자, 성적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국가안보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의 안보개념에 대해 논의해 왔다(심영희, 2007; 조이여울, 2002; 강인화, 2007; 다카사토 스즈요, 2000).

하지만 민족(국가)과 여성의 범주를 구분하고 그것의 우선성을 가려내고자 하는 논의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종속적인 집단, 부차적인 국민국가의 성원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김은실, 2002:34). ‘민족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이라는 입장성을 강조하는 것은 민족(국가)와 여성을 단일하고 배타적인 범주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정치학은 민족(국가) 그 자체를 문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

성이 민족(국가)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민족(국가) 담론의 지배 하에 있는 주체의 위치를 박탈하는 망명객(exile)의 정치이다. 그렇게 망명이 가능했던 개념과 상상이 있는 주체들의 입장에서 구성된 이론인 것이다. 하지만 '성원됨'에 대한 무심한 초연은 서구 백인의 특권(브라이도티, 2004:58)일 뿐이다.¹⁹⁾

한편 평화를 이렇게 국가 간 권력의 배치도를 통해 구상하는 방식은 폭력을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사고하면서 동시에 외재화(externalization)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전시(戰時)체제는 '광기어린' 특정한 사건이 아닌 소위 평화시에 구축된 질서의 연장이라는 맥락에서, 전장(戰場)을 구성하는 일상의 폭력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졌다. 이때의 일상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개개인 안에 존재하는 폭력성에 대한 성찰적 담론들이고,²⁰⁾ 다른 하나는 전장의 논리를 뒷받침 하는 군사주의와 이것이 가능케 되는 문화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²¹⁾ 이는 국가단위를 넘어서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폭력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 이론적 틀이었고, 이를 통해 전장이라는 공간을 가능케 하는 섹슈얼리티, 집단적 혼욕체계와 이것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의 일상성과 이것을 말할 수 있게 된 '현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즉, 이러한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는 한정적인 조건으로서의 '현재'는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한 답변의 부재는 다시 두 가지 문제를 낳는데, 군사주의 비판의 핵심이었던 젠더교환과 동성사회적(homosocial) 연대에 근거한 국민적 동원/배제의 메커니즘은 이제 여성-남성의 차이보다 동성 간의 차이를 벌려놓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현재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²²⁾ 또 하나는 '과거에 왜 군사주의적 문화가 문제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방식의 연설은 이 문제제기

19) 그런 점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우리가 자신의 나라, 언어, 성, 정체성에 대해 낯선 이방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식의 늪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겠는가?"(J. Kristeva, 1986:298)라는 이 말은, 국민의 그림자가 얼마나 완전하게 망명의 상황에 드리워지는지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성급하게 망명의 즐거움을 말한 것이다(호미 바바, 2002:280).

20) 홍윤기, 2006; 김정수, 2005.

21) 권인숙, 2005; 김숙임, 2003; 오미영, 2001;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2003.

22) 그런 의미에서 군대 내에서의 여성 비율이 증가되는 문제나 군 시설이 경제시설화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를 군 이미지의 '감성적인 조작'(김엘리, 2007), 혹은 '착각'(신시아 인로, 2003)으로 보는 입장은 젠더관계를 절대화함으로써 군의 변화된 권력 형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가 가능하게 된 '현재'를 '암울했던 과거'와 대비해서 더 좋은 것, 혹은 더 자유로워진 것으로 재현하는 암묵적 긍정의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진보적 역사관은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보지 못하게 한다.²³⁾ 마찬가지로 평화를 사유함에 있어서 구조적 분석없이 '마음'의 문제나 갈등해결에 중점을 두는 방식은 평화를 현상유지(status quo) 또는 안정(stability)과 등치하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²⁴⁾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폭력과 평화를 결정짓는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두고 평화롭지 않은 주체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거나,²⁵⁾ 아니면 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폭력-평화의 이분화된 구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특히 글로벌 군사주의의 사회에서 폭력은 끊임없이 비가시화·경제화된 언설로 작동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폭력과 평화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폭력이고 평화인가, 그리고 이를 한정짓는 관점에서의 맥락성·역사성·위치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규범적 의미로서의 평화는 탈정치화됨과 동시에 약자에게 군림하는 이념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작동되는 폭력을 특정한 주체들이 인식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평화 만들기의 정치학(peace-making politics)으로 명명하며, 이를 '바당'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3) 이는 탈근대 자본주의 하에서 '자기(self)'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물음이다. 그때의 '개인'은 집단적 훈육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게 아니라 자기계발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학교, 군대, 공장과도 같은 근대적 훈육 시스템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소비를 통한 새로운 '자기 형성(self-formation)'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서동진, 2005; 2009). 기존의 논의들이 정상적이고 훌륭한 노동자-국민의 자리가 군대를 매개로 한 남성연대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했다면(김현영, 2002),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개인들로 이미 대체된 그 자리에 대한 여성주의의 물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4)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의 회귀는 중산층의 담론으로 소비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갈등해결로서의 '평화'와 날로 번창하는 마음산업(mental business)이 공모하게 되는 것이다.

25) '인간안보' 개념은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로, 여성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개인안보, 환경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 등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전염병(이상환, 2008), 북한 이주민(이신화, 2001)등에 대해서도 안보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B. 지구화 시대, 분석범주로서의 장소성(placeness)

땅-바다를 근간으로 살기 때문에 망명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살길 원하는 '바다'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화시대 로컬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반해 새로이 제기되는 장소성(placeness)의 개념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구화 논의에서 글로벌(global)이 핵심이 되면서 로컬(local)은 글로벌에 종속되거나 혹은 지구화에 저항함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진 영토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논의로 간주되었다. 지구화 논의에서 항상 로컬의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장소나 특정 현지에 기반한 경험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로컬은 항상 글로벌과의 상대성 속에 위치지어지고 논의된다(김은실, 2004:14). 이런 맥락에서 로컬은 항상 글로벌을 말하기 위한 '사례' 혹은 '원재료'일 뿐이었다(버틀러, 2008:156; 모리스-스즈키, 2006:49).

특히 여행, 탈구(dislocation), 디아스포라 등의 '이동'에 대한 많은 담론들 탈영토화된 정체성 속에서 장소성(placeness)을 분리시킨다. 이는 글로벌의 권력구조가 가정되고 자연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소(place)의 체화되고 경험적인 의미와는 반대로 서구이론에서의 지식을 추상화하는 특권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글로벌과 로컬,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언어는 병렬의 모호함으로 종종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런 혼용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데, 왜냐하면 지구화에 대한 바로 그러한 개념화는 일종의 공간없음(spaceless)과 시간없음(timeless)의 작동이 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념으로서는 비어있으면서도,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보편주의를 생산한다.

이렇게 글로벌 담론이 로컬을 전유하는 것은 계급, 젠더, 인종과도 같은 분석의 개념 속에서 장소(place)에 대한 무시/경시가 그러한 헤게모니 장치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소란, 위로부터의 규정이거나 자본, 민족-국가, 지배관계에서의 위치가 없는 추상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조직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place)를 말하는 것은 지역을 새로운 전지구적 가상이나 초민족적 가상에 대항하도록 하고, 비역사적인 발전지상주의와 무지역적(placeless) 공간에 대한 물신주의에 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Dirlik, 2005:370~432; 1999:20~22).

또 장소에 기반한다(place-based)는 것은 그 장소의 구성원들 내부에 존재하고 외부와의 관계에서도 존재하는 열린 경계에 근거한다는 의미이다. 즉 인식이 일어

나는 것은 '바당'마을이지만, 이 '바당'마을은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의 되는 열린 공간이다.

인식은 항상 구체적인 장소에 기반해서(place-based)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being), 행동하는 것(doing), 그리고 지식들을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 이론화되어야 한다(Maturana and Varela, 1987:25). 따라서 '바당'마을의 주민으로서 행동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은 자연-문화, 공간-장소, 이론-실천의 비대칭성과 이중성을 급진적으로 문제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제공해준다(Escobar, 1999:205). 또 이를 통해, 로컬을 돌보고 이 공간에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글로벌의 엄청난 아이디어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도달하며 이것이 권력의 불안정한 테크놀로지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해진다(Jacob, 1996:158).

C. 제주도, 자연(몸)의 이미지와 시선의 정치

'바당'마을의 주민은 외부자들에 의해 종종 마을의 자연 자체와 동일시된다. 이는 주민과 자연은 정의(definition)의 주체가 아니라 정의되는(defined)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주민을 정치와 역사와 무관한 존재로, 자연화 하는 사유방식의 문제는 여성학에서 섹스-젠더의 이분법이 구성된 방식과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섹스-젠더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는 어떤 방식으로 고착되었고, 후에 그 경계가 내파(內波)되게 되었는지를 짚어봄으로써 이 이분법적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질로서의 섹스, 혹은 문화적 의미화 도구로서의 섹스 개념은 담론적인 구성물이라면 이는 자연-문화 구분의 당연한 토대이자 그 구분이 지탱하는 지배 전략으로 작동한다. 문화와 자연 사이의 이분법적 관계는 위계를 생산한다. 그 관계 안에서 문화는 자유롭게 자연의 의미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지배 모델의 의미구조와 기표의 이상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연을 자신의 무한한 용도에 맞게 전유되는 '타자'로 해석한다. 자연을 유일하고 담론 이전(pre-discourse)에 오는 것으로 가정하는 분석방식은, 주어진 문화적 맥락 안에서 '무엇이 자연의 자격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목적에서인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다(버틀러, 2008:157-8). 즉, 자연이 자연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자연과 젠더는 종종 동일한 은유로서 차용되면서, 여성이 자연화되고 자연 역시 여성화되는 것이다.²⁶⁾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남성주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함'에 대한 죄의식과 슬픔(우울)을 곧잘 토로하기도 한다.²⁷⁾

그런데, 특히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이분법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시선의 정치에 따른 사유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자연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는 주체(the seeing subject)의 인식이 더 강하게, 큰 '무리없이'(대상과의 갈등없이) 작동되게 된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자연환경은 국내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외관으로 인해 그 빼어남이 자주 인용되곤 하는데, 이 '독특함'은 제주도를 종종 구체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정서적인 관광주의적 시선으로서 해석되고 정의되게끔 한다.

26) 제주도의 작은 섬 우도(비양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깃>(송일곤, 2005)은 이러한 젠더와 자연의 관계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우도에 오게 된 a)30대 중반의 b)남성과 이 섬 안에 있는 모텔을 지키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는 a')20대 초반의 b')여성이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남성은 c)80년 광주의 시나리오를 쓰다가 d)지친 마음을 쉬기 위해 이 섬을 찾았고, 우도의 c')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여성은 그 남성의 d')마음에 위로가 되면서 이들의 관계 또한 깊어지게 된다. 나이 많음-적음/ 남성-여성/ 역사-자연/ (공적영역에서의)피로함-(사적영역에서의) 휴식 등으로 구획된 이 요소들은 전자가 후자를 잔여범주(residual)로서 구성하며 유지된다. 이러한 관계를 정의할 권한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떠나는 자인 남성에게 있고, 이 남성으로 인해 잔여범주들은 모두 동일화되는 방식으로 영화 안에서 배치된다(여성=자연=섬·휴식).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자가 후자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성립되는 관계라는 것을 은폐한다(실제로 이 남성이 나중에 이 여성과의 재회를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 왔을 때에는, 안 풀리던 그 5.18 관련 시나리오가 술술 풀리게 되는 시퀀스가 등장한다).

27) 2003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남성 작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애도하는 시들이 이와 같은 자연-여성의 은유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만금을 "만금이"라고 호명하며 애달파 하는 남성지식인들의 태도는, 지켜야 할 대상(자연-여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신의 나르시시즘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애도인 것이다.

이하석(2003), <만금이년 젓먹자> "우리 만금이 늘 새롭다고 새만금이/ 현 것 그대로가 새 것인 새만금이/ (중략) 젓 먹어라/ 우리 찾아가는 三步一拜 길에/ 무릎 까져 흐르는 고통의 피가/ 온몸 흐르는 땀방울 방울 방울이/ 다 젓이다/ 이 길 막는 이들/ 새 것만 우기며 만금이 겁탈하고 죽이는 이/ 젓 못 얻어먹으리라/ (중략) 만금이년 살려 젓 얻어먹자/ 많이 먹고 억만년을 또 드넓게 크자"; 김정환(2003) <인간의 과거와 전망 -갯벌 새만금을 위하여>, "역사 따지는 사람 턱없다 그곳에는/ 농게 참게 노랑조개 모시조개도 있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수천만년의 광경이 있다/ 질퍽하고 짭조름한 대지의 자궁이/ 인간 너머로 거대하게 아름다워지는 과정".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 hanjak.or.kr 참조.

하지만 보는 주체의 시선은 투명한, 보편적 주체로 기원화(originated)되기 때문에, 제주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해석되는 대상으로서만 위계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대상이 대상으로서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즉, 마을주민들과 땅-바다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화 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항상 '자연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언제나 임의적·문화적 구성물이다(해러웨이, 2002:230). 이는 자연이 교환가치를 지니는 자원(나무는 목재, 강은 운하, 갯벌은 용지(用地)가 되듯)이 되기도 하고, 자연재해와도 같이 삶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힘이기도 하며, 반대로 향유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함을 일컫는 말이다. 때문에 자연(自然)은 이름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의미, 용도, 가치가 달라지는 담론의 산물이다.

III. '바당'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

본 연구에서 '바당'마을은 주요한 분석단위이자 연구참여자들(주민)이 생활하고 노동하는 장소(place)이다. 따라서 이 마을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존재로서의 '주민'을 맥락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바당'마을의 특정한 조건과 상황들은 향후 군사기지 건설 담론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됨과 동시에 군사기지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게 되는 주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A.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마을"

'바당'마을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해안가 마을로서, 2008년 현재 주민이 1,900여 명(약 660여 가구) 정도 되는 비교적 큰 마을이다. 세종 21년(1439년)에 군사방어시설인 동해방호소가 설치되면서 그 주위에 촌락이 형성되어 마을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제주도는 1914년까지 전라남도의 관할 하에 있는 일개 군(郡)이었다가 광복 직후인 1946년에 독립 도제(都制)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濟州道)로 승격되었다. 이때 '바당'마을은 남제주군 '바당'리였다가 1981년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 '바당'동이 되었다. 주민들은 1950년대 초 까지 비교적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면서 마을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져 현재와 같은 형태의 마을이 형성되었다.²⁸⁾

'바당'마을 앞 바다의 ○섬²⁹⁾ 주변 해역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가 있고,

28) 윤경노(2001), 『향토 '바당'(개정증보판)』, 디딤돌.

29) ○섬은 고려시대 원과의 싸움에서 최후 격전지이기도 하다. 고려 말 원명교체기에 '반(反)원 자주정책'을 펼쳤던 공민왕은 원으로부터 제주를 탈환하기 위해 몇 차례 군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 목마장에서 말을 키우던 원의 목호(목마장에서 말을 키우는 자)들이 워낙 강경해서 거듭 실패로 끝났다. 그러던 중 공민왕 23년(1374년)에 명에서는 탐라에 있는 말 2천 필을 요구했고, 고려 조정이 이를 집행하려하자 목호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고려 장군 최영이 고려 조정으로부터 목호토벌의 명을 받고 2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제주 해안에 상륙하려 하자, 목호의 기병 3천여 명이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강하게 저항했다.

그밖에도 산호류·분홍맨드라미류·해조류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어서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채진영, 2008). 또, '바당'마을은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마을 내에 있는 '바당'천은 1급수로 서귀포의 식수원이 되고 있고, 은어 산란지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원앙들이 살고 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을 청년들은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환경보호활동을 펼쳐왔고, 그로 인해 2005년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바 있을 정도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이다.³⁰⁾

이런 자연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마을"이라고 곧잘 소개하였는데, 이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임과 동시에 개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조적(自嘲的)인 표현이기도 하다. '바당'의 물이 많고 맑은 것이 마을의 자랑이자 상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지역이 유원지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당'이라는 동네가요 서귀포지역에서도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유원지 지구로 묶여 있어요, 일부가. 근데 유원지 지구는 토지주들이 마음대로 개

고려 관군과 목호군(목호군의 대부분은 제주인)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한 달간 지속되었다. "칼과 방패가 바다를 덮었고 땅과 뇌가 땅을 가렸다"던 이 싸움은 처음에는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다 결국 관군이 승기를 잡게 되었다. 싸움에서 밀린 목호들은 최후의 퇴각지로 ○섬을 선택하였고, 목호 장수들이 스스로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이 항복하여 목호의 난은 평정이 되었는데, 이로서 제주에 대한 원의 100년 지배는 끝이 났다.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이와 관련해서, 제주 역사를 중앙 중심의 국사(國史)가 아니라 변방의 시선으로 다시쓰기를 한 이영권(2004)은 당시 제주인과 고려인들 사이에 강력한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원의 목호들과 제주인들 사이에 100년간 이어진 연결고리가 제주인들로 하여금 목호들에게 더 강한 유대의식을 갖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이 목호의 난을 두고, 중앙의 관점에서 보면 조국 땅에서 외세를 몰아낸 '자주성의 상징'으로 볼지 몰라도, 제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4·3이전에 외지 권력(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에 의해 저질러진 제주인에 대한 최대의 희생 사건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30) 생물 다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중 경관이 가장 뛰어난 곳이어서 수중관광의 메카로 알려진 곳이다. 한국의 해양 생물이 약 5,000여종이라고 가정할 경우, 제주도 해양 생물종은 2,0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해양 생물종의 50%정도가 제주 해역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50% 정도가 제주 지역에만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2002), 『제주도 문섬 주변 해양생태계 보전 방안 연구』.

발을 못해요. 그래서 하는게 뭐 비닐하우스 하고 이런 건데, 그게 한 15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2007년] 초에 도시계획 공청회에서 서귀포에서 제가 토론자로 갔었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바당' 사람들이었다고요. 전부 [규제를] 풀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사례 D>

또한 제주도 해안가 마을은 대부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해안도로에서 빗겨 있는 지역이어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³¹⁾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제주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욕망이 큰 편이다. 예를 들어, 마을 내에 하나 있는 □□콘도가 들어올 때(1998년)와 골프장 건설이 거론되었을 때(2003년), 이 시설의 허가여부를 두고 마을 내에서 큰 논쟁이 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콘도는 주민들에게 복지지원을 하는 대가로 허가되었다. 반면에, 골프장은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보호 때문이라기보다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 계획되었던 해안도로 건설이 무산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연구자> 2003년에 골프장 반대운동 하셨잖아요. 해녀분들이 거의 다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31) '바당'마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볼거리'라는 것은 접근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이는 연구대상으로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당' 유원지는 서귀포 주민들에게는 '여름의 피서지'로 꽤 유명하지만, 그밖의 관광지역이나 연구대상 지역으로는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은, 전혀 언급의 대상조차 되지 않은 마을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제주도 관련 관광서적과 제주도 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들을 대부분 검토해 보았는데,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다(아주 최근인 2009년 3월에 '제주올레'가 이 마을을 지나는 7코스를 개장한 정도가 전부다).

한편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제주도의 구체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4.3과 관련한 연구인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중산간 지역이 주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이정주, 1999;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1998). 다른 하나는 관광산업에 관련된 연구인데, 전술한 대로 관광지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신시가지나 해안도로 주변지역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강경숙, 2009; 진현영, 2007; 송경언, 2006, 2002). 이러한 경향들은 '바당'마을이 지도에는 존재하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음으로써 마치 '없는 대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효과를 만들었고,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소외감의 일정부분은 이러한 상황들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연구자가 마을에서 주민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어른들이 연구자에게 "그래. 이제 이 마을에서도 인제가 나와야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는 이 마을이 언급되고 인용됨으로써 외부로부터 자신들이 '존재함'을 증명 받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례10> 네 저희들이 했어요.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왜냐. 이 해안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에 다 나왔었어요. 지금 설치는 안됐지만, 도시계획에 다 나왔는데, 그걸 묻혀가지고 해안도로를 묵사발 시켜가지고 골프장 들어온다 하니까 "그건 아니다, 당신네가 골프장 허드래도 해안도로만 두고 하라". 그래서 반대했어요. <사례10, 52세>

해녀인 <사례10>의 이야기처럼 해안도로 건은 계획상으로는 몇 차례 제기되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 현재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사례2, 49세>이다. 한국 사회의 개발이란 서울의 '강남'과도 같은 지역을 각 지방의 주요 행정도시마다 만드는 방식이며(우석훈, 2008b:174), 제주도 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발의 거점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별화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도 마을마다 개발이 불균등하게 일어나면서 지역별 격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진현영, 2007:2). 특히 개발에서 소외를 경험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불안정한 농업 수익과 달리 식당 등 관광관련 업소가 호황을 누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각적인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상업 활동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오정준, 2003:145). '바당'마을의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후에 제기되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있어서 초창기 찬성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B. 사회경제적 배경

'바당'마을은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용천수가 나는 마을이어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쌀농사가 가능했다. 그래서 '바당'마을 하면 가장 먼저 인용되는 말이, "'바당' 아이들은 조밥 주면 호민 안 울곡, 곤밥 주면 호민 운다."('바당'마을 아기들은 쌀밥 주면 울고 조밥 주면 안 운다)인데, 이는 쌀이 흔한 마을이다 보니 우는 아기를 달래려면 늘 먹던 쌀밥 말고 조밥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³²⁾ 이 말은 현재까지 '바당'의 상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1940~50년대는 제주도 전역이 쌀이 귀했고 '바당'의 땅도 대다수가 외지인 소유여서 주민들은 거의 소작

32) 제주도의 토양은 투수성(透水性)이 강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상류하천이 드물다. 따라서 논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의 경작지는 밭으로서, 밭과 논 비율은 50:1 이다 (이정주, 1999:92). 이는 '바당'마을이 가진 자연환경의 희소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으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 소작인들이 모이면서 현재 마을의 기틀이 형성되었고, 이승만 정권 때 농지개혁법 실시³³⁾로 소작하던 땅이 본인 소유로 되면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논밭은 많이 있지만은 좀 곤란하거나 하면 파는데, 여기[‘바당’마을] 사람들이 팔면은 소작이 안되거든? 팔아볼면 그걸로 끝인디, 예를 들면 제주시 사람들에게 판다, 그러면 반은 내놔. 왜냐? 소작을 하니까. 경작하면은 막 반은 내거란 말이여.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동네사람들한테 안 팔고 외부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런 것이 있주. 그러니까 전부 토지는 외부 사람 토지라이. 근디 남이 볼 때에 ‘바당’마을은 논도 많고 수확도 많으니까 부자마을이라고 허는디, 외부는 그렇고, 내용으로 는 속빈 강정이다. [외부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허지. 창피하잖어이. 다 옛날 말이라. 지금으로부터 60년 100년 전 말인디. 1960년도에 그 뭇이 나오지. 토지분배령. 그때에 또 부자된 거라. 그때 전부 소작하는 이에게 토지를 분배해줘 버리니까 소작농 하는 사람들에게 [논이] 다시 다 돌아왔네, 또. 외부지주들은 자기네 경작을 못하니까 법으로 딱 정해서 소작인에게 전부 다 돌려줬네. <사례8, 87세>

하지만 이후 쌀농사를 짓지 않게 되고³⁴⁾ 그러다보니 소 목축을 할 필요도 없게 되어서 마을의 공동목축지를 비롯한 개인 소유지의 땅을 외지인들 대상으로 팔았

33) "농지개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헌법 121조)에 의해 지주·소작 제도가 아니라 농민이 그 땅을 소유한다는 원칙 하에 이루어졌다"(1공화국 당시 부흥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송인상 한국농물협회 명예회장의 회고). <프레시안> 2008년 9월 25일 기사 중.

34) 1960년대 이후 육지에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제주도에서는 쌀농사를 짓지 않고 육지에서 전량 수입해 들여왔고, 그러면서 제주도에 '반지기밥'이란 음식도 생겨났다. 이는 쌀 반 보리 반으로 지은 밥을 말하는데, 그러나 당시에 쌀이 충분치 않아 30(쌀):70(보리)의 비율로 밥을 지었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사에서의 주식인 쌀밥으로 완전히 바뀐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인데, 이러한 '쌀밥의 주식화'는 제주음식의 기본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주도 식사였던 잡곡류와 채소·해조를 섞은 밥, 그리고 죽 같은 음식이 가정에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육지에서도 비슷한 사정이지만, 육지의 경우 쌀밥을 주로 먹어온 계층이 존재한 반면 제주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제주음식의 부식은 쌀밥에 맞도록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밥을 주로 먹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주도 사람들의 부식 소비 방식도 바뀌게 되었다(허남춘 외, 2007:32~3). 주영하(2009)는 이러한 '제주음식의 육지화'를 국민국가로 포섭되는 국가의 정치적 움직임과의 상관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고, 그 결과 2008년 현재 마을토지의 전체 35%가 도외 거주자의 소유가 되었다.³⁵⁾

[외지인 소유의 토지가] 거의 다 돌아왔는데, 전부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몇 프로 돌아왔어요. 경했다가(그랬다가) 또 곤란해가지고 또 판거라. 요새는 논농사를 안 짓거든. 논밭이 필요 없어요, 별로. 목장도 옛날 우리 '바당' 목축지라 그래서 소 목축지도 한 30만평 있었던건디, 소가 필요 없으니, 우리 '바당'사람들이 성급해요, 성질이. 뜨금하게 놔뒀으면 지금 엄청난 값을 받을 건디, 평당 20만원을 받을 건디, 그때 뭐 3000평에 한 5만원 이렇게 받고 팔았던 말이주? 싹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이 농장도 지금 보리 농사 안지고, 조 농사 나뭇(벼) 농사 안지고 버리니까 별로 필요없는 걸로 해서 몇 톤 안 받고 팔아버리니까 전부 서울 사람들이 다 사 갔어요. '바당'사람 토지 얼마 없어요. 지역도 보면 전부 외부 사람. 이 논, 바당 것도(바다 근처의 논도) 쪽 보면 전부 서울사람, 부산사람, 대구사람이지 '바당'사람 것은 별로 없어요. 이 안에도 들어왕 보면은 동산이고 좀 보기 좋은 것들은 전부 외부사람이 사 버리니까 정말로 실망할거요. <사례8, 87세>

<표 4> 제주도 '바당'마을 토지의 외지인 소유 비율 (2008년 11월 현재)

	'바당'마을 전체 토지	도외(島外)	도내(島內)	국공유지
전체	104,621리	3,702리	4,934리	1,825리
구성비	100%	35%	47%	18%

자료: 서귀포시청 지역경제과 내부자료(미간행) 기초로 재구성.

현재 '바당'마을은 쌀농사 대신 감귤과 한라봉, 마늘, 화훼를 주요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다. 또 선박 32척, 어민 27명, 해녀 136명이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업을 겸하고 있다.³⁶⁾ 그리고 남성들은 비닐하우스, 어로작업 등의 일을 하고, 여성들은 대체로 물질과 밭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런 성별분업은 강

35) 이러한 현상은 '바당'마을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우석훈(2008a)은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보면 60% 이상이 땅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6) 해녀들은 마을의 앞바다를 '밭'이라 칭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툇(툇)·모자반(몸)·미역 등의 해초와 성게·전복·소라·구재기 등을 채취하고 있다.

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⁷⁾

C. 주민구성: 대면(對面)사회로서의 친족체계와 마을공동체

제주도의 친족체계는 부계혈연중심적인 육지의 친족체계와는 달리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친족체계를 '켄당'³⁸⁾이라고 하는데, 이는 제주도의 특수한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주도는 화산섬으로서 농사지을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 때문에 제주도의 노동방식은 한정된 토지에서의 경작 중심이 아니라 노동력 중심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노동력 동원과 교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연(地緣)이 강조된다. 즉, 생산활동을 위해 토지와 같은 물적인 토대가 중요할 때에는 그 재산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원권을 제한하는 친족집단이 중요하게 기능하지만, 노동력이 중요할 때에는 노동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혈통에 따라 성원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 모두와 노동력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성원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친족에 있어서도 성원권이 제한되고 배

37) 성별분업에 따른 공간분할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를테면 주민들 전체가 모이는 행사에는 딱 반을 갈라서 왼편에는 여성들이, 오른편에는 남성들이 앉고, 이런 성별구성은 대체로 섞이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식도 이런 서로 다른 성별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고 이는 군사기지 관련해서도 마을 내에서 이질적인 논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성별분업으로 인한 담론적 분리효과에 대해서는 V장 C절에서 더 자세히 분석되고 있다.

38) 켄당은 육지의 부계 혈연 중심의 친족체계와 달리 한 개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망이다. 켄당 구성원은 친족원에 대한 공동의 의무와 역할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 관계는 혈통과 혼인양자를 통해 형성된다. 또 켄당은 개인적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켄당이 될 수 있다. 켄당의 수가 많은 사람은 부계 친척과 모계 친척을 중심으로 켄당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을 했으나 켄당의 수가 적은 사람은 켄당의 범위를 넓혀 혈통이나 혼인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 복친으로 삼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켄당은 혈통집단과는 달리 성원권이 분명하지 않으며 특정의 사회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역할의 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창민, 1992:97~111).

타적인 집단으로서의 친족보다는 성원권이 열려 있는 범주로서의 친족이 보다 적응적일 수 있는 것이다.³⁹⁾ 이렇게 성원권이 열려 있는 범주로서의 친족이 제주도의 켤당이다(김창민, 1992:101~3). 또,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은 육지와 달리 촌락 내혼(內婚)이 빈번한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마을 내에 매놈이 없다”(마을 내에 완전한 남이 없다), “알고보면 문딱(모두) 켤당”이라는 말들이 생겨났다.⁴⁰⁾ 이 말은 어디로 어떻게 친척관계가 되는지 따져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고향마을을 밝히고 계보를 따지다 보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 관계라도 연관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⁴¹⁾ 그래서 켤당은 고정된 친족 집단에 속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적응의 관점에서 친족을 재해석 하고 자신의 친족관계를 재정의 하기도 하는 유동적 범주이다(김창민, 2005:133). 이러한 유동성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인, 마을주민이라는 ‘인지가능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는 문화적·정치적 기제가 된다는 것을 드러낸다.

‘바당’마을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성씨를 기준으로 켤당 관계로 얹혀있다. 또한 한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소위 ‘갑장(동갑) 모임’⁴²⁾이 강하게 있는 마을

39) 부모세대의 모든 친족원들은 성별이나 촌수에 관계없이 모두 ‘삼촌’(삼촌)이라고 부른다. 이는 친족원에 굳이 국한되지 않고, 통상 15세 정도 손윗 사람에 대한 호칭이다. 성별이나 촌수의 구별이 없고 항렬보다 연령이 우선되고 있는 것도 제주도 켤당의 특징이다(김혜숙, 1999).

40) 제주에서 마을내혼이 빈번한 것은 호칭에서도 발견된다. 육지에서는 처가(妻家)의 친척은 독특한 용어 형태들로 구성될 뿐 아니라 거의 한자어로 구성됨으로써 다른 친족범주의 호칭어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친족호칭의 독립적인 하위범주를 구성한다(왕한석(1999), 김혜숙, p.440 재인용). 그러나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동네 집안이 처가가 된다면 그 관계는 원처혼(遠妻婚)이나 마을외혼을 취할 때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처갓집 대사시에 사위라는 입장도 있지만 처남들과의 사이는 친구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처가 집안의 일에도 격의 없이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육지 동족촌락의 시각으로는 마치 사위도 그 집안의 혈족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친족용어에도 반영이 되어서 처가의 친족을 달리 구별할 필요도 없거니와, 굳이 구별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처가쪽에서는 섭섭한 일로 받아들이고, 본인으로서도 미안한 일인 것이다(김혜숙, 1999).

41) 제주도 뿐 아니라 그밖의 도서지역에서도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도내혼(道內婚)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박경, 2003:30). 특히 마라도에서는 개척 초기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이바꿈”으로 이주민 가족끼리 통혼하여 현재의 친인척이 형성되었다(이기욱, 1984).

42) ‘바당’마을에는 마을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설립시기부터(1946년 개교. 그 전엔 서당과 의숙(義塾)에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학년 당 한

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마을 주민들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이 누구임과 동시에 누구의 켄당이고, 누구와 갑장이고 등의 관계까지 함께 일러주는 바람에 이를 익히느라 초반에는 진땀을 빼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주도 '바당'마을에서 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self)'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바당'마을은 제주도의 여느 마을과는 달리 외지인은 3가구 정도에 불과한, 그야말로 날 때부터 한 평생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기도 하다. 또 관광객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바당'마을은 제주도 내 여느 마을보다 더욱 더 대면관계(對面關係, face-to-face encounter)적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⁴³⁾

이는 주민들 사이에서 인사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식(ritual)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주민들은 서로 모이거나 만날 때 대체로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주도 사람들은 무뚝뚝해서"라고는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보고 소식을 들으면서 유사가족처럼 지내는 이들에게 인사와도 같은, 말하자면 자신의 드나듦을 타인에게 알리는 의식이 오히려 새삼스럽고 불편한 일일 것이다.

한편 주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연구자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연구자는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도 안하고 다니냐"라는 편견 아닌 편견을 많이 들었다. 이는 물론 마을에서는 연구자가 눈에 띄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먼 거리에서도 연구자를 먼저 인지함으로써 생겨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아는 대상이라고 하는 경험적 현실을 통해 신체의 감각적 범위가 구성된 이들이다. 때문에 항상 주변시야를 넓게 두고 누구든 곧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는 몸이고, 이 때문에 연구자 역시 으레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 반응이기도 하다. 서울이라는 익명화된 공간에 익숙해져서 모두가

반으로 총 6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갑장(동갑)'은 나이가 같다는 것 이상으로 어린 시절부터 켄당처럼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단위 중 하나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군사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 55년생 양띠인데, 우리 55년생 갑장들 중에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딱 나 하나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의 서두를 시작하곤 했다.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다 갑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이주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남성들이 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43) 관광관련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외지인들이 이주해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90년대 이후 관광업이 발달되면서 해안가마을의 전업(轉業)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전업의 관광관련활동이란 횃집, 기념품·필름점, 포장마차, 민박, 자전거 대여점, 자장면집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송경언, 2002).

모르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연구자의 (좁은 시야를 가진) 신체와는 인지하는 범위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 다른 방식이 다른 시각장(visual field)을 형성하게 되는 것⁴⁴⁾이고, 이러한 주민들의 몸은 이렇게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규범들을 만들어낸다.⁴⁵⁾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바당'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아는 관계'인 마을 '내부'가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향후 군사기지 건설문제에 있어서 마을 내적 질서의 파괴는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폭력'으로서 새롭게 인식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44)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프록세믹스(proxemics)라는 용어를 통해 문화에 따라 상이한 감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한다. 문화에 따라서 감각자료의 선별기능(selective screening)이 여과시키는 대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마다 양식화된 감각 스크린을 통과하여 인지되는 경험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홀, 2002).

이를 통해 보면, 섬인 제주도에서, 특히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50~80대의 '바당'주민들과, 서울과 같이 복잡한 메트로폴리스에 살면서 장소(place)에 근간을 두지 않는 (젊은) 연구자가 서로 '거리를 인지하는 감각'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다. 걸으면 2~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연구자는 걷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걸어 다녔는데, 마을주민들은 그 거리를 멀다고 인식해서 걷기 보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길에서 연구자를 만나면 (안쓰러운 표정으로) 꼭 태워주시곤 했다. 제주도에서는 가장 먼 거리라도 자동차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2~30분은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또, 연구자가 길을 물을 때 주민들은 "지금 여기서 동쪽으로 얼마큼, 한라산 방향으로 얼마큼"의 방식으로 위치를 설명을 하곤 했는데, "한라산 방향"은 제주도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는 랜드마크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패닉에 빠지기도 하였다. 동-서 방향, 한라산-바다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 봤을 때, '바당'의 주민들은 항상 지형(地形)을 형상화 하면서 섬 내의 자기 위치를 좌표화 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섬이라는 한정적인 영토 내에 거주함과 동시에 땅과 바다를 근간으로 생활함으로 인해 형성된 인지감각이라 할 수 있다.

45) '바당'마을의 대면사회적 특성은 이렇게 인사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연구자는 마을에서 숙식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례로서 선물을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선물을 하는 행위 자체를 주민들은 낯설게 받아들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여기는 문떡(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고 켜당이기 때문에 보통 따로 선물 같은거는 안해이.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 되는거"라고 하기도 하였다.

IV. '발전'으로서의 군사기지

본 장에서는 군사적 폭력이 외부로부터 침투하여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폭력-평화, 非일상-일상의 이분법), 이미 군사적 폭력은 일상을 조종하는(manipulating)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주민들의 현재의 삶에서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군사기지에 대한 국가(국방부)와 제주도청의 논리는 제주도민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거대담론이 아닌 일상을 건드리는 언어는 그만큼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엔 충분한 담론이 된다.

특정 제도나 기구들의 탄생은 권력장치의 구성에 있어서 변화를 야기함을 의미한다. 국방부가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또 주민들이 이를 기꺼이 따르도록 만드는 힘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담론의 탄생의 시점에서 달라진 장치들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해군기지가 '바당'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A. 군사기지 건설담론의 정착

한국사회에서 '군사기지'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혐오시설'로서의 이미지로 인해, 군사적 폭력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 새로운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방식처럼 폭력을 가시화 하고 위협을 동원함으로써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현재적 상황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군사적 폭력은 '폭력이 아님'이라는 담론적 형태를 취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담론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1. 폭력이 배제된 군대: "~이 아닌 군대"라는 담론

과거 한국사회에서 군사적 폭력은 집단적 동원체제와 그로 인한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핵심적이었다. 군사적으로 강하고 부유한 근대적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와 함께 북한이라는 강력한 '주적(主敵)'의 존재 속에서 국민국가는 개개인들을 '국민'으로 호명하고 집단의 공동운명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 운명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처벌과 권리박탈이 이루어졌다. 반공은 '국시(國是)'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글로벌 자본주의로 본격 편입되면서 군사적 폭력이 작동되는 양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취업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병역-국민정체성-시민권의 강고한 연결이 점차 작동되지 않게 되었다. 또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동북아중심국가'를 구현하게 되면서, 이에 걸맞는 경제시스템과 안보시스템을 갖추고자 하였다. '제3세계'로의 시장 확장과 함께 동북아의 무기경쟁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⁴⁶⁾ 내부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한국 경제는 절실히 해외 시장과 해외 자원을 갈망함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지키는 주체' 혹은 최소한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는 국가⁴⁷⁾'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껏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정치경제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는 국방력의 강화가 국가 내부의 희생을 토대로 삼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여타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외부로 확장해야만 내부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이다.⁴⁸⁾

46)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군사비 지출총액은 242억 달러로 세계 11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2007년 226억 달러에서 7% 증가한 수치다. 미국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41.5%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인 가운데(다른 상위 14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군사력 증강에 주력해온 중국이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국가로 부상했다(SIPRI, 2009).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은 군비확장 경쟁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원장은 “동북아 지역은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군사비 증가율도 8% 이상이어서 세계 평균 3~4%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미 “중일 간의 상호 나선형 군비경쟁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김동주, 2007).

47)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 중.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2005),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p.35참조.

48) 그리고 이러한 국가정책에 국민 상당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이는 상충정치에서 뿐만은 아닌 개개인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우석훈(2008a)은 2004년 이라크 파병, 2004년 한류 열풍, 2005년 황우석 사건, 2007년 심형래 감독의 디워(The War) 열풍, 등이 그 대표적인 징후라고 분석한다. 특히 이라크 파병은 '국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국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의 자체가 파병과 전쟁이라는 일반적인 경제적 범주에서는 잘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관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분히 제

한편,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은 국제정치와 전쟁의 규칙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과거 광범위한 군사 및 안보 서비스가 정부의 공적 책임에 배타적으로 속해 있었던 반면, 이제는 민간군사기업이 군사 및 안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싱어, 2005). 때문에 기존의 여성주의 평화연구에서 군사적 폭력이 위협의 추상성을 통해 국민을 동원한다고 지적한 것(Cohn, 1987; Scarry, 1985; Hartsock, 1989)과는 다르게, 군사기지화도 같은 군수 시설은 더 이상 안보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 '적의 침략'이라는 거창한 정치적 명분을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가장 삶과 밀접한 언설인 '먹고 살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폭력이 작동되는 방식의 변화는 군사기지가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인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에게 "(안보를 위해) 참으라" 하는 대신, 오히려 "(달라졌으니) 믿어 달라"고 설득한다.⁴⁹⁾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역화된(localized) 언어로 말을 거는 것이다.

김○○ [해군기지 사업단의] 단장도 나한테 얘기를 했듯이, "바당'에는 최~근래에 해군기지가 생길거니까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면 일본이나 이런데 못지 않게서리 자기네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그리고 [토지주들에게 하는 말이] "토지를 팔아주지 않으면 전체 바다를 매립해서 건설하겠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가서 반대측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십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례 12>

국주의적인 현상이다. 이익이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의와 명분 같은 것으로 참전 혹은 파병 같은 일을 결정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제국주의적 한국의 정치구조와 이를 뒷받침 하는 국민여론을 분석하고 있다. 우석훈(2008a), 『촌놈들의 제국주의』, 서울: 개마고원.

49) 이는 2006년 용산의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만들어낸 사회적 파장파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안보를 위해서는 평택이 참아야 한다"는 논리로 대추리·도두리 마을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는데, 그럼에도 주민의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은 국방부가 엄청난 보상비용을 감당해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제주도 '바당'마을의 해군기지건설계획. 출처: 해군기지사업단(2007)



'바당'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⁵⁰⁾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전에 없던 기지'(이서향, 2003; 대한민국 해군, 2002)라는 이름을 통해 여타 다른 지역의 군사기지(군사권력)와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은 단지 수사(rhetoric)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권력의 실물적인 변화도 뒤따르고 있다. 군사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병영시설·주거 및 복지시설·훈련장 등을 혼합하는 '주둔지 시설의 패키지화'⁵¹⁾ 정책이 그 예다(<그림 1>에서는 민·군 공동시설 구역에 해당한다).

우리 마을만 잘 사는게 아니라 정말 해군기지를 유치함으로써 해군기지가 정말 제주의 관광에 부합되는. 그래서 뭐 돌담도 우리가 지시한게 처음에는 제주도 돌담으로 해라, 했다가 그러지 말고 돌하르방으로 해라. 돌담 전체를 다. 그거는 간단

50) <국방일보> 2008년 4월 2일자 기사, "해군기지는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

51) 이는 과거 군 독자적인 계획수립에서 탈피하여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효과도 달성하고자 하는, 군 입장에서는 '인식의 대전환'이라 평가받을 정도의 변화라고 한다(김영득, 2007). 실제로 해군본부에서 홍보하는 해군기지는 흔히 '기지'하면 떠오르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자연친화적인 기지'를 모토로 삼으면서, 해양공원, 교육/문화센터, 체육/복지시설 등을 기지 내에 갖출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로 홍보되고 있다. 해군본부(2007), "해군기지 사업추진계획".

합니다. 지금 인조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돌하르방을 주물로 떠갖고 여러 가지 형태. 얼굴 뭐 하늘 쳐다보는 사람 옆을 쳐다보는 사람, 어깨동무 식으로 해서, 주물로 떠서 이제 벽돌처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누가 보더라도 "야, 이 건 해군기지가 아니고, 기지가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관광지로구나", 그런 생각이 가게끔. 건물 형태도 제주 오름에 맞는, 제주 오름은 다 그 할아버지 머리처럼 아주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 자체도 제주도의 초가지붕처럼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고. <사례 1>

<사례 1>에서 보여지듯 군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마을의 공유지로 전환하면서 군의 시설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도 있다. 군사보호구역의 '철조망'으로 상징되는,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통제와 처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돌하르방'과도 같은 지역 특유의 상징물들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군사기지와 관광지라는 이미지 상 양립불가능 했던 시설들이 경합적인 것이 아니라 '관광시설로서의 기지'라고 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었다.⁵²⁾

한편 한국이 전쟁에 참가하고 군사기지를 증설하는 것이 과거처럼 권위주의 정권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민주적이며 절차적으로 하자없이, 그야

52)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지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다. '제3세계'의 군사기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기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지 투어가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군사기지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되고 있다. 또,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주민들과 '이웃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필리핀 반기지활동가인 Ms. Fabros(Nuclear-Free Philippines Coalition)의 문제제기는 현재 군사기지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설정해야만 함을 시사해준다.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경우, 오키나와에서는 사람들이 미군기지와 함께 살아나가기 를 이미 배웠다. 미군기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되었다.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집과 이웃해 있었다. 그 결과 오키나와에서는 기지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필리핀에서 기지반대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기지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오키나와 아시아민중안보회의> 발표(2000년 7월) 내용 중(이삼성, 2007:23~4에서 재인용).

오키나와의 반전지주(反戰地主)는 전체 지주의 10%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이 군용지 이용 연장 계약을 할 때, 오키나와 지주들이 미국에 그들의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 보다 더 큰 이득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지주들 사이에는 미군이 철수하면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손해라는 의식이 광범하게 퍼져있고, 이러한 현상은 오키나와의 군사화를 영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물적 토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연신, 2008).

말로 "국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지게 된다(우석훈, 2008a:71). 제주도 해군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외적으로는 제주도 전역과 특정 세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시행하였다.⁵³⁾ 그리고 그 중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던 '바당'마을이 '적정지'가 된 것이다.

군대가 어디 예전 같나요? 우리는 이 동네 ['바당'마을]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죠, 소비자. <사례 F>

요번에 해군에서 생각하는 거 보면 ['바당'마을에] 600세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들어오고 해서. 그리고 또 역내 (반대) 분들은 다 제주시 쪽에 와서 살거 아니냐, 하는데 출동 비상 걸려서 나가고 하는데 여기(제주시) 와서 살겠어요. 그 부대 내에, 그럼 부대를 만들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거는 기우가 아닌가. 그리고 요새 폐교되고 그러는데 우선 학교가 살잖아. 젊은 하사관들이 와 가지고 생활하다보면 그 학교, '바당'초등학교 같은데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것, 수영장, 체육관 같은 것을 전부다 주민들이랑 같이 쓰도록 되어 있고, 운영권 같은 것도 '바당'마을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애모이하면서

53)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개발의 명분을 다 갖추고 있는 기지건설론은 1999년 오키나와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반환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다. 나고 시 시장은 헤노코 연안지역에 대체 헬리포트 건설을 용인하였는데, 이는 '미군이 강제 접수한 기지'에서 '오키나와가 제공하는 기지'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한국사회에도 유명해진 소위 '헤노코 반(反)기지 운동'의 배경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정책결정과정에서 '오키나와의, 오키나와에 의한, 오키나와를 위한 결정'인 듯한 모양새를 띄고 있으나, 이것의 한 축은 일본 '본토'보다 훨씬 심한 개발주의의 맥락에서 제기된 점이라는 것이다. 오키나와가 본토로 '복귀'한 1972년은 전후(戰後)의 '황금시대'가 끝나고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이행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무렵부터 토목·건축 등 소위 'ハコモノ(箱物, 건물) 행정'이라는 공공투자에 의존한 '토건 국가'의 구조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뒤쳐진 오키나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낸 이권의 경합지로서 본토 기업의 거액 투자 대상지가 된 것이다(강상중·요시미 순야, 2004:198~214).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군사기지를 둘러싸고 이를 제기한 주체와 그들이 제기하는 논리구조는 현재 제주도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는 현재 냉전 이후 지속된 '기지체제'로 인해 기지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기지가 이렇게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된 이상 일방적인 기지철수운동은 허무한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이는 곧 제주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으며, 때문에 현재 제주의 군사기지 문제는 국민국가 안에서의 문제설정을 넘어서 식민지적 기억을 공유한 동아시아 체제 속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이라는 한정적 용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V장에서 분석한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뭐 가만히 앉아서 옛날처럼 그렇게 할건가.. <사례 B>

현역 해군인 <사례 F>는 자신들을 "소비자"로 지칭하였다.⁵⁴⁾ 기지가 들어오면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이나 그 밖의 마을에 있는 시설들을 (돈 주고) 이용하는 구매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가 위협과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던 것과는 달리, "소비자"라는 말 속에는 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삭제된 채로, 합리적인 행위자(agent)로서의 이미지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군인들은 <사례 B>의 말에서처럼 '돈을 든 아무개'일 뿐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600가구를 채워줄 '머릿수'의 의미 이상이 아니다.

이를 통해 주목할 것은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가 아닌 군대"라는 언설이다.⁵⁵⁾ "~가 아닌"이라는 말 속에 존재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이에 대한 기억과 우려, 더불어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군사적

54) 물론 <사례 F>는 연구자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지나가는 말로 "해군도 힘이 없어서 경제성을 제기한 거죠.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논리에서 밀리면서 그렇게 된 거죠. 발목 잡혔어요. 찬성 주민도 위원장[찬성측 주민 대표] 빼고는 모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방연구원의 "안보 위협 평가"에 관한 자료(『증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2000)의 소제목은 이러하다. "현실 감각의 둔화", "진보적 안보관의 확산",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 "안보의식 저하", 국방비 삭감 압력 증대, "병역의미 기피".

이 모두 '국민'들의 변화된 안보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섞인 반응으로, 그만큼 국방의 논리는 안팎으로 변화를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독점적 권위가 점차 경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국가적 입장에서 안보론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작동되었던 반면, 현재는 <사례 F>가 말하는 태도처럼, 그 말이 일방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이와 같은 말들은 주민을 향해서는 절대로 말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초창기(2002년)에는 제주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제주도의 안전이 증진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군사전략적 유리함과 해상교통로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국익론'과 '안보론'을 주요하게 주장했었다(이서향, 2002; 장정길, 2002). 또, "○○항 해군기지 건설이 끝나는 2010년 이후 중·일과의 갈등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면, 원거리 대공방어와 탄도탄 방어능력을 갖춘 첨단전투체계인 이지스함을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다(2002년 8월 해군본부 설명회).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런 담론들이 설득력을 잃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들은 변화된 안보관을 걱정하는 '혼잣말'이거나, 군인들 상충부만이 모인 자리에서의 내부 언어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방담론의 언어는 점점 더 이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주의의 문제를 상충담론 중심으로 연구해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폭력의 내용에 대한 부인이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 처음 건설되는 군사기지와의 이를 둘러싼 폭력은 과거를 단절하고 부인함으로써만 곧 자신이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바당'마을에 작동되고 있는 군사적 폭력은 이전에 실행되었던 폭력이 위기에 처한 바로 그 국면으로부터 (대내외적인) 변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기로서의 정체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폭력이 과거 폭력적 경험과의 불일치의 반복으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가운데, '바당'마을의 군사기지 계획이 서 있다.

실제로 '바당'마을이 예정지로 선정된 초창기부터 군인들은 주민들과의 협상의 전면에 잘 나서지 않고, 기지에 찬성하는 주민이나 도청 공무원들이 이들의 견해를 대리(代理)하곤 했다. 이는 군대가 아무리 청사진을 제시하더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 이상의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폭력은 부인되고 주민들의 필요는 충족시킴으로써, 군사적 폭력이 욕망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힘은 바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2. '위기' 담론의 종착지로서의 "제주도 발전"과 군사기지 계획

보통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의 지역이 군사기지 예정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지역 민심'을 잃을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지역 자체에서 거부하곤 했다. 그리고 이미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자체 선거마다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군사시설 폐쇄"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곤 했었다(김영득, 2007).

그런데 제주의 해군기지는 오히려 도에서 기지를 '유치'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위자(agent)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필요는 제주도가 처한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위기'의 설정과 이에 대한 '군사기지 유치'라는 해법의 과정 사이에는 몇 단계의 사고의 긴축(緊縮)과 봉합이 필요한 일이다. 때문에 이는 현 시기, 제주도가 겪고 있는 문제가 군사기지 '유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과정을 짚어보는 것은, '위기'의

55) 구체적으로, 국방부 측이 주장해 온 내용의 말의 형식을 정리해보면 이러하다. "마을 내에 기지 외곽에 군사보호구역은 설정하지 않을 것이고, 공군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해군만 사용할 것이며, 미군기지화 되지 않을 것이고, MD체제의 일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무관하다." 그리고 기지가 건설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에는 다음과 같은 언설로 '안심'시킨다. "기지주변 해역 어로활동 보장, 방파제 외측에서 해녀들의 나잠어업(물질) 보장". 해군본부(2007), "제주 '바당'마을 해군기지 사업추진 계획".

설정에 곧바로 연결되는 기지건설 계획의 '필연성'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개발은 자체 개발한 게 별로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엄청 제주도는 아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16군사도로도 만들어내고, 그쵸? 중문관광단지 만들어내고. 이거는 도민들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국가와 제주도관계가 1%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아왔어요. "[전국 인구의] 1%기 때문에 맨날 우리를 무시해", 이러면 서도 가면 중앙에 가면 제주도가 마지막에 잘 혜택을 받아야 전국이 혜택을 받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제주도가 혜택을 받지 않고 제주도가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전국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를 포함했을 때 전국이 되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제주도가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적게 받아오거나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우리가 국가주도형의 발전전략을 다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는[공무원들] 그거를 거의 집행하거나 수행하는 것이고요. <사례 A>

<사례 A>가 지적하듯, 제주도의 개발방식은 "제주도를 포함해야지만 전국이 된다"는 언설이 가능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에서 관광이 비교우위산업이 되는 것은 1960년대부터인데, 당시 한국경제는 세계적 불황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수출정책이 한계에 부딪힘으로써 정권의 정당성 위기에 따른 정치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이를 타개하는 돌파구로 외화벌이에 용이한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목하였고 이때 경주와 제주도가 선정되었다(조성윤, 1995:83).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분업적으로 떠맡은 것이다(이상철, 1995:283). 이러한 개발방식은 한반도 전체가 한 몸체(政體)라는 전제 하에서 지역 자체의 자원순환체계를 국가 중심의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이다.⁵⁶⁾ <사례 A>의 지적처럼 당시 박정희

56) "경제 건설과 국방 강화를 위해서는, 복귀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적 단결과 일체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타락, 부패, 기강 해이이다". 박정희, 1976년 11월 12일 국무회의 중. 문승숙(2007), p.37에서 재인용(강조는 연구자). 같은 맥락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화학공업화와 기술혁신은 지역 분업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심적인 공업지역인 동남해안 벨트가 1980년대 초 광양제철의 설립, 1980년대 후반 목포 대불공단의 확정 등으로 서남해안으로 확장되어 가고 나아가 단순히 농·공 간의 지역적 분화가 아니라 생산현장과 그것을 지휘통제하는 기능이 지역적으로 분화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서울은 계속 생산 시설을 지방(현재는 '제3세계')

정권이 제주도를 "엄청 아꼈던" 것을 반영하는 듯, 제주도민은 경제적으로도 바나나·파인애플 등 특화과일, 감귤 특화, 관광 특화 등 '특별'할 것을 강요받으며 살았다. 또, 법적으로는 1973년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외지인들에게 토지매입을 허용하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⁵⁷⁾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육짚깃'들에게 '우리 땅'을 내주는 것으로 인식한 제주도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91년도에 특별법이 생겼는데, 내용을 봤더니, 특별한 법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 땅 내주는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봉기한 거죠, 그 당시에. [그때 분위기는] 육지의 6월 항쟁 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구호도 촌스러운데, "우리 땅 우리가 지키자" 이게 메인 슬로건이었어요. 그 싸움은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져서 제주도 정책자체가 확 뒤바뀌는. 다른 지역은 이제야 막 개발 담론이 나오는데, 개발담론에 대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만든 데가 여기거든요? 4.3특별법이 과거사법에 대한 모태인 것처럼, 경제자유 무슨 법, 교육 관련된 무슨 법, 전부 제주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 만들어놓고 치고 나가고 다 전파되는 거예요.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보면 국내영리병원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는 [규제를] 못 푸니까 여기 한번 풀어보고 괜찮으면 전국에 푸는 식으로 가는 거죠. 정책 입장에서 그런 거죠. <사례 E>

1991년 제주도 인구 10%이상의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외쳤던 "우리"는 육지인들을 향해 말하는 정체성의 표식이었다. 제주섬을 대상으로 한 토지 투기, 대기업의 개발 참여 등은 제주인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고(권귀숙 외, 1998), 이 때문에 제주민들에게 외지인과 외지자본에 대한 경계가 강하게 작동하였다.⁵⁷⁾

으로 이전하는 대신 기획·연구·기술개발의 기능을 집중시킨다(정근식·조성윤, 1990; 강희경, 1990).

57) 1989년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개발과정에서 관광산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도외유출과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부작용, 도민들은 개발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피해의식 등이 표출된 저항이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에서 양용찬씨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제민일보> "제주 60대 사건: (46)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정반대운동" (2005년 11월 28일자 기사) 참조. 또, 이 시기에 무소속 출마자들의 국회의원 당선이 이어져, 제주는 여권의 경계 지역으로 주목되기도 하였다(김석준, 1997).

하지만 관광이라는 '특화'사업이 제주를 규정하는 힘이 되면서 제주의 산업구조도 점차 이에 맞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감귤농사와 몇 가지의 발작물로 대표되는 1차 산업 중심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인 3차 산업이 더해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⁵⁸⁾ 이로 인해 이전까지는 제주도가 부족한 자원으로나마 자급자족 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점차 외지의 자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구도로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내생적인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는 '특화'는 외부경기변동에 지나치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2001년부터 3년간의 감귤 흉년으로 제주경제가 몸살을 앓고, 해외관광 동향에 따라 관광객은 늘어도 수입이 주는 악순환, 대규모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갯발관광'의 쇠퇴로 인한 관광기반의 붕괴가 이러한 의존성의 여파를 증명한다. 지역총생산의 95%가 되는 1·3차 산업의 생산량은 육지의 경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제주도 내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통계적으로도 지역총생산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전국 평균 1.06이지만 제주

58) 따라서 제주도는 공장과도 같은 2차산업은 거의 없는 구조가 되었다. 2008년 현재 2차산업의 전국 평균은 17.4%인데 반해 제주는 3.4%의 미미한 비율에 그치는 대신 1차산업(20.7%)과 3차산업(75.9)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사회의 산업구조와 계급구성은 전체 한국사회와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이상철, 1987; 황석규, 1985).

<표 5> 제주도의 산업별 취업자 규모 (2008) (단위: 천명, %)

구분		취업자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국	인원	23,577	1,693	4,101	17,784
	비율	100	7.2	17.4	75.4
제주	인원	290	60	10	220
	비율	100	20.7	3.4	75.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경제활동인구연보』 기초로 재구성.

<표 6> 제주지역 산업별 생산 및 취업자 규모 (1961-2001) (단위: %)

산업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체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총생산	취업자
1961	55.7	80.5*	10.8	1.7*	33.5	17.8*	100	100
1971	49.3	81.3	8.0	3.1	42.7	15.6	100	100
1981	34.9	71.8	5.3	3.1	59.8	25.1	100	100
1990	35.0	42.0	3.0	3.8	62.0	54.2	100	100
2001	16.0	25.0	3.0	4.5	81.0	70.5	100	100

자료: 강경숙(2009:68)에서 재인용.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2권, pp.622-624; 제주도(2006), 『제주도지-산업·경제편』 제4편, pp.944-948.

* 1961년도 취업구조는 1967년도 것임.

도는 1.65로 성장률 편차가 심하다(한국은행, 2000). 그럼에도 정부는 신자유주의, 즉 무비자, 무관세, 무국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제주도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임동근, 2006:282).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제주도민들의 생활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도가 점차 외지인의 자본과 욕망을 통해야만 '현재의 삶'이 유지 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삶의 새로운 태도'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형성된 '관광지'로서의 제주도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2003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거쳐, 2005년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권을 도지사가 갖는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현재 제주도는 '민영화'와 '(외지자본) 유치'라는 언어를 빼놓고서는 제주도의 정책을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⁵⁹⁾ 이런 구조로 인해 경제시설화된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적극적인 '유치'를 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 그럼 혹시, 그런 어떤 앞으로 될 용역 중에 어쨌든 이게 군 시설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를들면 위험하지 않다, 그런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항간에 우려하는, 이게 미국의 MD 정책에 하나의 반영이기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실제로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하구요.

<사례 B> 물론 그 해군기지 하면, 그때 하와이항도 가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어선도 오고, 여러 군항들이 오더라구요. 지나가다가. 그런거야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협정에 의해서 왔다가 가긴 하겠죠. 근데 그걸 해군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자> 아, 그런 것들은 아직 도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

<사례 B> 네. 그런건 없고. 아직은 MD 개념이, 예전에 토론회 초창기 할 때,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 그걸 자꾸 하더라고. 그런데 이지스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샌디에고 들어가 보니까 이지스함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59) 이러한 정책 흐름에 따라, 제주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 건설, 영어교육 도시 신설,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도 전역 면세화,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이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 우석훈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파고를 일종의 등고선처럼 지도를 그려본다면 가장 높은 지형이 서울, 그것도 강남이 아니라, 제주 그것도 제주도청일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 2008년 7월 30일자 칼럼, "우리에게 제주란 무엇인가".

그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군사전략이라던가 국방계획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전쟁이 나가거나 하면은 해군들은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거 아닌가. 그래서 마을 와서 폭격해버리면 해군기지만 폭격되는거 아니에요?

군사기지 담당 공무원 <사례 B>는 군사기지가 건설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군사적 위험에 대해 알지 못했고(알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그 질문을 다시 연구자에게 돌렸다. 이렇게 군사적 폭력이 작동되는 방식의 변화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⁶⁰⁾ 이로서 안보문제를 경제화 하는 전쟁의 새로운 규칙은 외지자본과 시설의 '유치'를 통해 생존하는 제주도의 발전계획과 맞물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몇 단계의 사고의 '봉합(suture)'⁶¹⁾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실제로 뭐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찬성자가 많대는 거예요. '바당' 내에도 그렇고 서귀포까지. 왜냐면 인구유입의 문제, 그리고 서귀포 경제가 일차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 그래서 제주도민이 56만 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뭘 먹고살 건가 고민할 때에 인구가 100만은 돼야 된다. 오히려 상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찬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네는 비율로 따지면 진짜 많다고 본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에서 장사하시는 분, 무슨 레스토랑 같은 3차산업에 해당하는 남자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 봤는데, 그분도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서귀포에 살고 있고 상업하는 사람들은 인구 유입이 제일 먼저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구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군 기지가 들어와서 잘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주도민 56만을 뿔로 100만으로 만

60) 이렇게 군사적 폭력과 맺는 관계의 변화는 자신이 전쟁이나 군대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각 없이, 이에 대면하지 않고도 참여하는 방식이 됨을 알 수 있다. 직장과 군대의 결합체인 병역특례제도, 군수산업(혹은 무기 '수출')의 확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61) 이때의 봉합(suture)이란 결핍(lack)을 '메워넣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는 본래 궁극적으로 비결정적이고 불완전한데, 이 결여를 상상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봉합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봉합효과는 불완전한 주체의 분열을 보호하게 된다(Kaja Silverman, 1983:205~6; 라클라우·무페, 1990:111~2; 호미 바바, 2002:151). 따라서 이렇게, 군사기지라는 시설이 '발전'의 이름으로서 제주도에 '유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방담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균열을 '상상적으로' 메워넣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들꺼냐. 이렇게 대거 유입할 수 있는게, 해군기지인데 옛날과 다르다, 군기지가. 막 이러면서 자기네 주위는 훨씬 찬성자가 많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제는 어디가야 반대자를 만나나. 운동하는 사람만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사례 A>

<사례 A>가 초반에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제주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56만 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뭘로 먹고 살 건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한 사회가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경제규모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외지인과 외지 자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 정치경제적 구조는 인구유입·마을의 세대 존속·복지시설·부대적인 경제적 효과 등으로서 논의되는 군사기지담론과 맞아떨어지면서 '더 나은 삶'의 필연적인 해법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군사기지에 대한 불안은 어느새 <사례 A>의 말처럼, "군사기지가 들어와서 잘만 하면 되는 것", "주민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군사기지의 존재를 계산가능한 경제의 문맥으로 치환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지(will)에 의해 조작가능한 대상으로 새로이 자리매김 된다.

이렇듯, '위기'가 주장되고 그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서 군사적 폭력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바로 그때, 지난 날 '군사기지'가 가지는 폭력의 흔적과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폭력의 존재는 부인된다. 그리고 '위기'는 곧바로 '발전'이라는 언설로 대체된다. 그런데 "무엇이 '발전'인가?" 하는 물음은 없는 상태에서 답변들만 제시되고 있다. '발전'이라는 해법이 곧 '위기'를 생산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발전'에 대한 물음이 공백으로 자리한 공간을 70년대 국가주도의 개발방식의 윤곽에다가 제주도의 독특한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한, 이른바 '유치'를 통한 성장이 '필연적으로' 채운다.

저도 그런 역사를 옛날, 아주 이조시대부터 들어가면 뭐 귀양 오고, 정부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이 많고, 4.3이라는 역사가 있고, 또 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물을 아주 동경하면서도 배타적이고, 그렇잖아요? 이 막힌, 섬만, 우리만 생각하는 거. 넓은, 그런 걸 좀 크게 보는 것들이 모자라는 건 난 이해를 해요. 그렇게 시인도 하고. 저도 뭐 중앙[정부]에서 10년 있다 왔는데, 아니 여기 있다가 중앙에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 우리가 최고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정말 편협된 사고더라구요. 세계, 한 곳만 나가도 모든 도시들이 다 경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사는 건데, 우리만 딱

떨어져서 우리만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거든요. [제주도 인구] 56만이 아무래도 시장이 작고, 국가에서 돈을 안 준다 안 준다 하지만 그거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1% 이상 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땐 1%인데, 교부세도 3%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도 작다고만 하니까. 그런 사고는 나는 이제 좀 지양하고, 이제는 실리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 뭘 해줄 건가,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국제자유도시 하면서 많이 열리긴 했어요. 옛날엔 육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토지도 못 샀어요. '육짓놈'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육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지 사는 것도 외지인 토지소유로 다 공개했습니다, 그게. 도민들이 막 반발하고, 근데 이젠 그런 거 없거든요? 골프장 오는 것도 엄청난 외부자본이라 해서 반대했는데, 이제는 골프장이 40개까지 가잖아요. 많이 열려있고, 그래서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이젠 제주도가 모든 문물을 흡수하려고 하는 열린 사고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B>

그러나 주목해 볼 것은, 기지건설의 필요성이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떠나서 어느새 제주도의 발전방식에 요구되는 '삶의 태도'의 맥락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례 B>에게 있어서 군사기지건설에 동의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외부인들을 향한 '육짓놈'이라는 비난과 적대감은 "우리 지역에 뭘 해줄 건가"라는 방식으로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또,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민들은 더 이상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새 시대'에 맞는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근대성은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는 욕망의 형태로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현재라 불릴 수 있는 지점, 새로운 출발의 획을 긋는 시원적(始原的) 장소에 도달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Mann, 1983:148). 때문에 '새로운 것' 속에 제주의 역사적 흔적은 "배타적인 태도"라는 맥락에서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은 '과거'(와 이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들)와 결별한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위기"라는 담론은 군사기지 건설계획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하지만 폭력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치환시키고,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조작가능한 것으로 달리 읽는 방식은, '새로움'이라는 수식어 속에서 물리적 폭력의 흔적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B.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군사기지

개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던 '바당'주민들에게 경제의 문맥으로 치환된 초창기의 군사기지담론은 저항의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의 대상에 가까웠다. '전에 없던 기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각자의 참조(reference)를 통해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되고, 이는 주민들의 현재의 삶에 다른 가능성을 불어넣고 주체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군사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을에 떠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은, 군사기지 건설담론이 주민들의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욕망을 더욱 현실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작동되고 있는 현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1. '결핍(lack)'으로서의 '바당'마을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기지건설이라는 외부는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의 현재를 둘러보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평소 자신의 마을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마을"이라고 느꼈던 주민들은 이 외부적 조건으로 인해 "~이 없음"이라고 표현되는 '결핍(lack)'의 항목들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보시면 솔직히 말해 '바당'은 아파트 하나도 없고, 3층짜리 건물도 없을 정도로, 그니까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살기는 좋지만 젊은 제가 느끼는, 살아오면서 느끼는게, 방법이 없다는 거. 살 방법이. 그래가지고 지금 한미FTA니, 하지만 중국과의 이런 문제도 생기면 농사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좀 더 안타까운 거는 농사 지으면서 화훼하는 분들은 농협이나 이런데 특히나 농가부채가 꽤 많은 편입니다.⁶²⁾ 그걸 갚아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다하다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농토를 팔고, 빚 묻는데 사용하고, 발전가능성이라는게 없어가지고. 우리 [찬성측] 위원장

62)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주도에서 빚 없으면 부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가부채를 포함한 각종 부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제주도의 2,30대의 60%가 저신용자라는 보고도 있다.

님 처음 저한테 제안했을 때, 흔쾌히 동참하게 된 이유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힘들지 않겠나 해가지고 동참하게 됐는데. <사례 2>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동네 발전이 되고 또 인구가 불어나고 이제 좀 지역경제도 좀 살아날 것 같고, 너무 여기는 보시다시피 발전이 너무 안 되서 꼭 막혀가지고 그렇게 살다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좀 뭐하게, 돼지우리 같은, 갇혀 사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마을에 나가보면은 해안도로도 뚫려 있고 도로도 뚫려 있고. 여기는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도로도 그대로고. 좀 달라졌다면 도로포장 한 거 외에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해서, 다른 동네랑 막 비교하면서 너무 갑갑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기지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동네 발전이 된다는 거, 찬성을 하게 된 거죠. <사례 18>

군사기지 건설에 찬성한 주민인 <사례 2>와 <사례 18>은 '바당'마을을 "아파트 없음", "살 방법 없음", "(도로가 없어서) 돼지우리 같이 꼭 막혔음", "갑갑함" 등으로 묘사한다. '바당'마을 외부에 도로나 시설이 있다면 이 마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결핍(lack)'의 표현인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마을을 '결핍'된 것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주민-외지인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결핍'은 대체로 외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선망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해진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한 '결핍'은 곧바로 외부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결핍'과 외부에 대한 선망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된다.

그런데 기존의 평화담론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그로 인한 군사기지에 대한 지지를 "현실을 잘 몰라서(=알게 된다면 반대하게 될 것)"⁶³⁾, 혹은 "군인의 말에 속아서(='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것)"⁶⁴⁾으로 간주한다.

63) 오키나와의 군사기지와 '바당'마을의 해군기지 문제를 엮어서 다룬 <국경은 없다>(김환태, 2009)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에서 있었던 한 평화운동가의 말 중에서. "찬성하는 분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바당'마을에) 이질감이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잘 살게 된다는 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64) 이는 제주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이 연구자에게 해준 말이다. "지금 '발전' '발전' 그러면서 군인들이 주민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주민들은 그거에 다 넘어가는

하지만 이는 주민을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는 담론과 동일한 전제를 공유하는 것일뿐더러, 찬성했던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난 뒤의 상황만을 다룬 결과주의적인 해석이다. 이에 반해 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평화담론에 의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진정한' 평화의 체현자)"들로 말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결핍'은 자동적으로 '진정함'으로 바뀌어져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이 '진정한' 순간은 그들이 무언가를 '결핍'하고 있을 때라야만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⁶⁵⁾

하지만 왜곡과 신성화는 동일한 상징적 질서에 속한다. 이러한 대상화(objectification)는 지배담론의 전제들을 반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담론이 주민을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주민들이 알고/모르는 '현실'이나 '진실'이 따로 있다는 것은 실제 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군사적 폭력이 작동되는 양식 '저 너머(over there)'에 있는 입장에서 구성된 사유방식이며, 이 구도 속에서의 '주민'이란 알리고 설득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를 통해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여기(now-here)'가 아닌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관점에 의해 위계적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물어야 할 것은 주민들이 '발전'이라는 외부로 얼마나 욕망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비판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현재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이다(김은실, 2008:180). 즉, 군사기지를 원하게 되는 욕망은 현재의 무엇을 말하기 위한 진술인가 하는 물음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담론이 전제하는 군사적 폭력에 대해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반한 지식인 것일까? 찬성-반대를 막론하고 '바당'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처음에 기지란 건 잘 몰랐주게'라고 말하는 그 상태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의 논의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군사적 폭력에 대해 '잘 모름'에도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III장에서 짚었던 '바당'마을 주민들이 가지는 마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마을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구성된 주민들의 욕망이 군사기지에 대한 찬-반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바람에 지금 이렇게 운동이 힘든 거예요”

65) 때문에 그 '결핍'을 메우고자 땅을 팔고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은 외부자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배반한다. 이렇듯 약자의 욕망은 '진정성'을 기대하는 외부자들에 의해 종종 차단된다(Gareth Griffiths, 1994). 그리고 이러한 외부자들의 담론은 역설적으로 주민(토착민)들이 현재의 삶이나 완전한 시민성과 단절하는 효과를 낳는다. '진정성'은 이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타자성에 대한 강조는 고립과 본질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Diana Brydon, 1991).

제주도 내에서 계속되어 왔던 특정지역 중심의 발전 방식은 '바당'주민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제외되었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였다. 더구나 앞서 지적한 대로 '바당'마을은 마을 내에 있는 유원지로 인해 15년 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에 대한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 상태였다. 때문에 군사기지로 인해 마을에 새로운 사람과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바당'마을 주민들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지가 들어오다 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고 가고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와서, 꼭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와서 뭐 밥 한 그릇을 사먹는다면, 밀감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한다, 그러면 지역에 와서 돈 좀 쓰고 그러면 나아지지 않을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많이 왔다갔다 하셔야. <사례 18>

<사례 18>에서 볼 수 있듯 기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군사기지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결국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의 반영이다. 즉, 외지인-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이 외지인이 가진 것과 '자리바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좀 더 나은 삶'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의 항목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좀 더 나은 삶'이란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⁶⁶⁾, "감귤 장사가 좀 더 잘 되는 것", "상주인구가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군사기지라는 외부적 변수가 갑작스럽게 등장함으로 인해 자신의 마을을 "~이 없는" 마을로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군사기지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시설로서 한정된다. 마을의 '결핍'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선험이란, 이러한 의미들로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마을발전을 위해 군사기지에 찬성한다"라는 말로써 봉합된다.

한편, 제주도에서 해녀는 특히 바다 개발 관련 사안에 "반대에 이력이 나 있는 사람들"⁶⁷⁾로 알려져 있음에도 '바당'마을에서는 오히려 해녀들이 적극적으로 기지

66) 현재까지 '바당'마을의 교통수단은 1시간에 2~3대 정도 다니는 시내버스 한 노선뿐이다. 병원, 약국, 시장 등의 생활시설들은 모두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이 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나 남성들은 자가용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대체로 이 버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

67) 해안가를 주요 개발대상으로 했던 제주도 개발의 특성 상, 바다를 생계로 하는 해녀들과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해군이 화순과 위미 두 마을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바당'마을에서는 가장 먼저 바다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해녀들을 설득한 결과이다.

군측에서 화순이랑 위미를 거치면서 제가 지켜본 과정으로는 어느 마을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을을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한 팀이 해녀라는 것을 개네[군인들]가 느낀거죠. '해녀들을 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바당'은 마을회의를 먼저 통과시킨게 아니고 해녀회를 먼저 통과시킨 거예요. 마을회를 먼저 통과되고 그랬으면, 해녀분들이 반발했으면 위미나 이런데 처럼 오히려 반대하는 해녀분들이 동참해가지고 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인데, 해녀분들이 먼저 포섭이 돼버린거죠. 그니까 실질적으로 어촌계장님이 얘기하듯이 [해녀는] 바다의 주인은 아니고, 바다는 국가의 것이고, 자기네는 영업하는 사람. 그래서 영업을 포기하는 당근이 주어진거죠. 보상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 1>

기지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군의 입장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례 1>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녀와 바다와의 관계를 “국가-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위치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설정은 바다에 대한 권리를 갑작스럽게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보상이라는 대가를 해녀들이 얻을 수 있게 한 것이고, 이는 평소 해녀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에 하나의 새로운 해법이 된다.

65세 이상 된 분들이 많고, 50대는 거의 많지 않아니까, 제가 50대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세대. 그니까 50대를 비교해서야 한 20년. 앞으로 70대까지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건데 우리 욕심부리면 이제 마을이 발전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가지고 먼 훗날을 위해서 허락하게 됐죠. <사례 10>

<사례 10>의 이야기처럼 기지건설로 인한 보상은 해녀들이 가지는 '곧 끝날 수도

행정당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주도의 이슈는 통상 전국 뉴스에 잘 오르내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녀들의 고공시위로 유명해진 "탐동 매립 반대 운동"에서부터 각종 개발반대 운동에 있어서 제주도의 해녀는 항상 저항의 상징으로 표상되어 왔고, 실제로도 개발반대 운동에 앞장서곤 했다(조성윤, 2005).

있겠다'라는 위기감에 돌파구가 되기도 했다.⁶⁸⁾ 더구나 소문으로서 들려오는 1억~1억 5천이 된다던 보상비용⁶⁹⁾은 물질 노동으로 버는 수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시 못할 액수였고, 이를 통해 주민들 중 특히 해녀들은 기지를 건설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다.

2. 이미지로서의 군사기지와 기획자가 되어가는 주민

군사기지가 '바당'마을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 개개인에게 전해지게 된다. 특히 "전에 없던 기지를 만들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해외 (잘 사는) 나라의 군사기지"를 동원함으로써 군사기지의 이미지를 '보지는 않았지만 좋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대체한다. 이 때문에 <사례 12>는 군사기지를 "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2007년 4월에 이루어졌던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지금 일본 가서 한 10년 이상 살던 우리 친구가 왔어. 여기에. 와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저 요 근래에 했던 요꼬스카항이라 그러던가? 그 항이 요 최근래에 생긴 해군기지라 그러더라고. 거기에 가서 개가 일 해난 적 있다 그러더라고. 그 근처에서. 거기 가면 엄청 크다 그러더라고. 일반 시민들도 왔다갔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배가 엄청 크고 뭐 하더라. 그 정도만 하면은 괜찮겠더라"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는 외국 진짜 우리나라 해군도 기지를

68) <표 6> '바당'마을 연령별 해녀 비율

연령	해녀 수(명)	비율(%)
40~49세	9	6.6
50~59세	23	16.9
60~69세	60	44.1
70~79세	37	27.2
80세 이상	7	5.1
총	136	100

자료: '바당'마을 어촌계. 연구자 재구성.

또한,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보면 총 5,650명의 잠수들이 있으나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하며, 전체 구성의 85.4%가 50세 이상인 상황이다(제주도, 2005:33).

69) 이 '소문'의 형태가 가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V장 B절에서 더 자세히 다뤄지고 있다.

외국 같이 생긴다 그러면 과연 외국에는 어떤 식으로 민간하고 기지하고 어떤 관계가, 공생관계가 어울려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다 지금 경계를 두고 하는 거라야.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여기도 해군기지 하게 되면 개네는 지금 바로 구역만 떨어지면은 건물도 짓게 하고 경계를 안하겠다 하는데,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뭐 인접해서 몇 m 까지는, 반경 몇 m까지는 그런게[규제] 다 있거든? 그거를 [해군이] 안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외국같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야. <사례 12>

<사례 12>에게 일본 요코스카항의 정보를 주었던 '바당'마을 출신의 친구의 이야기는 함선과 기지의 규모에 압도된 자로서의,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 "엄청 크고", "규제 없는" 외형적인 형상으로서 말이다. 그 친구 역시 기지를 견학하는 관찰자로서, 군사기지와 현지 주민과의 구체적인 관계 등에 대한 것에 접근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⁷⁰⁾ 그러나 '바당'마을에 들어올 해군기지가 일본의 대규모 기지와 대비를 이루는 순간,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 12>에게 있어서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감각이 생기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지의 상(象)이 획득 되게 된 것이다. 이렇듯, 형상(形象, image)은 한편으로는 허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이러한 형상을 통해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음'이라는 동일성(identification)의 감각이 생기는 것이다. 동시에 형상에 대한 욕망은 하나의 형상을 향해 단선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과 대비를 이루면서 공간적으로 전개된다(사카이 나오키, 2005:119).

나는 진해가 나는 해병대 나왔기 때문에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해군부대 내가 어떻다는 거는 내가 알기 때문에 부대가 들어가는 곳은 발전이 안돼. 진짜 안되어. 뭐 여기 해군기지 뭐 한거는 나는 해군기지가 들어온, 아까 얘기했듯이 해군기지가 들어와가지고 요 맞물려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가져가가지고 발전을 해야 한다는 거지, 요걸 가져서 발전이 된다는 건 아니야. 나는 그니까 국내 해군

70) 요코스카 항은 최근 미일동맹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주목받고 있는 항으로서, 서태평양 상 미국 핵전력의 전진배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전후(戰後) 일본의 '비핵3원칙'-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의 무력화이기도 하다. 특히 요코스카를 모항(母港)으로 하고 있는 미 태평양 제7함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삼고 있다(이준규, 2007). 이렇듯 최근들어 증설되고 있는 군사기지는 외적인 형상(관광지)과 실제 역할(폭력의 확장)의 불일치로 인해, 건설(주민동의)과 군비증강(전투력 강화) 모두가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지를 갈려고 계획했던게 아니라, 나는 갈려면은 외국에 [시찰] 갈 때 한 번 정도 나를 데려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주게. <사례 12>

특히 한국사회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험으로서의 군사기지는 저개발, 폭력, 소음, 규제 등의 오염된 이미지로서 기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내의 기지가 아니라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것과 대비되는 순간, 자신의 경험과 기억들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로서의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선진국'의 기지와 비교의 대상이 됨으로써 추상화된 군사기지는 갈등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것과 단절하고 '해볼 만한 것'으로서 주민들을 매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에 준해서 <사례 1>처럼 마을에 들어설 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도 해 보게 된다.

우리 마을을 정말 무릉도원으로 만들라고요. [연구자: 무릉도원이요? 어떻게요?] 무릉도원이란 뭐냐 그러게 되면은 첫째는 우리가 그 풍력발전, 해군기지를 빌미로 해서 제주도, 아니 국가에다가 풍력발전기를 유치해다가 전기를 공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발전기가 1750kw되게 되면, 두 대가 되게 되면 약 5천가구, 7가구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1.5메가와트 정도 되게 되면 한 세대되면 신시가지 전체가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첫째 전기 공짜. 이 두 번째는 학생들 장학사업해서 학비 무료. 또 세 번째는 이 실버타운을 지어갖고 80세가 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간에 여생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 조정. 그래서 요 세 개가 복합적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릉도원이죠.

그래서 그런 경비를 마련하려고 하게 되면은 첫째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될게 뭐냐하게 되면은 해군기지를 유치해서 제주도하게 되면은 상징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상징물이 지금 어디 하게 되면은, 저 남산타워, 그거 하나쯤 생각나고, 우리나라 하게 되면은. 뭐 파리가면 에펠탑, 호주가면은 오페라 하우스. 뉴욕가게 되면 자유여신상처럼, 또 어디 있더라? 멕시코에 그 어디냐, 거기 가게 되면은 예수상이 저 큰~거. 세계 10대, 아니 20대 건축물에 하나 들 수 있는 해녀상을 약 한 60m 높이 정도 이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 그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준비중이잖아요? 해군이랑 해녀는 마침 매치가 되잖아요. 해군하

고 해녀는. 그래서 해녀가 태망을 걸고, 한 손에는 제주 평화의 섬이니까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걸 손에 들고, 그래서 약 60m정도 높이에서 그 앞에는 해저 돔. 지금 잠수함 한번 타는 데는 돈5만원 줘야 됩니다. 근데 제주도 관광객이 학생들이 1년에 80만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개들이 입장료를 한 3천원만 한다 하더라도, 뭐 50%만 거기서 잡는다 하더라도 몇 십 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저돔을 해서 다음은 해녀상까지 올라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구경해서 내려오는 거. 왜냐면 또 크루즈항이 되기 때문에, 복합항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하게 되게 되면은 첫째는 해녀상이 먼저 기억에 남게. 그리고 대한민국 하게 되면은 해녀상이 전 세계에 기억에 남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의 모든 수익금이라든가 그리고 크루즈항이 되게 되면은 또 면세점도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익 몇%, 도에서 마을에 환원시켜서 그 모든 수익이 약 1년에 6,70억. 50억 이상만 되게 된다 그러면 애들 장학금 해결되지, 다음은 실버타운 운영되지, 모든 문화시설 같은거 다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제. 그래서 딱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해군기지가 아니고, 기지가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힌 관광지로구나', 그런 생각이 가게끔. <사례 1>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원해가면서 기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군측에서는 대외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기지"를 표방하고 있었고, 실제 해군기지사업단과 찬성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의 정례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기지시설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몇몇 젊은 주민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마을에 있었으면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호의적인 군의 반응으로 더욱 고양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렇게 해외기지와의 비교를 통해 '안심'하게 되고 이로써 마을기획자로 주체화되는 과정에는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잘 사는 나라) 기지의 외관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기지 주변 주민들의 세세한 경험을 직접 보고 듣기 보다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대한 통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사례 10> 과연 '바당'주민이 해군기지 들어오면은 발도 땅값이 내리고, 굉장히 소리를 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가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고. 또 미국 가서 견학을 해 본 결과, 돈 많은 사람들은 해군기지 옆에만 살고 있습니다.

<연구자> 아, 왜 그런거예요?

<사례 10> 왜 그런고 하민 해군기지 옆에는 뭔가 좋으니까, 배경이 바다가 보이고 모든게, 전망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말이 통하지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통역가가 얘기하니까 여기는 돈 없는 사람 못산대요. 배경이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 와서 투자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어본 결과, 아, 과연 해군기지는 들어와야겠구나.

<연구자> 실제로 샌디에고랑 하와이는 어떠셨어요?

<사례 10> 네. 다 좋아요. [연구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본 결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군기지 옆에는 고층빌딩들이 많더라고. 고층들이. 왜 여기는 해군기지 들어오면은 해군기지 옆에는 가격도 떨어지고 거기 집도 못 짓는다고 하네. "해군기지 옆에 고층빌딩 들어오고 왜 이렇게 개방이 잘되냐" 그러니까, 그 통역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직접 말을 통할 수 없고.

<사례 10>은 '바당'마을 해녀 대표로 해군본부,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샌디에고와 하와이의 군사기지 시찰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군인들로 구성된 "해군기지사업단"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외의 기지들을 둘러보면서 직접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 주민들 10여 명을 해외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사례 10>은 기지 시찰을 통해, "해군기지 옆에는 고층빌딩들이 많더라", "해군기지 옆에는 뭔가 좋으니까. 바다가 보이고 모든게, 전망이 좋으니까 부자들이 여기서 사는게 아니겠냐"는 확신을 얻고 돌아왔다. 이 해녀가 본 것은 해군기지 옆에 있는 고층빌딩이고 이로 인해 해군기지는 안전성과 동시에 돈벌이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이미지로 단숨에 도약(jumping)하였다.

하지만 '보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경험하는 것, 혹은 직접 경험한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보는 것'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대신 기지 옆 고층빌딩이 보증(guarantee)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지 주민과의 대화 속 구체적인 내용 역시 직접 들을 수 없고, 반드시 통역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던 구조에도 불구하고 <사례 10>은 "모든게 좋다"라고 표현한다. 이는 구체적인 기지가 있는 마을주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그 판단 역시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의 상황에 의존한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다. 즉, 군사기지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긴 했지만 여전히 추상화된 이미지로 존

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답 역시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역으로 '군사기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바람과 마을기획자로서의 주체화는 군사기지가 이미지의 형태로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군사기지가 제기한 '마을발전'에 대한 담론은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균열과 모순을 안고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 새롭게 인식되는 군사기지에 의한 폭력

"폭력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통해 가까스로 유지될 수 있었던 군사적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 그 자취가 드러나게 되는가? 또 주민들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는 폭력은 어떠한 형태인가? IV장에서 살펴보았던 "지금의 군대는 옛날하고는 다르다"라는 군인들의 말은 폭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바당'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은 "옛날"의 폭력과 다르다. 때문에 "옛날"에 일어난 폭력이 복제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폭력은 새롭게 인식된다. 폭력은 특정한 시·공간에 따라 상황적으로(situationally)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폭력이 폭력임을 드러내면서 공포와 회유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와, '폭력이 아님'을 통해 정착하는 사회에서의 폭력의 양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이곳'에서 작동되는 폭력에 의해 '바당'주민들의 신체와 땅-바다가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인식되어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IV장에서 주민들을 주체화하면서 한껏 고양시켰던 '발전'으로서의 기지건설담론은 곧 모순과 틈새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군사기지로 인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좌절될 뿐만 아니라 이제껏 유지되었던 삶의 방식까지 붕괴되는 폭력에 부딪히게 된다. 이로써 주민들은 군사기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견해도 점차로 '찬성'에서 '반대'로 옮겨가게 된다.

A. 주민을 부정하는 폭력

군사기지가 경제시설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기지가 마을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부터는 군 입장에서 더 이상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군사적 폭력은 가시화 되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기지건설담론에 내재되어 있던 부정된 폭력이 주민들에 의해 인식되고, 이 과정 속에서 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을에 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원했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생각을 바꾸고 '반대'임을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1. 주민이 대리(代理)하는 폭력

군사기지 건설 계획이 마을에 거론되기 시작했을 초창기에는 주민들 대다수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찬성'의 견해를 가졌었다. 그리고는 前 마을회장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바당'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할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마을에서의 유치안은 어촌계, 해녀회, 마을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26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前 마을회장: 바쁜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죄송하다. 해군기지의 장소선정이 4월 말까지라 시급하다. 이런 기회가 일생에 한번 올까말까 한 일인 것 같다. 화순은 반대하다 지금은 유치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한다. 화순과 위미가 하지 않은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오늘 결정을 하여 내일 마을 회의를 거쳐 신청을 하는게 시급하여 더 많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

강○○: 위미나 화순에서는 3년에 걸쳐 반대하는 해군기지 유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前 마을회장: 국방부에서 위미항에 해군기지로 인해 누리는 혜택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을에 유치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군기지의 조성으로 우선 병원이 생겨 해녀 여러분의 잠수병 등 누리는 의료시설과, 넓어지는 도로망 등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 그래서 해군기지 선정지가 4월말까지 결정되므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선 해녀 여러분과 어촌계원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전체] 마을회의를 거쳐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략)

정○○: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했다가 보상이나 그 외 마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대를 할 수 없느냐?

前 마을회장: 가능하다.⁷¹⁾

이날 회의기록을 보면, 기지 유치를 제안했던 前 마을회장은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이는 다른 마을들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해군기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위미와 화순의 두 마을에서 이전에 반대

71) 2007년 4월 25일 어촌계 총회 회의 녹취록, pp.1~3.

했던 것에 대한 불안과 前 마을회장 말대로 '기회'일 것 같기도 한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前 마을회장이 계속해서 "시간없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날 모였던 주민 86명은 만장일치로 기지유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인 4월 27일 기지유치를 이끌었던 마을회장과 그 밖의 마을 주요 구성원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자, 이를 본 주민들은 마을이 갑자기 외부와 '공식적으로' 연결되면서 이것이 자신의 결정권 밖의 문제로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집에 왕(와서) 텔레비전만 보는데, 4월 26일날 마을회 할 적에, 86명 참석한 거를 150명인강 참석했던 해서 [도청에] 등록했드라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야. (중략) 윤○○[전 마을회장]이는 번듯이 나선(나서서), "우리 부락으로 와주십서", 그렇게 하느디 [기지를] 안 밀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반대가] 힘드는 거야, 우리 부락에서. 그 뒤에 앉은 사람 해너 보이고, 딴 사람은 안 보이고, 몇 명서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해녀회] 대장도 갔을 거고. 계난 난 접수를 해야된덴 막 해도 접수를 허면은 우편으로라도 보내는 줄 알았지 그렇게 도청까지 찾아가서 뭐 딱 나서서 마이크 잡고 "우리 부락에 와주십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몰랐었거든. <사례 14>

더구나 <사례 14>의 지적대로, 마을회의에 모인 인원은 86명에서 150명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같이 생활하던 주민들이 도청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낯선 모습'은 마을에 들어오는 군사기지의 폭력을 어렴풋이 느끼게 한다. 또한 어촌계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前 마을회장이 기지를 '유치'하는 '기회'의 맥락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마을에 와 주십서"라는 말처럼 기지건설을 '요청'하는 맥락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감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는 그 주체가 '주민'인 자신이 아니라 '요청'을 듣는 권력(도청 및 해군본부)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마을에서는 마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4월 26일날 총회가 만장일치 박수를 통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절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지]반대위 출범

을 해서 5월 21일날 이 자리[마을회관]에서 前 마을회장과 협상을 했수다게. 우리는 절차적인 측면을 요구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유는 첫번째가 찬반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자, 2번째는 찬반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듣는 청문회를 하자, 3번째는 찬반전문가, 찬반주민 동수, 언론인을 모시고 전국해군기지를 실사하자, 4번째가 실사내용을 보고하자, 그리고 주민투표하자, 결과에 승복하자, 차후에 일을 서로 의논하면서 하자, 그런 식으로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잘 할려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그때 긴급히 내 놓은 7번째 제안은 해군기지 문제는 서로 추진하지 말고, 추진하게 되면 상호 의논에 의해서 추진하자, 요거만 합의가 됐는데, 이 사항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뭐 대통령 올 때 도지사하고 같이 나가서 "바당'에 해군기지 건설해주십시오", 건의를 했고. 그런 합의과정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前 마을회장에게 마을향약 규정에 의해서 [마을회장 해임건으로] 마을총회 소집요구를 했습니다, (중략) 그때까지, 8월 20일까지 우리 내부에서 4월 20일날 총회 절차를 뒤집기 위한, 한 마디로 진짜 피나는 싸움이라고 봐야 되죠. <사례 15>

<사례 15>를 비롯한 이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주민들은 前 마을회장과 관계된 주민들을 모아놓고, 최대한 외부인들(도청, 해군본부, 시민사회단체)은 배제한 상태에서 주민들끼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前 마을회장 측에서는 이러한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 대신, “대통령 올 때 도지사하고 같이” 의견을 맞추는 것을 택하였다. 이것은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이에 걸맞는 역할(주민들 간 합의)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이를 무시함과 동시에 외부의 힘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이때부터 이를 뒤집기 위한 “진짜 피나는 싸움”을 불러일으켰다. ‘기지에 찬성한다는 것’은 초창기에 알려진 것처럼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당’마을의 ‘주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마을 내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주민들(대체로 나이 많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이었다고 한다면, 6월 19일 주민투표일에는 마을 내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폭력을 느끼게 한 계기가 되었다.

작년 6월 19일날 있었잖아? 주민투표 할 때 우리는 해녀들이 오길래, ‘아 드디어 회의를. 저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있어서 회의 보러 오는구나. 주민투표 하러 오는구나’ 그래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랬어, 나가(내가). 안내를 했어. 그 내막을

마을회관에서 작전을 짜고 온 걸 꿈에도 몰랐다고. 그래서 투표시작 해서 투표함을 탈취해가는 그 사태가 벌어질 때는 우리는 완전 웃겨볼지. 이거 누구짓이겠어? 그 해녀 머리에서 나올 수는 머리거든? 그거는 해군 아니면 도지사 아니면은 시청 아니면은, 지시 내려분거. (중략) 결국은 우리가 '평화, 평화' 하다보니까는 결론은 저놈 것들은 해군하고 도청에서는 이 인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먹는 거야. 애네들 흐트러질까부덴(흐트러질까봐). 차 태왕(태워서) 처음에는 풍경[마을 내 식당, 가명]에서 먹었어. 그 다음에는 월드컵 경기장 가서 먹었고, 그다음에는 신시가지에서 먹고. 그 정도로 밀실작전을 한거라. <사례 5>

6월 19일날 총회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는데 막 700명 정도 뭐 왔다고 했는데, 그때 총회 때 모여서 [총회기] 무산이 돼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안 하고. 마을 감사가 회의 소집해서 이장[前 마을회장]이 회의 시작하자마자 싸움 붙은 건데, 마이크를 뺏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말썽이 나자, 마이크를 빼앗았고, 해녀들이 기표소 부수서 탈취해서 도망가버리고 아수라장이 됐거든요, 회의실이. 일차적으로 그 아수라장이 되어서 한 시간 이상 그렇게 되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감사가 "회의진행을 잠시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그 밤에 서귀포에 있는 인쇄소 가서 투표용지 가서 만들어 와서 재투표를 할러니까 또 다시 [찬성주민들이] 막아서가지고 못하게 했거든요? 못하게 해서 무산됐고. 그러자 감사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도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수다게. 밤 12시가 가까이 왔는데. 그래서 반대에서는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우리 투표종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포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좌석에서 해군기지 반대 서명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만 400명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 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꼈고, 찬성측에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심으로 더 많이 참석했을 걸로 보는데. (중략) 왜냐면 사실상 저희도 해군기지에 대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례 15>

이런 절차적 과정에 대해 문제를 느낀 주민들의 제안으로 2007년 6월 19일 해군기지에 사안을 마을 전체 찬반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투표 당일 찬성측 주민들이 기표소를 부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소동까지 벌어져, 결국은 투표가 무산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일은 해녀들과 기지유치에 앞장섰던 몇몇 젊은 남성

들이 주도했는데, <사례 5>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해녀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획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해녀 뒤의 힘’을 느끼게 된다. 눈앞에서 벌어진 해녀들의 행위는 ‘주민’의 정체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뒤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늦은 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로 남아서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서명을 하게 된다. 마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고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폭력’이었고, 이 때문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반대’임을 ‘선언’하게 된다.

<연구자> [前 마을회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이, 켄당이신데 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사례 9> 해도 돼. 해도 돼. 지금 제사도 같이 안 먹는데. 명절날 오지도 안하고. 나는 처음에는 해녀들 회의 할 때도 가만히 있었어. 마음 속으로는 ‘아, 바당 이렇게 메우는 건 이건 아이다(아니다)’ 이렇게 했었지만은 겉으로는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희 삼촌이 그렇게 하는데 나서지 말라” 했었지. 그런데 ○○○[前 마을회장 이름]이가 “나는 □□□[前 마을회장의 조카이자 <사례 9>의 아들]이를 모른다” 했다고 그랬지 다행.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건 아이로구나(아니구나). 나는 반대다’ 하게 된 거.

해녀인 <사례 9>에게 있어서도 ‘반대’임을 선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켄당 관계인 前 마을회장이 그 관계들을 부정하는 순간이다. <사례 9>는 군사기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마음 속으로는 “이건 아이다(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켄당관계에 있는 사람이 찬성에 앞장서고 있으니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고, 반대를 하고자 했던 자식들을 말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 켄당이 자신들을 “모른다”라고 부정하는 순간 <사례 9>는 “나는 반대다”라고 ‘선언’하게 된다. 이는 <사례 9>가 살아왔던 경험, 역사, 믿음, 이 모두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경험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 맥락에서 ‘반대’라는 선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 제동을 걸고 이에 저항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반대’임을 선언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군사기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눈 앞의 관계, 살아온 경험과 역사가 부정되는 폭력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곧 이은 8월 10일, ‘바당’마을에서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해군기지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前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신임 마을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열흘

뒤인 8월 20일, 해군기지 관련 찬반 주민투표를 개최해, '바당'마을의 유권자인 약 1,200명 중 80%이상의 반대로 마을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확정지었다.

그때 우리도 [前 마을회장] 탄핵할 적에 갔다 왔어. 게넨 그때까지도 닳아보이지는 안혀도(맞는 것 같진 않아도) 한번 해네 동네 따위가 "언니, 아파도 구경만 한번 가보게" 그래서 그것도 못하면 쫘 우지해네(무식한 것 같아서) 마을회관에 갔다왔지. 간혀네(가니까) 암만해도 아니야. 나는 닳아보이지는 안혀고 몇 명 박수청 그렇게 쫘나대. 아무것도 아니고, 박수를. 그날도 박수 안쳐줬주게. 박수 안쳐줬어. 이 녀발이 들락날락 하는데, 뭐하느라 박수를 쳐줘. 게난 엇다 모르겠다, 해넌, 요전 날 같이 온 아줌마[<사례 4>], 그 아줌마 알녁발(위쪽 발)인데, 경한디 처음부터 [반대운동에] 참석한 아줌마야. 그 아줌마. 근디 기["NO 해군기지"]라고 쓰인 노란 깃발을 일컬음 돌(달)아도 보니까 기도 안 달안(안 달아서) 나가 욱을 했어. 기 달라고. 우리 집에도 기 달게. 내 기 안 달렸다고. 그래서 지금 기를 세 개 고라서 (말해서) 줬지. <사례 14>

주민들이 서명행위와 자신의 집에 "NO 해군기지"라고 쓰인 노란 깃발을 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기지가 들어오길 바랐던 주민들이 사실상 기지에 '반대'하는 것임을 자신과 마을을 향해서 공표하는 의식(ritual)이다. 전술했던 것처럼 마을 내의 여러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바당'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 주민들 사이의 관계란 친척이자, 수놓음⁷²⁾을 함께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자, 평생을 함께 지내야 할 이웃이다. 관계가 곧 '자신'인 것이다. 군사적 폭력은 그런 관계를 붕괴시켰고, 더불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도 붕괴시켰다. 그리고 "누구의 켄당, 누구의 갑장"과도 같이 이웃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찬성'과 '반대'라는 이름표를 붙이게 되었다.

친구하나 해녀 하나를 친구를, 죽지 못해 사는 친구가 있어. 서로 비밀말도 하고 서로 인자 지 애기도 친 애기처럼 생각하는 해녀가 있는데 그 해녀하고도 지금 말은 하지만 전화를 안해. 내가 [해녀의] '해'자만 들어도 해가 갈린다. 그니까 좀 참자 우리가. 우리가 돌아[반대]로 돌아오라는 말] 그래도 가이(개)가 단체[해녀회]니까 마음만 반대여도 안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가이(개)를 찢라부렸고, 가이(개)도

72) '수놓음'이란 육지에서의 '품앗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농경을 비롯하여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노동을 교환하는 형태이다(남석진, 1989:205).

그렇게 됐고. 올해 5일계라는게 있었어. 그것도 해녀가 두서너 명이 있어. 우리가 더 많아, '반대'가. 그것도 '반대'가 많아도 해녀가 보기 싫어서 그것도 찢라부렸어. 난 나중에 들어갔지만, 그 계는 한 30년 된 계를 들어가서 노인네들 파토시켜부렸어. '하지마라'. 이런 친목을 해도 한 사람도 우리한테 안 오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는데 무슨 해녀들 들은 계를 해야겠느냐, 찢라버렸어. 그것도. 얼마나 아픈 상처. 다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 후로 동네가 서로 보면 고개를 돌리게 되지, 인자. 옛날에는 지나가도 한 잔 먹자, 밥 먹었냐, 커피 먹었냐. 야 언제 일하젠? 나 가서 일해주젠?(내가 가서 일해줄까?) 그런 말을 했던 동네가 이제는 서로 저거들하고 같이 일하면 성질나니까 눈치 보멍 같이 일하기 싫어. 그 정도라. 일도 갈라져부러. 제사도 안먹으러 가지. 갑장네 잔치도 안먹으러 가지. 나도 마찬가지로. 찬성네 잔치 안먹주게. 옛날에는 동네잔치네 가자, 그래서 어울려서 주고받고. 근데 지금 그계 없어. 주고 받고가 없다 이거야. 동네 잔치, 제사. 우리 형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집도. 자기 셋아버지(작은아버지)를 목에 호미걸어붙켄 했던게 그놈[<사례 2>]이야. 피 한방울도 안섞였다 그랬어. 나리태풍 때 해군 빌러 갔다가 피 한방울도 안섞였다 그랬어. 그럼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면 지네 아방은 어디서 나온거고(웃음) 그런 상태다이. (중략) 아무리 밭을, 미깡(꿀)을 못따서 싹어부러도 난 찬성측 손은 안빌주게. 안부린다 이거야. 또 가지도 앓을뿐더러. 그 정도로 이제는 엉어리가 진거라. 이 엉어리를 풀 사람은 단 정부지. 지금은 이제 김태환[제주 도지사 이름] 도독놈한테 믿지만은 그 놈이 완전히 넘어갔으니까는 이제 는 여기한다지만은. 이거를 어떻(어떻게) 풀거라. <사례 5>

이렇게 찬성-반대의 이분화된 도식으로 새로 짜여진 마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바당'마을에서의 군사기지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유치신청'을 통해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반대주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찬성주민들에게 돌리게 된다. 이로써 자취가 감춰진 폭력에 의해서 주민들은 분열되고, 군사적 폭력은 자신의 존재를 감출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책임을 찬성주민들에게 모두 돌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민들에게 있어서 마을주민 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으며, 그것을 파괴한 (보이지 않는) 힘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주민들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현혹'된 것, '동원'된 것으로 지칭하였는데, 이 말은 역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 '뒤에' 권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그것이 현재의 자신들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에 의해 조정될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 이야기 속에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 내 생각인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내 생각'임을 강조해야만 내 생각일 수 있는 상황, 즉 자신의 견해를 묵살시키고 포섭하는 '뒤의' 더 큰 힘이 있을 것이라는, 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것이다.⁷³⁾

보라[연구자 이름]도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사자가 아니니깐 몰라.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절대 몰라. 자다 깨나면 이 생각백엔 안나. 자다 깨도. 하.. 이거. 참.. <사례 19>

<사례 19>의 이야기 뿐 아니라 주민들은 연구자에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하였는데, 이런 폭력에 대한 감각은 <사례 19>가 지적한 것처럼, 구름비마을의 '주민'이 어야만 인지될 수 있는 감각이다. 이는 그만큼 군사적 폭력이 철저하게 내부화되어 일상적 삶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고 이는 오랫동안 살면서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정부분 번역불가능한 경험임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이렇게, 비가시화된 군사적 폭력은 그 원인을 철저하게 내부(주민)의 문제로 돌린다. 그것이 대부분의 '기지문제'가 국가-反국가(주민)의 구도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지역들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고유경, 2005)과는 다른 점이고, 이것이 주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땅-바다에 대한 주도권의 전도

'바당'마을의 해군기지는 초창기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이후에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이러한 군사적 폭력이 작동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과 땅-바다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73) 대표적으로 <사례 5>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니 우린 그저 영(이렇게) 생각대로 우리 누가 와서 '너 똑(꼭) 반대해싼다(반대해야 한다), 찬성해싼다, 허고 [기지가] 뭐가 좋으냐' 라는 질문 같은 것도 안해잉. 누구가 그래도 '반대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냥 나 생각에는, 이걸 나 생각으로만 이적거정(이제까지) 말고 나간거라잉. 밀고 나간게."

우리 2,30년 못하지만은, 이 서귀포 수역관내에서는 '바당' 어촌계가 제일 면적이 넓어요(넓어요). 지금 해군기지 들어왔다 해도, 우린 어느 정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 기지 안에만 작업 못하지. 그러니까 해군기지는 10만평이기 때문에 10만평을 떼줘도 우리는 얼마든지 작업[물질]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작업해서 밥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군기지를 유치하라고 했고. 전 바당을 매립하는 게 아니고, 10만평 기지 안에만 매립할거니까 그나마 작업할 곳은 있어요. <사례 10>

군사기지가 처음 '바당'마을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해군본부에서는 총 10만평(바다 매립 6만평, 부지 매입 4만평) 규모의 기지를 발표했었다. 삶의 양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일부의 변형을 통해 돌아오는 수익에 대한 기대는 주민들과 땅-바다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땅-바다는 농사짓고 물건⁷⁴⁾을 채취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소득원이자 주민들 관계의 매개이자 삶의 터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연은 삶의 자원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간(cultivation)해야 할 투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사기지가 한정된 영토 내에만 들어선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이 환영했던 터였다. 기지의 규모가 확정되어 있고, 이것이 주민들에 의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면 자연은 당위적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떼 줘도 될" 교환가치를 지니는 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지설계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해군기지는 바다 매립을 더 늘려 총 12만평으로 확정지어지게 되었다.⁷⁵⁾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군사기지라는 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확장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시설이며, 그것은 토지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군사기지와 땅-바다에 대한 의미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첫번째 기지가 들어오면 [손으로 가리키며] 이만~큼만 들어온다 했어. 그러다가는 8만평에, 12만평에, 15만평에, 18평에 해내니까닌 우리가 모양이 되싸져부렸던거야(뒤집어져버린거야). <사례 13>

74) 해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성게, 전복, 소라 등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

75) 해군본부(2007), "해군기지 사업추진계획".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기지가 들어왔다 하니까, 바다 몇m 매립해서 한다하니까, 경하면 뭐 그때는 기지가 뭔지도 모르니까, '바당' 바당에 하는 거니까는 (나는) 바당에 관계도 어서(없어). 나는 해녀도 아니니까. 바당에 관계 어서. 갈 일도 없고, 허니까. 바당하는 거는 해도 괜찮아, 나 생각에잉. 그렇게 해서 허든가 말든가 관심을 아이 둔거라.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뜨이 책자[기지 홍보 책자] 나오기를 발도 얼마 들어간다. 게난 1차분으로 우리 발이 들어가는 거라. 1차분으로. 이제 만약 기지가 들어온다면은 우리 발은 1차분으로 들어가게 돼서. 게난 이제 어떤 사람이 영(이) 발은 우리 큰딸이 영자[가명]라. "영자어멍네 발은 들어가도 좋우파?" 허난(하니까) "무사(왜)? 들어간 좋아? 난 반대하켜, 우리 발 들어간다 허면". 경한(그래서) 나가 반대하게 된 거라. 바당만 호끔만(조금만) 요렇게만 들어가불면 난 내불지, 난 진짜. 경해신디(그랬는데) 바당만 호끔(조금) 해봐단(해봤다가), 이척도 고랐지만은(이번에도 말했지만은) 요만이 허켄하당(한다고 했다가) 또 요만이 허켄하당 요만이 널 케게가난(넌허가니까), '아 이제는 조금만 이제 시작만 해면은 점점 넓히는구나, 이러면 안되겠다. 우리 발만 들어가도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 될거라.' 경한 생각을 했지 다햐(그런 생각을 한 거 같애). <사례 4>

기지의 확장은 땅-바다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초창기 군인들이란 추상적인 '관광객'이거나 '소비자'였다. 그것은 곧 이들이 마을에 들어온다 해도 그것은 '방문'의 맥락이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결정권은 주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self-determination]. 때문에 한정된 땅에서 주민들이 관리가능한 수준이었다면 군사기지는 건설해도 괜찮은 것이었다. 그러나 군인들이 땅을 둘러싸고 자신의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추상적이었던 대상이 구체적인 의지(will)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의지가 강화될수록 자신들의 존재와 권한이 부정될 수 있을 거란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지금 이제 거기 처음 할 때 우리 발도 구역 조금만 땀기고 다 찢라 났어. 겐 다 뒤에서 들락하니까 그래서 1/3을 땀겼어. 그 다음에는 우리 알넉발(앞쪽 발) 꼬불꼬불했어. '아 이거 착수만 해버리면은 처음 그대로 찢르는구나', 나 생각에. 경했는디 올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 1월달에 끝났잖여? 그거 선거 끝난 뒷날 부터

는 개표 끝나니까 이거[해군기지] 또 나왔지. 나오니까 지금 그거보다 우터래(위로) 싹 확정이 올라왔어, 지금 발을. 이제 우리 발을 찢려져 있던 것들이 처음 찢려진 대로 찢린게 아니라 더 우터래 싹 올라왔다고. 게난 지금 착수영 시작행 해 가면은 이쪽길 안쪽으로는 다 들어가. 찬성하는 사람은 그것도 안허고[모르고] 이녁까지(지금까지) 우리 발 안들어간다고.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가면은 발 몇통 몇호 하면은 어디까지. 우리는 몇 평인지 할 수도 없는데. 이 할망들. 배운 것도 어신(없는) 할망들이. 우리는 선거 끝나고 갈일 있어서 [아들이] 가서 봤던 모양이라. 지금 그것만도 아니야. 여기 길이 없잖아. 길 뻗 때, 발은 작은 발인데 그거 찢랑 나가면은 우리는 지금 노숙자로 나서 그네 길에 얹게 생겼어. 마을 팔아먹는 것도 애쌌컨디(애달픈데) 길에 나얹게 됐어. 그 발영 강 보상 받으면, 보상은 얼마줘? 그 발 그 보상 받으면 [다른] 발 살 수도 어서(없어). 어디 가서 사. 발을 살 수도 어서. 완전 이거 백성 죽이는 거지 살리는거 아니. 노숙자 만들어 길에 두고 어디 주워온 사람 마냥 살크라(살게 될 거라). 나 생각은 경해(그래). 발들도 영(이렇게) 돈 많이 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 발 들어가고 하면 노숙자 돼서 길에 얹게 생겼어, 지금. 발도 찢그막한다. 지금 우리 하우스 발이라도 지금 마늘 심고 있주게. 그 마늘 심은거 돈 해봐야 돈 2,300만원 나집디까? 그것백엔 안돼. 그거고 찢그막한거들랑 하니까 돈 수입이 없어노니까 당최 살 수가 못돼. 게난 아프단 안행(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같이 막 반대하는데 참석하고 싶어도 내 몸이 허락 안해서 못다니는 거. <사례 14>

<사례 14> 역시 동사무소에서 직접 토지 관련 자료를 떼어보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지예정 부지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보상’이라는 것은 땅을 완전히 교환재로 봄으로써, 땅에 대한 권한을 주민 자신과 유리시키는 행위이다. 때문에 기지가 점점 확장되고 이에 대한 대가는 보상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땅-바다를 통제 할 수 있는 권한,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조건, 이 모두를 부정함으로써 “노숙자 만들어 길에 두고 어디 주워온 사람 마냥 살게 될 것 같은” 폭력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편, Ⅲ장 지역개관에서 살펴보았듯, ‘바당’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는 자기 명의의 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알음알음으로 얻은 땅에 소작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렇게 <사례 14>와도 같이 이렇게 땅을 조그맣게라도 소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돌아서게 된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때문에 군사기지로 인한 폭력은 인맥과 관계로 유지되었던 마을을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효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제주도 전체가 돌아가는 건 거의 외지인 소유예요, 땅이. '바당'도 마찬가지고. '바당'주민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팔고. 근처에 해안에 밭은 꽤 많이 외지인들한테 팔린 상태고. 지금 해군기지 예정지는 외지인 소유가 한 절반 이상 될 겁니다. 여기 주민거 반, 외지인 반. 외지인이라는 건 무슨 뭐 부동산업자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 살다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다보니까 처분을 바라고. '바당'이 유원지로 묶여있어 가지고 땅 거래 자체가 안되니까 이참에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나머지 찬성하는 분들은 <사례 1>

특히, <사례 1>의 지적대로 해군기지 예정지만 놓고 보아도 외지인 소유가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땅이 없는 주민들은 기지를 '유치'라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지의 확장으로 인해 '반대'로 돌아선 주민들을 이 '찬성'주민들을 "건달" 혹은 "마을 팔아먹은 놈(매향노)"이라는 비난을 하게 된다.

그니까 찬성들은 따지고 보면, 돈. 당장 생기는 돈. 내 손에 들어오는 돈. 경하고 (그리고) 나중에 벌어들일 것도 어신(없는) 사람들. <사례 4>

경허난(그리고) 이쪽에 1차로 들어가는 땅이 이신(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찬성은. <사례 13>

그럼 그 찬성은 다 소작하는 사람들인거 마씨? <연구자>

그렇지. 소작을 하거나 건달 그저. 건달이지. 그런 사람이 많아. <사례 4>

이녕(이렇게) 노력을 하면 될건디 노력을 안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날도 독놈이지 날도독놈. 마을 팔아먹는 도둑놈. <사례 13>

[찬성주민은] 한 평도 없는 것들이. 땅 가진 사람들도 결사반대 하고 있잖아요이. 뭣도 모르고 막 오는게 좋다고. 대환영한다고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해놨주. 이거는 매향노인거주. <사례 8>

이렇게, 군사적 폭력은 땅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만들어내고, 주민들을 이러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 내의 유대는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고, 폭력의 원인(국방력 강화와 이를 현실화할 군사기지 증설)은 제거된 채로 주민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 도덕적 비난을 하게끔 한다. 이것이 '바당'마을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폭력의 핵심이다.

3. "자치도야? 망치도지" : 자율권을 박탈하는 '자치'

군사적 폭력은 제주도 내의 일상적 권력체계와도 연결된다. 제주도는 2001년 'No Visa, No Tax'를 내세우며 외지자본과 관광객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었고, 2005년에는 국방과 사법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일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체계를 바꾸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제주도를 '전환'과 '새 시대'라는 말로 수식하는 담론들이 현격하게 늘어나기도 하였다(송상순, 2002; 김진호, 2000; 양길현, 2006).

그러나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어, 아직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검증할 수 없었던 자치도 체제는 군사기지 건설문제로 인해 그것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때의 '자치'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권을 갖겠다는 것인데, 토대가 갖춰져 있지 않고 외형만 바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반복'한다.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한·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며 제주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했고, 2014년 제주 서귀포시 '바당'마을에 들어설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을 거론하면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이고,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복합시설로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⁷⁶⁾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회의의 참석 차 제주도에 방문하면서 한 이야기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 핵심부처의 관계

76) <제주의 소리> 2009년 6월 3일자 기사, "李 대통령, 해군기지 언급 '어떻게' 나왔지?... '설왕설래'" 참조.

자들은 제주도에 한 번 씩 내려올 때마다, 도내의 가장 쟁점적인 사안에 대해 ‘확정’을 내리는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제주도 내 기관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 갈까?"라며 으레 대통령의 ‘한 마디’에 주목한다고 한다. 제주도가 ‘자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는 정치형식은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인 것이다.

또 한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군사기지 건설문제로 인해 특별자치도 체제라는 것이 실제 무엇을 향해 ‘열려 있고’, 무엇과의 대비를 통한 ‘새로움’인지를 깊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이 특별자치도가 지금 서귀포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거가 그런거라. 여기 사람들이 [자치도 전환을] 찬성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냐. 왜 그거를 했느냐. 이상한 것만 밀어붙이고. 여기 사람들도 제주시 가서 1년 살면 여기 내려오지 안해. 절대. 대학도 여기서 통학하는 생각하는 애 절대 없다고. 한번 시에 가면 여긴 안 오지. 못 살지.<사례 11>

<사례 11>의 지적처럼, 특별자치도 체제로의 전환은 ‘바당’마을 뿐 아니라 서귀포 주민들에게 하나의 기회였다.⁷⁷⁾ 그러나 군사기지 문제를 통해 경험하게 된 현재의 자치도 체제는 “이상한 것만 밀어붙이는” 행정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곧 ‘유치’로 대표되는 제주도정의 정치방식에 대한 비판이자, 이것이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귀포에 도움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도지사라는 직위는 특별히 공·사 두 가지 영역의 정치를 다 잘해내야 하는 위치이다. 이를테면, 도지사는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출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정도이다. 지역의 정치가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띄기는 하지만,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모두가 알고 보면 켄당”인 관계망으로 인해 이런 방식의 정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도지사의 권력은 형성되고 유지되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 도지사가 자치도 체제로 바뀌면서 “제주도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유치’를 통해 ‘자치’하고자 하는 도의 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게 되었다. 자치도 체제로 전환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제주시·서귀포시의 시장직이 투표에 의한 선출직이 아니라 도지

77) 특별자치도 체제는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에 의해 임명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기초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연구자와의 인터뷰 당시 군사기지담당 공무원이었던 <사례 B>는 군사기지 ‘유치’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어 2009년 현재 재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민들의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제도적 틀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적 통로도 함께 잃게 되었다.

지금은 계약직 하나 채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부 저 태환이[제주도 도지사] 결제 아니면 없어. 시장이나 개발공사나 거기 사장 누구냐 그 사장 맘대로 못해. 맘대로 절대 못한다고. ‘바당’에 삼다수 근무하는 아이도 하나 있는데, 김태환이 아니면 계약직도 절대 못 들어간다고. 우리 반대측 도와주는 관(官)이 하나 없지. 전부 적대적이고. <사례 19>

변화된 자치도 체제는 <사례 19>의 지적처럼 도지사의 권한이 일개 기업의 “계약직 한 자리”로 대변되는, 아주 미세한 곳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권력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대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말할 공간을 점점 박탈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사례 4>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도지사도 우리 가면 만나줄경. 해결해줄경 해도 가면은 도망가불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사례 13> 그니까 요작이(요번에) 데모 갈 때도 있잖아. 우리 그걸로만 생각해 보면 될거 아니. 다섯 발자국 물러서나멘(물러서면) 기자회견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섯 발자국 물러서나니 기자회견 못하고 [공무원들이] 역적모의했잖아. 역적모의 하니까넌 또 열 발자국 물러서나멘(물러서면) 기자회견 해주겠다 하니깐 그 사람들 생각엔 그거는 영(이렇게) 된거 아니야. 우리는 동 굴럼드레 물리쳐놓고 이제 데모를 해도 우터레(위에) 올리지 못한다[제주도청 안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한다는 뜻]. 열 발자국 물러서면 기자회견 해준다고. 그때 몇 사람이 뒤에 서났어. 못 나가게. 열 발자국 물러서면 우리가 데모를 해도 우터레(위에) 올리지 못할거니까는 경해도 기자회견 못하겠다. 내쫓으니깐 우리가 딱 들어앉으니까는 사람들이 “딱 그거 옳다”고. 박○○[기지담당 도청 공무원]가 또 역적모의 해서 기자회견 한거라.

<사례 4> 경 했어(그렇게 했어). 그때 우리가 “나가라” 하는데 열 발자국 물러서

해실 때, 물러섰으면 기자회견도 못하고 밀릴락 혈거라. 내쫓힐령한거라. “3보 나가면 나가고, 또 10보 나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내쫓힐려고 한거 아니냐”. 게난(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데 따라고(같이 따라서 하고).

<사례 4>와 <사례 13>은 해군기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있는 날(2008년 9월, KDI발표) 진행된 항의 시위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통해 현재 도청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은 기지건설 철회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나줄경 만나줄경 하면서도 세 발자국, 열 발자국 물러나게끔”하는 권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데, 전술한 대로 한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제주도에서, 표면적으로는 저항하는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한다.⁷⁸⁾ 때문에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하지는 못하고 눈 앞에서는 끊임없이 “만나줄경, 해결해줄경”이라는 약속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약속은 갈등적인 상황을 무마하는 방식으로써만 활용되면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청에서는 “국책사업을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선전을 하고 있었지만, 후에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국책사업이니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음”을 들어 기지 건설을 강행하였다. 도 내에서는 여론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라는 정치적 명분은 취하고, 저항에 대한 책임소재는 국가에 떠넘김으로써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공간의 공백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시위 도중에 나온 “자지도야? 망치도지”라는 이 말은 주민(제주도민)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치’를 말하는 모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 ‘유치’를 통한 ‘새로운 삶’은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의 말을 차단하고 있었다.

78) 대표적으로 <사례 12>는 도청 앞 집회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도청 앞에서 순경들 사람으로 해가지고 바리케이트 쌓았을 때, 우리 천막 농성할 때 나도 그 날 문밖(전부) 까지고 했는데, 그 앞에서 순경들 잡고 막 할 때 나중에 도청 직원인데 가이(개)가 나를 막 [위로] 올리는 거야. 나도 그때는 막 흥분이 된 상태기 때문에 몰라봤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 개가 군대 동기라는 거야. 나 동기, 이름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싸울 것 같으니까 나를 뒤로 끄집어 내가지고 바깥으로 같이 나온거라. 경하고(그렇게 하고). 또 경찰에 정보와 직원 중에 아주 가까운 사둔뽕 되는 젊은 아이가 있어. 데모할 때는 나 주위만 맴돌아. 혹시나 싸우다가 다칠까봐 해가지고.

B. 주민을 대상화(objectification) 하는 폭력

군사적 폭력이 주민들을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당'주민과 땅-바다는 이러
이러 하다"라고 하는 지식을 마을주민들보다 더 우월하게 가지고 있어야 했다. 더
욱이 군사적 폭력은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던 핵심으로서의 "~이 아닌 군대"임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주민에 대한 대상화와 주체화의 이중과제를 수행해야만 했
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마을기획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가만히 있
길' 요구하는 모순을 낳거나, 혹은 '군사적 지식'이 한 평생 익힌 주민들의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을 장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 한계와 틈새가 주민들
에 의해 인식되게 된다.

1. '가만히 있어야' 가능해지는 마을 기획

'바당'마을에 기지건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고자 했던 주민
들은 이것을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로 여겼다. 때문에 주민들 중 일부는 혹시 이
계획이 무산될까 싶어서 마을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군인들에게 넘겨주며 자신을
이 권력에 맞추었다. 그리고 한동안 기지건설계획은 이런 주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거[마을기획] 해보지도 않았고. 신문 하나 보다보면, 아, 이거 우리 동네에 하
면 좋겠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라도 좀 [우
리 스스로] 구체화시켜보다 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찬성하는 주민들
은 군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다 알아서 해준다". 누가 알아서 해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해군하고 다. 요번에 박국장[기지담당 도청 공무원]이 얘기한 개발사업. 얼
토당토 않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임대업자만 들어가서 장사하고, 우리
랑 무슨 상관이예요? <사례 1>

그러나 <사례 1>의 지적처럼 국방부와 제주도청이 약속한 보상과 발전계획이
공개되고 보니 이는 기지가 '유치'를 통해 건설되는 것처럼 마을발전 역시 외부의

시설과 사람들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초창기, 기지가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출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군과 대면하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가 그것이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군사기지라는 것을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아가게 된다. 마을의 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나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다.

군에서도 지금 저를 '해군의 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요구조건 빨리 대답하라고 하도 회의 때마다 주장을 해가지고. (중략) 그 군인 하나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면 반대위로 가지 왜 여기서 이러느냐"고. [나는] "반대로 가나마나 너무 하는거 아니냐. 처음 할 때 해군은 굉장히 엘리트들이고 멋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너 같은 해군이 아마 전체를 욕먹이는 것 같다.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그렇게 사탕발림해가지고. 내 입을 틀어막아서 나로 끝나는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 때 해결을 해버려야 쉽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공격을 하면 너는 죽었다. '바당'주민들이 지금 찬반으로만 이렇게 하니깐 지금 이 상황인데, 나중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면 너는 감당하기 힘들꺼다" 그렇게 얘기했죠. 차라리 나 혼자만 있을 때 훨씬 편하지. 에이고. 참 힘드네요. (중략) 지금 사업단 중에 대령님 하나 계시죠? ○○○ 대령. 그 사람은 겉으로 보는 거 하고 뒤에 독한 면하고 양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철저한 군 입장에서만.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실질적으로만. 그 사람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 [<사례 1>의 이름], 해군의 적이다." 자기네끼리만 얘기했지만, 그쪽에서도 저한테 얘기해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고]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여튼 자세를 좀 낮추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러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더한다." 성질머리가 못돼가지고. 계속 회의 때마다.(웃음) <사례 1>

<사례 1>은 기지 유치를 앞장서서 했던 주민 중 한 명이다. 군에서는 기지가 마을의 발전에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기획 역시 주민들에게 맡겼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찬성 여론이 어느정도 안정화되자, 군인들은 "앞과 뒤가 다르게" 움직

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사례 1>이 본래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마을기획에 대한 내용을 생산하자, 급기야는 해군에게 "공공의 적"이라는 위협까지 듣게 된다.

그래서 해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해군하고 엄청 싸니다(싸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군이 뭐 개인적으로 이담에 완공되게 되면 무슨 공무원 자리 하나, 나 그거 필요없다. 나 그거 노려서 찬성하는 사람 아니다. 나는 사람은 오로지 마을 발전, 오로지 사람만 많이 유입되라 이거야. 그러면 난 식당이나 하겠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아라. 사람만 많으면 먹고 살 길은 내가 찾겠다. 대신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에 약속했던 부분, 그것만 지켜라. 그것만 지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해군들은 지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놈들이 요새 하는게 지금 마음에 안들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투표함 뺏아온거 내 혼자 다했어요. 4,500명 되는 인원예 나가 쳐들어가지고 나가 다했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내 혼자 다했어요. 이제 해군놈들 목적 달성 해놓으니까 술술 빼져나갈라고. 해군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왜냐면 자꾸 따지니까. [우리가 해군한테] "니네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에 우리한테 조감도를 보여줬던 그대로 해달라". 근데 해군들이 술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꾸 조감도가 축소되는 거라, 이게 공동구역이. 뭐 4만평이었다 2만5천평으로 딱 줄었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가만 있어도 해줄건데, 조용해라" <사례 2>

<사례 2>는 앞선 6월 29일 마을총회가 무산되게끔 하는데 앞장섰던 주민들 중 한명이었다. 보통 군사기지가 마을에 들어올 때에는 지역의 토호들과 결합해서 여론의 주도권을 쥐고 반대급부를 취하였던 반면, <사례 2>의 경우에는 군인들이 "자리 하나"를 제시하며 포섭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마을 전체의 이득을 걱정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기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례 2>는 "술술 발뺌을 하는" 군인들 앞에서 무력해지고 만다. 이렇게 마을 기획을 먼저 제안했던 군인이 그것을 다시 제한하는 것은, 군사적 폭력에 의한 주체화라는 것이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신념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마을 기획자로서의 한껏 고양되었던 자아를 분열시키는 것이다(호미 바바, 2002:171).

과연 이게 우리 형님이, 형님 혼자 하는 생각 뜻대로 되지 않거든. 물론 우리 형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 일 같으면은 나는 우리 형님을 믿어보고 싶어. 우리 형님

이 전부다 나중에 관리나 모든 뭐 우리 형님 싸인 하나에 모든게 이뤄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형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말이주. 동생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거든. 하나의 과정에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 형님은. 해군기지가 들어서기에 하나의 과정에 필요한 사람이지, 우리 형님은 그거의 모든 책임자는 아니. <사례 7>

<사례 7>과 앞서 인용한 <사례 2>는 형제관계인데 형은 찬성측에서, 동생인 <사례 7>은 반대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례 7>은 "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어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마을기획이 주민들을 "하나의 과정에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반대하는 마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송○○이나 단장[해군기지 사업단장]이나 만나더라도 나는 찬성쪽 하는 사람들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로, 말로 하는 거는 난 믿을 수 없다. 어떤 사문서가 되든 기안문을 해가지고 갖다 쥐가지고 해야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지, 말로 얼마 보상해주겠다, '바당'마을에 얼마 보상해주겠다 하는 거는 안 해줘도 그만인거 아니냐. 특히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송○○이든 단장이든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바당'마을에 적을 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초기 단장도 1년도 못가지고 몇 개월 하니까 단장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발주되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단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이 지금 단장이 '바당'마을에 "엄청 좋게 해 주겠습니다", "뭐 갖다 주겠습니다", "갖다 주겠습니다" 하는데 문서가 없는 한은, 이 단장이 가버리고 새로운 단장이 왔을 때 이 단장한테 가가지고 "직전 단장이 '바당'마을에 뭐 해 주겠다 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면은 "난 할 말이 없소".

<사례 12>

때문에 <사례 12>는 군인들이 말하는 것을 확정짓고자 이를 문서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에 대해 군인들은 계속해서 말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는 군 근무체제의 특성을 잘 이용한 것이기도 한데, 군인들이 주민들과 협상하다가 갈등이 유발되기 시작할 때 즈음 책임자를 바꾸는 것이다. '바당'에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주민과 달리 제도적으로 '떠남'이 허용되는 군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을 대상화(objectification)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바뀐 책임자는 주민들과 다시 "갖다주겠습니다"라는 '말로' 약속을 하면서 주민들을 안심

시키고자 하였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주민은 기지건설의 진행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확답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였다. 군사기지가 부여하는 마을 기획자의 역할이란, 이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반복되고 번복되는 약속 속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점차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2. 주민과 땅-바다를 '안다'고 하는 것

'바당'마을이 '적정지'로 발표되기 전후로 '바당'마을과 주민은 국방부의 관찰대상으로 설정된다. 이때 '바당'마을 환경과 주민들 반응 모두를 살펴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적정지'가 될 수 있음을 보충하는 자료들(data)이 끊임없이 생산되게 된다. 마을에 상주하는 군인들은 "과거와는 다른 기지·군대"를 표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 역시 그들에게 있었고, 그만큼 현지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 그에 대해 납득과 안심을 시켜야 할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마을 주민들과 마을환경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만 그 목적이 완수되게 될 것이다.

<사례 18> 나가(내가) 잘못 말하면 안 될거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는거 아니(아니야)? 저분[<군인>]한테 해. 저분이 더 잘 알텐데. (중략)

<연구자> '바당'의 해녀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사례 18> 원래는 총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작업 딱 하시는 분은 100명 정도.

<연구자> 아 그럼, '바당' 해녀하고 ○○[바당 옆마을] 해녀하고 비교했을 때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군인> [갑자기] ○○마을이 더 젊지.

<사례 18> 거의 비슷할텐데. ○○이 상군이 많아? 그렇지도 않을텐데?

<군인> 아니 여기가 연령대가 높아. 나가(내가) 다 조사해봤어.

<사례 18> 우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난 생각되는데.

<군인> 여기는 물질 안하는 분들이 70대 이상이 많잖아. 저기는[○○마을] 60명 중에 상군이 30명이고 여기는 100명 중에 상군이 3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면.

활동하는 사람을 치면 여기가 나이가 적어보이지만 전체 해녀 등록된 사람을 봤을 때.

<사례 18> 아, 전체를 봤을 때는.

<군인> 행정적인 개념으로 봐야지.

<연구자> 저, 대령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해녀삼촌[<사례 18>]과 일 대 일로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군인> 아 저는 아무 관계없어요. 아, 부담드릴까봐? 얼마든지.⁷⁹⁾

연구자가 마을의 한 분께 추천받아 해녀인 <사례 18>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었는데, 거기에는 이미 위 대화에 등장하는 군인이 와 있었다. 그리고 <사례 18>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 군인은 <사례 18>이 돌보고 있던 손자를 받아서 인터뷰 내내 돌보고 있었다. 위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이듯, 군인과 <사례 18>은 말을 놓을 정도의 친밀함이 있었고 <사례 18>은 군인을 신뢰하는 관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사례 18>가 말한 "실수할 것"에 대한 우려는 군인의 감시하는 시선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해군기지를 지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한 그만큼 자신의 언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언어를 잘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걱정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편 이 군인은 “행정적 개념”을 들어 해녀보다 더 해녀에 대해 “잘 아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을 지배하는 권력은 명령적이고 미리 단언하며, 객관주의를 문화적으로 빌려쓴다(Vizeno, 1999)는 걸 의미한다. 또한 주민들을 ‘타자’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인식되고 지각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는 것(바바, 2002:154)도 알 수 있다.⁸⁰⁾ 이러한 위계적 시선은 상대의 몸짓과 사고를 정의하고 역사도 정의한다. 이렇게, 영토를 대표하는 주민을 조사하고 그들이 어떤 류(類)의 존재인가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이러한 작업은 영토와 주민을 국가에 등기(登記)하는 것(도미야마, 2009:106)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으로 군인들이 주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하게 ‘바당’마을의 지형에 대한 파악도 해야 했는데, ‘바당’ 앞바다가 ‘적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왜 이전 위미와 화순이 아닌, ‘바당’마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야만 했다. 그리고는 ‘바당’마을에 있어서의 최대 쟁점인 환경적

79) '바당'마을 참여관찰 기록.

80) 연구자가 해녀들을 소개받고자 기지유치를 이끌었던 前 마을회장을 찾아갔었는데, 연구자가 들은 가장 처음 이야기는 "해녀들의 얘기는 들을 거 없어요"라는 말이었다.



<그림 2> 해군이 밝힌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직간접 피해 영향권. 출처: 제주의 소리

피해, 즉 Ⅲ장에서 밝힌 바대로 '바당'마을 앞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연산호 군락(천년기념물 제442호)에 대한 관찰과 이에 대한 입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해군측에서는 “20회 이상 바닷속 조사를 하였다. 산호는 고사하고 모두 모래 뿐, 해초류조차 서식하고 있지 않다”⁸¹⁾라는 발표를 하였고, <그림 2>와 같이 해군기지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권을 설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보상의 정도를 정하고자 했다. 이 자료들은 군인들 스스로가 마을환경을 잘 아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군인들 자신이 갖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⁸²⁾

그러나 이 바닷속을 “손바닥 안처럼 알고 있는” 해녀들은 이런 지식이 전혀 전문적이지 않음을 몸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해녀들은 해

81) 해군홍보책자와 그밖의 인터뷰 내용들에서 반복적으로 발표한 내용.

82) 프란츠 파농은 이를 식민주의의 '사물화'(objectification)라고 언급한다. '그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상투적인 문구는 이 사물화가 매우 성공했음을 나타낸다. 즉, 그들을 정의하는 몸짓이나 사고를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방식의 구도 속에서는 어떤 문화의 대결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Frantz Fanon, *Pour la Révolution Africaine*, Maspero, 1964. 도미야마 이치로(2009:170)에서 재인용.

저의 지형도, 조류와 풍향의 방향과 세기 등을 아우르는 지식과 함께 세대 간 전수를 통한 몸의 경험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고광민, 1996:71; 유철인, 1998:114).

<사례 9> 등대 앞에 밀물이랑 썰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물이 돌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 그래서 가끔씩 사고도 났주게. 경해(그래서) 우리도 줄을 묶어서 작업해주게. 우리 물질하다 보면 [산호가] 한 번씩 봐져. 경 해신디 산호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크라(몰라). (중략) 산호 이식해 불면 살아나정 못혀. 이게 바당이 찰랑 찰랑 하멘, 밀물이랑 썰물이 나는 곳에 살거나 땅에 사는 식물이면 몰라도, 거기서 사는 산호는 접해노면(이식해놓으면) 금방 죽어. 근데 해군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을 사람들을 무시했으면 경 고라점저(그렇게 말하냐). 그 무식한 사람들 '바당' 사람들을 어떻게 봐시면 경 하멘(그렇게 하냐). 정말 나쁜 놈들.

<연구자> 찬성하시는 해녀들도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거 아니에요?

<사례 9> 아이고. 알다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하지도 못할커.

해녀들이 한 평생 물질을 하면서 익힌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은 산호는 생태적으로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특히 조류에 민감한 생물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였다. 이로써 '바당' 앞 바다에 방파제를 건설해서 물의 흐름을 막게 되면 산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므로 기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조류가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고, 이는 기지반대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⁸³⁾ 그래서 주민들의 이러한 지식들은 해군이 "연산호 군락이 존재함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말을 반복하게 하는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⁸⁴⁾⁸⁵⁾

83) 이 바닷속 조사는 관련 행정공무원의 임회 하에 해군측과 마을주민측 조사단이 동시에 입수해서 찍은 사진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닷속을 20번 이상 들어가서 다 안다"고 주장했던 군인은 물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되서 지친 표정으로 나오는 바람에 마을주민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해프닝이 되었다.

84) "해군 측은 산호초는 있으나, 매우 적다고 했으며, 친환경공법을 동원해 공사할 예정", <제주의 소리> 2008년 9월 25일자 기사 참조. 연산호 군락 조사결과에 대한 해군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i. 2008년 4월 실시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이 일대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고 연산호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 되고 있음에도, 연산호 군락의 존재나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음.

C. 소환(recall)되는 폭력의 기억

'제주도'의 재현은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국내에서도 '이국적(exotic)'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관광지로서 서술되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 역사의 고통과 피해에 기반한 희생자화의 서사(narrative of victimization)로서 재현된다.⁸⁶⁾ 그리고 '바당'마을의 해군기지 건설론의 대척점에 있는 평화론의 근거 역시 과거 제주가 겪은 피해사실을 근거로 구성된다.

그러나 '바당'마을 주민에게 있어서 4.3사건이나 모슬포의 군사기지로 인한 피해는 기지 반대를 말하기 위해 소환(recall)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과거의 폭력을 불러들이고, 그것이 현재의 군사기지로 인한 폭력과 만나면서 새롭게 의미화 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로서의 위치와 다른, 폭력의 흔적을 현재 주민 자신의 입장에서 텍스트화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사적 폭력이 “~이 아닌 것”으로 부정될수록, 자주 인용됨으로써 역으로 “~였던” 군대의 '예전'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운 참조로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군사기지는 자신의 경험들과 연결짓게 되면서 구체성을 획득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폭력은 과거와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의 작동되고 있는 폭력에 대해 각자 나름의 자기-정의(self-definition)가 가능해지게 된다.

1. "4.3인거 났다" : 역사적 기억과 중첩된 현재

- ii. 2008년 9월 실시한 환경부 조사과정에서도 해군은 연산호 군락은 없다고 이를 부인.
- iii. 그러나 함께 조사했던 다른 팀의 조사결과, 군락의 존재가 밝혀지자 기지건설과정에서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발표.

85) ""산호 군락지 없다던 해군주장 거짓"...추가조사 촉구", <제주의 소리> 2009년 3월 27일자 기사.

86) 미군에 의해 군사적인 "태평양의 요석"(要石, Keystone of the Pacific)으로 불렸던 오키나와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일본이 바라보는 오키나와에 대한 시선은 1) '잊혀진 일본'이자, 2) '미국의 섬'임과 동시에 3) 관광주의(tourism)적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나카자토 이자오, 2005a:3). 그런 의미에서 오키나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구도를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선과 교차시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바당'마을을 포함한 제주도 내에서는 이것을 4.3 사건이 참조(reference)로서 자주 '등장'하였다. 4.3사건은 60여년이 흘러 직접체험 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남은 세대들에게 4.3사건 자체는 "부모에게 들은 것", "지금은 잘 모르는 것", "유족회에 참여하는 것", "가서 밥 먹는 것", "병원에서 무상치료 받는 것" 정도의 형식적인 말들로 채워지고 있었다.⁸⁷⁾ 그런데, 이렇게 '청산'되고 종결된 언어들이 한쪽에 있는 반면, 여전히 그런 제도 안에 있지 않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진다.

[4.3사건] 그때가 해방 후 아니에요. 자유 아니에요. 법이 없는 때라이. 나도 그에 대한 걸 신경도 안 쓰고 말도 안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말 안 해봤어요. <사례 8>

그분은[<사례 8>] '바당'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지만,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바당' 사람들이니까 절대 얘기 안해줘. 그분 내 켜당뵈 되지만서도이 나한테도 잘 안해줘. 가해자 조손(자손) 얘기했다가 가해자 조손한테 가면 그 할아버지 또 뭐라 할꺼라. 그 가해자도 '바당'사람이라. 그 사람 조손(자손) 사람들도 여기 있고 하니 까이. 지금 '바당'에 살아. <사례 19>

4.3사건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 마을 사람이고 켜당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술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진 (공식적) 역사와 말해지지 않은/못한 역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아주 사소화된 언설과 아직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무게감만큼의 거리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해군기지 이슈와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회고의 형식을 띄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긴장을 만들어낸다. 회고는 종결된 '과거'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것이 '현재'와 접점이 생기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종결된 사건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에 정박된 역사는 현재와 만나, 기존의 평화담론과는 '다른 역사성'을 주장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간다 (딜릭, 2005:396).

87) 이는 물론 각각의 면접자와 연구자와의 관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자기검열 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자가 몇몇 주민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다고 느낄 즈음에도 이러한 이야기 형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었다.

주민들은 현재 마을의 어지러운 상황을 한마디로 "4.3인거 닳다(갈다)"라는 말로 비유를 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채워진다.

그때는 뭇이 정부가 수립 안되니까 인민 뭇시기 있잖아. 임시정부. 인민위원회라고 했는디, 인민위원장 있잖아요. 각 마을에,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라면 남로당 아니라. 그런 계통 아니에요. 그런 때 돌려놓찬 하니까 싸움이 나고 그런건데. 전부 대가리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아랫 사람이, 마을 사람들은 모르고. 이제 우리 '바당'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라. 해군기지 관계도 두 사람만 "안돼", 하면 안돼볼 꺾 그랬주. 뭇도 모르고 처음엔 좋은걸로 생각했던 걸 보니까 그거야 안되겠다 하는거라, 마찬가지 똑같은거라. 이렇게 해선 안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못산다. 모두 이제 뭇도 모르는 사람은 '잘 살 것이라, 지방 발전되는데 이거 반대 해볼면 마을 망친다, 이런 기회를 놓치냐' 해볼지만은, 똑같은 거지. 이거 처음에 '바당'주민들 총회할 때 처음에 나는 안봤지만 회의할 때는 회장 누가 도지사랑 뭇하고 하니까 좋을거 아닌가 행(해서) 탁 소집시키니까 "안돼" 해부리시면 "안돼" 하는디 반대를 안했던 말이주. 좀 어숙미숙했던 내중엔 보니까 허는 사람 나서서 다 찬성한다고 해버리고, 나땀(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이걸 안되겠다, 그때부터 "우리 이제 반대한다" 딱 해버리니까 좀 약점 잡힌거라. 그런거 아니라게. 이거 처음 모일 때에 마을 책임하는 사람 한 두사람만, 세사람만, 안돼, 이걸 안돼, 딱 해볼면 그러면 간단하게서리 설러볼껀디(넘어갈텐데) 그걸 못했던 말이주. 그니깐 이걸 마찬가지라. 4.3사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라. 처음에 그렇게 '아, 이런거로구나', 하다가 보니까 '안되겠다, 이걸. 공산당이다'. 그렇게 진압되는게 문제가 생긴거. 그게 거의 거의의 마찬가지라. 처음 생각을 잘못된거주. (중략) 해군기지는 그런거 닳아. 해군기지는 처음에 도지사랑 누구랑 아마 해보라고 아마 해보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좀 해서. 지방도 발전되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뭇 해녀도 (보상도) 잘 주겠다, 하니까 귀가 그래가 돌아간거 아니. 도저히 이렇게 안되겠다 해도, 그때 뭇에 쏠린 (씩인) 사람들은 그에 돌아간 양 안 들어오고. <사례 8>

앞서도 논의했듯이 '바당'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이라는 정체성이고 마을 내에서의 관계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과 역할수행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을의 주민임에도 외부자와 결탁해서 내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현재의 상황은 그와 비슷한 형국이었던

4.3의 기억을 불러들인다. 이런 기억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의해 더욱 구체화된다.

48년 그물엿을 때 헨가 중반인가, 여름철이니까 중반은 아니지. 대대적인 그때 45명인가 죽은 그날. 몇 명인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봐. 너도 들었을꺼야. 그때도 그 [죽은 사람] 명단을 전부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주도한 사람이 저기서 사람 죽인 것을 주도한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물론 경찰도 연관 됐지만은 '바당' 출신 고○○이라고 '바당' 출신 사람이, 주민이 있었어. 그 사람이 왜정 시대 같으면은 첩보원. 경찰 꼬나풀 있잖아. 그 사람이 칼빈 총 매고 다니고 했었어. 그 사람이 전~부 여기 경찰하고, 꼬나풀이라고 해야 할까. 옛날도 경찰에 고등과라고 했어 고등과. 수사기관이 고등과라고 있더라. 그 꼬나풀들을 조선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정보를 수집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 일제시대 왜정시대 보면은. 그때도 보면은 경부가 있고 경부보가 있고 그 달에 고등과장 무슨 과장 있고, 형사들 하면은 또 꼬나풀들 보면 첩보원, 첩보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라 이거. 고○○이라고. 누가 보라[연구자 이름]한테 그런 얘기 들려주지 않았을꺼야. 고○○이란 사람은 여기 토백이라 그래서 여기 조카들도 있고 그래서 말을 아꼈을꺼야. 여기 앞집에도 살고 있는데. 이거는 비밀 아닌 비밀인데. 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전부 그 명단을 해가지고 지금 의례회관, 그 국민학교 향사에 전부 모이라고 했지. 전부 '바당' 사람. 남녀 할 것 없이 모이라. 그때는 명령이, 다 모이라 이거야.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서 우리는 못가고. 아이들이니까 오지 말랜 해서 못가고 소문만 들은 거지. 나중에 보니까 총소리가 팡팡 팡 나더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기관총이라 그러대. 전부 앉혀가지고 호명을 한 거라. 전부 호명해가지고 의례회관 저쪽 동쪽으로 나가는 길 **밭이 있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죽었는데. 40 몇 명 제사도 하룻 저녁에 들었는데. (중략) 고○○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몸쓸병 걸려서 거기서 죽었어. 죽으니까 어떻게. 죽으면 옛날엔 공동묘지에 가잖아. '바당'지역에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사람 매부가 있지. 그 고○○이란 사람 매부가 있는데, 친척들끼리니까 매장을 같이 하잖아. 이 구덩을 파잖아. 그러면 관 놓을 데를 파가지고 관 놓아가지고 때를 입히잖아? 관 들여놓고 흙을 논 다음에 때는 마지막에 놓고. 평토를 하잖아. 그 흙을 평평히 해서 하는 식으로 한게 아니고 흙을 살살 해가지고 하면 무너지니까 방아 찢듯이 하는 거야. 딱딱하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평토로다. 평토로다" 하면서. 그

거 제주도 민요에도 나와. 큰 소리꾼 나와가지고 "평토로다"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춤추고 하는 건데. 그디 그 매부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망인(亡人) 고○○이, 얼마나 처남이 그렇게 미워야. "다시는 못 나옴테지 이놈" 하면서 이만한 돌맹이를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을 상당히 증오했어. 여직 살았으면 그 사람 죽었어. 돌맹이 맞아가지고서. 그런 사람이 고○○이 큰 처하고 아들하나 있는데, 여기 못살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살아. 그 아들도 여기 살았으면 살질 못허지. 살질 못해. 아방이 그래가지고. 게난 '바당'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 지금 인정이 가는 거지. 4.3때는 고○○이가 '바당'마을 망치더니, 해군기지 하니까 해녀들이 '바당'마을 망친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사례 19>

'바당'마을은 4.3사건으로 인해 총 48명이 사망하였다.⁸⁸⁾ 이 중 대부분은 <사례 19>의 증언에서 드러나듯 경찰들이 조종한 토벌대와 이와 결탁한 '바당'마을 주민 고○○의 제보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4.3사건은 범질서가 일시적으로 보류된 미군정 시기의 '위기상태'가 반공국가의 영구적인 정치공간으로 변화하는 분기점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한 사건이었다. 제주도민의 피해경험은 반공국가의 '올바른 국민'으로서의 성원권에서 배제된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도민들은 '빨갱이'라는 '인종적 몸(species body)'으로서 고통 받았고(김성례, 2001:276), 이 고통은 이는 국가기구에 의해서 사적으로 수행된 폭력(김동춘, 2000:241)을 통해 가해졌다.

이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단적으로 학살의 대상이 되었던 고통에 저항하는 근거이자 유일한 정치적 힘은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었을 것이다. 주민 내부의 관계들을 분리하고 파괴하는 힘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요구하고 그것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자원이자 당시의 상황을 극복할 힘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민'의 질서를 앞장서서 파괴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이를 조종한 국가기구에 의한 사적 폭력은 다시 현재의 고통과 만나게 된다.

다 하나예요. 경찰이든 군이든 도든 다 하나예요. '바당'에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알게될 겁니다.⁸⁹⁾

88) '바당'마을회 집계.

후기식민국가는 이렇게 내전화된 폭력을 기반으로 성립된다(사카이 나오키, 2008:232). 그리고 이 주민의 이야기처럼 실제 현재 해군기지문제는 경찰, 군인, 도청에 소속된 이들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사실상 4.3을 지배했던 경찰의 폭력과 군대의 폭력을 구별할 수 없는 내전(內戰)의 폭력논리가 현재에도 유사하게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역사적 기억과 현재의 문제들을 중첩시키면서, 역사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정의하는 위치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과거의 것을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도대체 어떠했던가'를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 속의 극히 절박한 관심사로 바꾸어가는 기억의 변증법으로서의 사회적 실천이다.(요 네야마 리사, 2002:288).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4.3인거 닻다"라는 탄식은 4.3사건이 일어났던 1948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현재'의 폭력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사의 원재료(raw materials)로서가 아니라⁹⁰⁾, 지나간 역사와 현재에 대한 자기-해석, 자기-정의를 가능케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과 정의를 통해 '현재'의 군사기지 문제는 4.3과도 같이, 내전의 전장과 '적'으로서, 각각 제주도과 제주도민('바당'마을주민)이 상정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⁹¹⁾

89) MBC PD수첩, "제주도 '바당'마을, 그들이 왜 분노하는가?", 2009년 5월 5일자 방영분, '바당'마을 주민 인터뷰 중에서.

90) 이는 스피박이 지적한 "'제3세계'를 원재료로 한 서발턴화"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야트리 스피박(2008),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91) 이러한 '내전화된 폭력'은 외부를 방어(공격)하는 군사력과 내부를 지키는 경찰력의 구분이 사실상 '제 기능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모든 폭력이 구별불가능한 상태에서 특정한 내부를 희생시키며 국가주의를 강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사력과 경찰력의 구분은 식민지국가들에게서나 가능했던 시스템이었으며 국민국가의 이상(理想)이었을 뿐, 실제 피식민국가들은 대부분 내부의 군사력에 의해 전쟁을 겪었다(한국전쟁, 콩고동란, 베트남전쟁, 앙골라내전, 동티모르전쟁, 니카라과내전,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 등). 사카이 나오키(2008:219~20).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는 이 분리마저도 없어져, 9.11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국토화하였고(외부의 테러를 감시하는 것도 '국토'안전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 담당이다), 이에 반해 한국 같은 나라,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도민들은 자기 땅에 살고는 있으나 어디에도 자기 영토를 가지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2. 군사기지에 대한 성별화된 기억

제주도의 농어촌 마을은 성별분업이 엄격하게 작동되고 있다. '바당'마을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여성들은 주로 바다에서의 물질, 밭매기, 감귤따기 등의 일을 하고, 남성들은 비닐하우스 건설, 감귤·화훼 하우스 관리 등의 일을 하며 서로 각자의 영역을 넘지 않는다. 연구자도 마을에서 미깡(감귤) 따는 일을 했었는데, 이 일만 해도 여성은 미깡 따는 일을, 남성은 나르는 일을 하고 한 쪽 일이 먼저 끝나서 시간이 남아도 상대의 일은 돕지 않는다.⁹²⁾ 이런 관계들은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도 이어진다. 일례로 연구자가 '바당'마을 총회를 참관했을 때, 공간을 받을 갈라서 왼쪽에는 여성들이, 오른쪽에는 남성들이 앉아 있었고 이 구분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을 정도였다.

이렇다보니 마을의 공식·비공식적 논의구조는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고,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동되는 참조(reference)들도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군사기지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형성하고 현재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행동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모슬포, 옛날에 거기에 미군부대가 있었주게.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다가 어서졌주게(없어졌어). 그 당시에 모슬포에서 아빠 어신(없는) 애기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고. 할머니 뭐 여자애는 여자는 그냥 놔두지 안해난. 우리 어렸을 적에. 경해신디(그랬는데) 거기 대정에도 상모루 하모루가 이서(있어). 하모

92) 예레동을 지나다가 낯선 풍경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아저씨들이 그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물질하고 나오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물질 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짚어지고 나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달구어진 갯바위를 잠수복차림으로 걸어옵니다. 얼른 달려가서 해산물이라도 받아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딸사랑제주아방모임'의 한 회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주에는 남녀의 역할과 영역이 있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합니다(오성근, 2007:117).

이와 유사하게 강경숙(2009)은 제주도의 한 해안가 마을을 연구차 방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60대 부부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게 되었다. 여성은 바닷가에서 미역이나 우미를 채취하는 일을 하고 남성은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한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이 시간과 노력 면에서 과중하지만 물질은 남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들은 아내의 일이 끝날 즈음에 바닷가에 가서 해산물을 나르는 일만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강경숙, 2009:73).

리 할머니가 어쩌다가 우리 조경으로 꽃 일 할 때 같이 일을 해잡게. 그분이 자기는 하모리 왕(와서) 제주시 산대니. 자기네 모슬포 미군부대, 부대가 군사기지가 들어와서 자기네 모슬포 그 대정에서 허는 거 듣고 보아신디(봤는데), 왜 또 그런 거를 여기 세우냐 이거지, 이 할머니는. 또 애비 어신(없는) 아이들 나오고, 할머니 어린 아이, 여자아이는 가만 안 둔다는 거라. 군사 남자는. 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슬포에서 해난 경험이 이신(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건 얘기 안허난, 얘기 허난 안허난(하나 안하나) 여자들은 알아져, 우리들은. 우리는 부부생활 허다 보면은 자연히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남자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바다에만 있다가 갑자기 나오멍 할머니도 이빠 보이고.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군대 가서 남자들이 참고. 그 뭐 육군들이 이런데서 하고(많고) 바다에서는 틀리거든. 여기서는 일박이라도 나갈 수가 있잖아, 자기가. 무슨 일이 있든 해서 나갈 수가 있잖아. 근데 바다는 틀리잖아. 바다는 그러지 않여거든. 보름이나 한 달이나 있다가 들어오멍 그냥 거기서 해난 우리 모슬포에서 그런 경험이 이신 분들이 하고. <사례 17>

모슬포(대정읍)는 오래 전부터 미군부대로 인해 지역발전이 뒤쳐져,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못살포'라 불리는 곳이다. 이곳은 일제시대 일본군 기지가 있던 곳에 미군부대인 케미지(KAMG) 부대가 들어섰고,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성매매 밀집지역이 되었다.⁹³⁾ 여성들끼리 노동하는 과정에서 모슬포의 미군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례 17>은 현재의 해군기지를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면서 군사기지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게 된다.

이렇게, 제주도 내 다른 지역에 있었던 군사기지와 젠더갈등은 마을 내 여성주민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어 여성주민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된다. 과거의 역사적 폭력이 환기되어 현재의 해군기지를 새로이 인식하게 하고 재의미화 하게 되는 것이다.⁹⁴⁾

93) 모슬포 시내에는 1980년대 말까지 '럭키클럽'이라는 미군 전용 업소가 운영됐다. 케미지 부대는 1995년 이후에는 미군휴양지로 사용되다 2005년 3월에야 한국정부에 반환됐다(홍성철, 2007:187).

94) 비슷한 맥락에서, <사례 5>는 여성과 남성이 다른 네트워크와 정보로 인해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 기지라는 처음에는 전혀 모르셨다가 '이게 바다 몇 평 매립된다' 그런 얘기들은

5일장 하면 '바당'보리쌀 하면 1등. 나룻(벼)도 '바당'쌀이 제일 좋아. 그래서 딴 마을 사람도 '바당'쌀이라고 속이고 팔아. 그렇게 '바당'땅은 알아주는 땅. 여기는. 땅은 알아주는데 땅이 작으니까. 그전에 이제 저 작은 밭인데 620평짜리 밭이야. 근데 우리 친구가 모슬포 있어. 게난 그때 친구들 모임해서 가신디(갔는데), 가이(개) 집에 갔는데 가이(개)는 620평짜리 돈 다 안주고도 2000평을 샀어. 그렇게 차이가 나 땅값이. 그렇게 차이나. 경헌데(그런데) 벌어먹는 거는 그게 낫지. 요새 미강(굴) 허멍(하면) 되니까. 옛날추룩(옛날같이) 비료 어슬(없을) 적에 그자 밭 땅 좀 되면 농사를 잘 지을까 했지만은 요즘은 그게 필요없어. 게난(그래서) 그때야 나도 '아 그때야 차이가 있는 거로구나'. 근데 요즘은 모슬포는 개발이 안되고 있주게. 거기는 옛날부터 군대 때문에 발전이 안돼. <사례 14>

<사례 14>는 결혼으로 이주한 친구의 말을 빌어, 발전되지 않은 모슬포의 땅값을 참조로 삼게 되면서 현재 군사기지의 '발전'담론이 설득력이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단순히 마을에 사람(군인)이 들어오고 돈벌이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군사기지가 구체적인 의미로서 다가오게 되면서 입장 역시 '찬성'에서 '반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이란 결코 성찰과 회고의 고요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재구성(re-membering)이며, 현재의 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해체된 과거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4.3사건과 모슬포 기지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해군기지 문제로 재구성되게 되었고, 이는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기지를 다시금 보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주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면서, 피해나 억압의 고통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적 힘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의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듣게 된 거우파?

<사례 5> 그거는 우리는 여자들은 잘 모르지. 남자들은 알았지만 여자들은 무슨 기지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알아져? 우리는 그런건 모르고. 몇만평 몇천평 도로가 몇미터, 이런 건 우리는 안하는 거고, 그거는 남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기지는 나쁜거니까. 기지촌, 솔직히 말해서 이 건 기지촌 뺀에 더되는 거냐. 애기들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여자로서 애기들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고향으로 가 살아야 되겠는데, 기지가 점점 커지면 떠나서 살아야 되잖아. 떠나면 어디 강(가서) 살거라. 이만한 토지, 이만한 밭, 보상을 주면 그 보상 가지고 남의 부락에 가서 사는 것이 이해가 가냐고. 그것이 안된다는 거야.

3. 소결

일제시대 강제노역, 4.3사건, 이후 연좌제와 예비검속, 90년대 이후 벌어지는 각종 개발문제, 그리고 현재의 해군기지 사안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를 설명하는 언어들은 억압의 역사를 차곡차곡 포개어서 현재의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자-저항자로 재현하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고통의 땅"이란 이름을 부여받는다. 제주도의 해군기지문제는 대부분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담론화 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지난 1987년 민주항쟁이후 20여 년간 벌어진 4.3 진상규명운동과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비무장·비폭력을 기치로 제주도민들 스스로 주체가 된 적극적인 평화행동이었고, 이는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며, 그 둘은 서로가 상승작용을 불러 일으켜, 2005년 지정 이후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는 어울릴 수 없다'라는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핵심적 주장이 되었다. (중략) 4.3 진상규명운동, 감굴·당근보내기운동 뿐만 아니라, 1988년 송악산과 2002년 화순항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는 데 기여를 한 제주도민의 평화행동이다(김동주, 2009).

이 글에서 87년 민주화항쟁, 4.3 진상규명운동, 그리고 현재의 군사기지 반대운동은 제주도의 슬한 피해와 저항의 맥락에서 하나로 묶인다. 하지만 역사의 선적(linear) 일관성이란 가상은 현재의 장(場) 속에서 과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가리타니 고진, 1999:28). 이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역사주의적 인과론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주민' 혹은 '평화'라는 말은 하나의 인식틀이며 일단 이것이 생기면 곧 그 기원은 은폐된 채로 보편화된다. 문제는 보편성에 관한 요구가 완전하게 또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할 가능성과 방법을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버틀러, 2003:77). 즉,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어야 하는 것이다. "왜 비무장=평화=주민'이어야 하는가?" 라는.

그런데 "스스로 주체가 된 평화행동"이란 말은 주민들의 저항이 1)'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 2)그것이 폭력(=非평화)적인 행동이었음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 말해지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민'이라는 저항적 주체와 평화(=非폭력)의 의

미는 이 반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원재료(raw materials)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⁹⁵⁾ 이는 외부와의 구별짓기와 폭력에 대한 저항을 제외하면 제주도민(‘바당’마을 주민)을 말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남긴다. 내용은 제주도민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실상은 반박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 주체를 말하고는 있으나 주민들은 그 역사를 가능케 하는 타자(역사에 기입되기 위한 재료) 이상의 지위는 갖지 못한다.⁹⁶⁾ 그래서 이런 방식의 주체화는 제주도민이라는 주체의 내용은 없으면서(상상된 주체), 이를 동질화하는 것에 동참하는 효과를 낼 뿐이다. 이렇게, 시간성이 배제된 타자는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지점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김현미, 2001:134).

역사적 궤적을 상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인과론에 근거하게 된다면 현재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규정되고, 그것이 현재를 설명하는 준거가 되는 순간 주민들의 현재는 영원히 역사의 타자로서 위치지어지게 되며, 따라서 저항의 몫 역시 타자에게 전가된다.

때문에 고통과 수난의 역사를 반복·재생하면서 이를 저항의 역사로 수렴하는 대신, 주민들의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무엇을 말하기 위해 떠올리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나날이 맞닥뜨리는 현재의 사건 속에서 과거는 변형되고 인식자에 의해 재구성되기 마련이다. 역사적 주체란 저항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정의(self-definition)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평화’나 ‘비폭력’, 혹은 ‘저항적 주체’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이 만들어내는 현장(locality)에서의 정치적 긴장들이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주민들의 입을 통한 현장의 말들이 규범적 언어 이상의 구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에 기반한 현실적 힘(power)을 갖게 될 것이다.

95) 이는 스피박이 지적한 "'제3세계'를 원재료로 한 서발턴화"와 유사한 방식이다. 가야트리 스피박(2008), 『다른 세상에서』.

96) 버틀러의 "물질로서의 섹스, 혹은 문화적 의미화 도구로서의 섹스 개념은 담론적인 구성물"이라는 지적은, 자연/문화('날것'/'익힌 것') 구분의 당연한 토대이자 그 구분이 지탱하는 지배 전략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틀이 된다(버틀러, 2008:156-7).

VI. '발전'의 재의미화와 평화 만들기(peace-making)의 정치학

한 평생 인적구성의 변화없이 살던 '바당'주민들에게 해군기지라는 이슈는, 자신을 알고, 후회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좌표축이 새로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 의해 부여된 '주민'을 넘어서서, 스스로 정의한 '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과 자연환경에 대한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재배치의 과정은 곧 마을 밖 '우리'라고 하는 것, 즉 국민국가의 소속양식에 대한 새로운 물음과 요구이기도 하다.

A. '주민됨'의 의미 생성

1. 질문자로서의 '주민'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군인들은 이들을 '국민', '주민', ('소비자'로서의 군인과 상응하는) '생산자' 등으로 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착이 마무리될 즈음, 자신들의 정당화 작업에 도움을 주었던 애초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버린다.

<제주 환경부지사> 악수(惡手)만 두지 않으면 해군기지 사업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자.

<해군 통제실장> 찬성 측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제주 자치행정국장> 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모양새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 도의 회가 장애가 될 것이다.

<국정원> 제주지검 관계자에게 불법행위, 떼쓰기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겠으며, 외부 개입 세력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 문제제기 하면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경찰> '바당'마을의 순수 주민과 외부단체 세력의 격리가 중요하며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반대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쉬운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도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고소고발 해줘야 경찰도 조처가 가능하며 인신 구속 등이 있어야 반대 수위가 낮아진다.

<서귀포시 ○○동⁹⁷⁾장> 반대측 젊은 사람들이 주동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다.

<제주 환경부지사> 분열은 좋은 상황. 공세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이제는 추진단계이므로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해군이 주도해서 공세적으로 할 것을 주문.⁹⁸⁾

이 회의록은 해군기지에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회의된 내용이 한 방송에 입수되어 공개된 자료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이들은 주민들의 저항을 "불법행위, 폐쓰기", "인신 구속", "분열은 좋은 상황" 등의 말로 모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주민들을 주체화하였던 모든 언어들에 경계를 드러내면서 기지에 반대하는 주민 자체를 "제거해야 할 걸림돌" 정도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 법 집행"이라는 구체적인 위협을 동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경찰·군인·도청이 모두 위치는 다르되, 하나의 권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은 영토도, 국적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과도 같은 지위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절차와 민주주의를 지켜라”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들의 요구는 결국 국민국가 안에서 제주도민으로서, ‘바당’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성원권을 인정하라는 호소이다. 즉, 이는 “걸림돌 같은 존재”에서 국민국가의 성원으로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말인 것이다. 이 요구는 4.3사건의 사적화된 폭력과도 겹쳐진다. 그리고 이렇게 뚜렷한 외부가 존재하지 않고 내부화된 폭력의 형태는 4.3의 기억을 다시 불러들이면서(re-call) 현재 자신의 위치를 “물 막아진 곳에 살아 당한 억울함”으로 자리매김한다.

우리 아버지가 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태자 영재[가명]인데, 하루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날 여기서 죽는 날 호호방문 하면서 문 열고 이 청년들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윤태영이 있느냐'. 우리 아버지는 그때 중문 면역소. 지금은 면사무소 그때는 옛날말로 면역소 면역소 했거든. 면사무소도 그때 산사람들[무장군을 말하는 것]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태워버리고) 그럴때거든. 면사무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출역을 나갔어. 일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버리고 진짜 태영이는 따라 갔는데, 그때 이서시면(있었으면) 죽었지. 나중에 태영이란 사람은 죽었어. 호호

97) '바당'마을의 행정동명.

98) 제주KBS 뉴스9,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단독 입수", 2009년 1월 19일자 보도.

방문하면서. 그디 홍○○라는 사람도 나가 알기로는 천하 오정백[건달과도 같은 의미] 이야. 그냥 남의 일 날품팔이 하고 살고 기운은 장군인데. 아 문열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디서 썩버리고. 그.. 그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면은, 아 그거 왜 그랬을까 그거이. 그니까 그게, 제주도가 물 막아져가지고. 과연 육지 같았어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해서. 그것 참..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 한참 후에도 53년도에 금족령이 해지되고 살면서 이제 그 가해자 피해자 자손들끼리도 한참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자손들도 약고 또 그 당사자들도 죽고 하니까 얘기들도 무마되가지고 해갔지. 되가다가 이 해군기지가이 나가지고, 나 그때 이게 만일 총칼 있었다면 틀림없이 더 했어. 반 이상 죽었어, 지금. 지금 그랬는데 총리실에서 해군기지 말아가지고 한다 하니까 총리실에 메일을 보냈어. 거기 보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국방부 듣기 싫어서. 전부 김○○[해군 중령 이름] 같은 놈 거짓말한거 내가 적었거든? 우리 의례 회관에 와가지고 말이야 "발을 안팔아주면 바다를 메꿔와서 할 것이고".. 저 찬성놈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발 얼마나 주겠습니까?" "100만원까지 주겠소". 저 새끼가 바로 거짓말 하는거 내가 썼거든. 이런 새끼가 해군 중장이라니 말이 되느냐 말이여. 거 다 읽어봤을 테지. 그거 총리실 자기네가 답변하는게 곤란하니까 국방부에서 보내 분거야이. 국방부 중령인가 하는 놈이 "국책사업이라는 거는 주민투표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비당'사람들과 얘기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거여. 4.3보담도 이게 큰 일이여. 4.3이 문제가 아니여. 아이고 그래서 지금.. 아. 4.3보다 더한 뭐가 이런 광경에 처할 거가 있구나. 우리 오래 못 살어. 스트레스 쌓여서 오래 못 살어. 우리 할망도 그렇고. <사례 19>

“과연 육지 같았어도 그랬을 것인가”라는 <사례 19>의 탄식은 총리실, 국방부, 청와대비서실, 국회의원 사무실, 제주도청 등의 국가기관에 끊임없이 민원과 탄원서를 넣는 정치적 행위로 이어진다. 이는 항상 사사로이 취급받았던 자신의 존재를 공적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력이 '공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 문제가 '국가'에 의한 것이라는 것 등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였던 것이다.⁹⁹⁾

또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국회부대조건을 지키라"¹⁰⁰⁾는 요구를 해 온 것인데, 그

99) 주민들은 해군기지와 관련된 문제를 '공식화'하기 위해 서울에 수 십 차례 올라와서 국회와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하고 탄원서를 넣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100) 2007년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제시된 "해군기지 건설예산 부대조건"이란 '제주 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럼에도 '바당'마을의 주민으로서, 법을 준수하라는 요구 자체가 불법¹⁰¹⁾이거나 내쫓김을 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 집행에 있어서의 상반된 집행의 방식은 배제되고 주변화 되어 온 이들의 '보편성' 주장이 종종 모종의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을 생산하게 됨(버틀러, 2008)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수행적 모순을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정치적 자원으로 삼는다면,¹⁰²⁾ 군사적 폭력이 주민들을 반드시 필요로 했으나 궁극적으로 이들을 지우고자 했다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민됨'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법적 형식을 빌리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palimpsest')¹⁰³⁾. 주민들은 바로 그렇게 지웠지만 보이는 이들에게는 보이는 흔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법은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바당'마을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을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을 가진 주체로, 강압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 문제를 밀실합의가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렇게 국가(서울)와의 관계에서 '바당'주민이 협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제주간의 거리감이 극복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사투리는 '번역'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거기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공재(共在)하는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제기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 부대 조건에서 제시한 '제주도와의 협의'는 제주도민과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101) 마을주민들은 현재 찬성주민들과 도청으로부터 20여건의 소송이 걸린 상태이다.

102) "이러한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야말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를 다시 쓰게 하는 가능성을 만든다"(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2008:66~7).

103) 이는 스피박의 용어로서,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글을 쓴 양피지를 지칭하는데 거기에 고친(지운)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 근대는 스스로를 지배와 권위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제3세계를 타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제3세계를 타자화하기 위해서(즉 자기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3세계 토착인들의 존재와 설명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화/권위 및 지배 확립이 마무리될 즈음 자신들의 정당화 작업에 도움을 주었던 애초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버린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 서사들에는 '지우고도 남은 흔적(palimpsest)'들이 가득하다. 스피박이 『포스트식민이성비판』(2005)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웠지만 보이는 이들에게는 보이는 흔적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피박의 이 논의를 통해 일국 내에서 국가가 '주민(토착인)'을 생산하는 방식에 도움받았다.

고 있다.¹⁰⁴⁾

이는 주민들이 '주민됨'의 위치를 빌어 국가의 소속양식에 질문하는 존재가 됨을 의미한다. 즉, 주민들은 법 밖에서 "모든 법은 필요없다"거나 "어쨌든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법의 사용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의 내부에 있으면서 그 사용영역을 확장시켜 마을 밖 '우리'로 하여금 그 용어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당'마을의 '주민'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은 제주도민의 문화와 역사라는 문제를 정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 그 속에서의 '제주도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도록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2.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등'해지는 것

군사기지라는 새로운 시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주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은 현재의 땅-바다를 근간으로 해서, 조금 더 수입이 좋아지는 것이거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의 활기가 생기는 것의 의미였다. 그러나 군사적 폭력이란 땅-바다의 주도권을 박탈하고, 마을 내 관계들을 분열시키면서까지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자기 개조(self-re/forming)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되는 해녀들은 "바당에 모래만 있고, 물건은 거의 어서(없어)"<사례 1>라고 하며 자기를 부정하거나, "보상을 한 뿐이라도 더 받을까 싶어 자기 밭에 무궁화를 심기도"<사례 16> 하면서 자신을 국가에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군사적 폭력이 다른 관광지 마을이나 외국의 군사기지를 참조(reference)하면서 내세웠던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음'이라는 감각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104) "서울은 바로 국가로 통하기 때문에 행정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방식 외의 다른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지방정부, 특히 좁은 제주도는 도지사나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이 특이한 점"이라는 연구자의 말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인 <사례 C>는 "국가는 너무 멀어"라는 한 마디로 대답하였다. 이렇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국가(서울), 물리적으로는 비행기를 타야만 도달할 수 있는 460Km의 거리, 서울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번역'을 거쳐야 하는 제주도말, 항상 좋아 보이는 '관광지'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각 등의 인식을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니까 제가 [해군기지] 추진위에 제일 회의를 느낀게, 양심선언이라 그러면 그렇게 혼자라도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만들어놓은 A4 몇 장 분량의, 지금 보관중입니다만은. 그 사람이라는게, "너 얼마줄께", 그런게 아니고 "아, 옆에 사람은 얼마얼마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나도 그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해군측은 절~대 "어? 나 너한테 얼마 준다고 얘기 안했다? 안했는데" 그 거죠. (중략) 들은 사람은 "그래도 얼마정도까지 얘기했지 않았나"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옆에서 그런 경우에 이 정도 받았다고 얘기했지". 그거죠 그거. 지금 해녀 보상이라는게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부터 개입되서 죽, 앞에서 후회도 해봤고 회의도 해봤고, 열심히도 해봤고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진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껍데기가 벗겨지는. 성명서 첫머리도 만들었던 문구 자체도, 해녀보상에 관련된 거를 먼저 했었고. 액수를 얘기 안했지만, 그런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서 동참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추 맞아들고. 저희 어머니도 해녀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어떻게 어떻게 돌아갈거고, 뭐가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런 총회를 해야지, 이게 뭔 소리냐", 해서 나왔던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하고, 또 다른 해녀 한 분하고. 근데 해녀회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분들이, 앞장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을회 비슷하게 해녀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나. [보상] 얼마라고 얘기 안했는데.. 그런 걸 하나씩 둘씩 알아가니까 저는 더 화딱지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례 1>

<사례 1>은 기지 유치를 위해 마을에서 가장 앞서서 활동했던 주민 중 한 명이었고, 해군기지는 이런 주민들로 인해 마을에 정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때문에 <사례 1>은 해군기지 유치를 위해 앞장서서 활동했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해녀 보상을 비롯한 마을의 보상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사례 1>은 "기대심리를 심어주면서 동참하게끔 했던" 군인들의 새로운 통치방식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지가 '발전'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던 때에는 국가가 부여한 '주민'의 가장 앞자리였다가, 현재는 오히려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가가 부여한 '주민'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신이 정의한 '주민'의 자리로 가기 위한 행위이다. 국가가 말하는 '주민'이란 전(前) 해군기지 예정지였던 마을과 '바당'마을을 분리하고, 마을 내 주민들을 분리하고, 주민들을 자신의

땅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에 의한 '주민'이란 기존의 삶의 방식들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자리였던 것이다.

이렇듯, "~ 처럼 해봐! (doing like this!)"라는 군사적 폭력의 주권적 목소리는 주민들에게 ' ~ ' 안에 들어갈 내용들과 동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부추겼지만, V장에서 본 것처럼 호명은 항상 주민들에 의해 실패의 여지를 남긴다. 이는 결국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동일함(identification)'이라는 환상이 가지는 '대가'였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 것이다. 따라서 '바당'마을의 '주민됨'이란 자동적으로 얻어지거나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서 구성된다. 이렇게, '주민됨'을 찾아간다는 것은 군사적 폭력에 의해 부정되고 분열된 자기(self)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그렇고, 동네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 토지 소유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의 문제인거라.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는 상황이 문제인거라. 그거는 기지의 폭력성 그런 문제이기 앞서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일을 나도 모르게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 그래서 이거는 마을의 자존심 싸움이지. 마을의 존폐도 있지만, 나 자신이 지금 와서 가장 반대에 나서는 이유도, 따져보면 그 문제인거고. 나도 마을 주민들이 진짜 50%가 찬성이고 그러면은 나도 이 일을 깨끗이 접을거고. 나도 할 필요가 없잖아. <사례 16>

질 때 지더라도 우리 싸움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민주국가도 아니우다게. 정책 결정하는 데에서의 문제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감방에 가도 몇몇하쿠다.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가 반드시 존재하고, 자부심, 자존심.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반대운동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쿠다예. <사례 15>

그런데 이 회복이란 '훼손되기 전'의 원래의 자리일 수는 없다. 인용한 <사례 16>과 <사례 15>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은 "나가 자존심이 상해서 [반대운동을] 이추룩(이렇게) 하는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주민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짓밟히는" 경험이란 동일해지는 것(becoming identical)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거부되는 경험이었다. 동일화(identification)를 위해서는 자기혐오가 필수적(러너, 2006:65)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이란 곧 외지인, 즉 '바당'마을 외 사람들과 동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

해지는 것(becoming equal)¹⁰⁵⁾으로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자존심의 회복"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105) 동일해지는 것(becoming identical)과 동등해지는 것(becoming equal)의 개념 구분은 일본 본토의 '일본인'과 아이누 민족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테사 모리스-스즈키(2006:234)에서 빌려왔다.

B. 장소성(placeness)의 재편, '삶'의 재편

군사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구축된 "군사기지에 반대한다"라는 선언은 반대 발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place)에 대한 재의미화와 함께 이를 다시 적극적으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된다. 반대 발언이란 권위와 문제를 일으키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적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한 단계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삶의 방식이랄 수 없다(Anzaldua, 2007). 따라서 남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민들의 삶, 문화, 언어, 사유의 근본 토대에서 발생하는 분열을 치유하는 것, 즉 군사적 폭력에 의해 파괴·분열되었던 마을을 구체적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민 입장에서 재구성·재정의 하는 것에 있다.

1. "정하니까 떼 떼 가라" : 취약함(weekness)의 자원화

“평화의 섬에서 어떻게 군사기지가 가능한가?”라는 구호는 군사기지 반대운동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제주의 기원(origin)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이다. 이런 질문은 ‘평화’를 주민들의 입장으로 전유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으나, 전쟁(기지)과의 이분법적 대비를 통해 구축된 ‘평화’라는 담론은 이미지 이외의 무엇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추상화된 ‘평화’ 개념은 상충 중심의 논쟁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¹⁰⁶⁾

106) 정부가 2005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제주 시민사회 내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군사기지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 가능-불가능성의 논쟁에 매달렸던 경험이 그 예이다(<사례 E>와의 심층면접 내용 중). 이 논쟁구도에서 핵심적인 것은 서구의 평화학자 요한 갈통(2000)의 개념인 '적극적 평화론'과 '소극적 평화론'을 '평화의 섬'에 적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개념들과 같은 용어를 쓰면서 국방부에서 반박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런 논쟁구도로 인해, 기지건설 당사자 마을의 주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하였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던 반대론은 찬성론에 밀려 한때 주춤하기도 했었다. 이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은 '평화'개념은 곧 상충 중심 담론으로 독점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제주도에 군사기지는 ‘유치’의 맥락에서 논해지고 있었고, 누구나 쉽게 거부할 수만은 없는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는 전쟁(기지)와의 대립물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 혹은 ‘새로운 시설·사람들’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망, 그렇게 조건 지어진 제주의 불균형적 경제적 구조와 이미 외부로 통해 생존하는 관광지로서의 제주, 이 모든 것들의 극복 혹은 재의미화를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초창기 군사기지를 지지했던 주민들에게 있어서 마을의 취약함(weakness)은 ‘발전’담론에 포섭되게 된 원인이었다고 하면, 군사적 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 취약함을 오히려 자원으로 삼는 계기가 되면서 저항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었다.

근디, 지금 나 생각에는 화순은 거기는 이 밭들이 가시덤불 밭이야. 농사를 안 지어. 그리고 길도 다 포장해놓으니까 돈을 많이 투자 안해도 돼. 그디 가면 바다도 너르고, 이 길도 너르니까 이 지금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불면은 백성을 굶어 죽이는 거야. 완전 지금 노숙자를 만드는 거야, 지금. 문딱(전부) 그 농사를 해그넌 그 땅을 헌디, 지금 '바당'은 땅도 작은 상태에서 그 앞바당에 처음에 할 때에는 울로 해다가 해녀들 바당 손가락 찌르멍 가르켰지만은[해녀들이 찬성해서 바다를 내주었다는 뜻] 지금 10일날 발표[해군기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KDI 발표를 말하는 것임] 때 얘기 나오는데, 해군함 20척, 민군함 2척, 합해서 22척 세울 바당이 없어, 거기. 당추 복합항 들어와그네 땅도 잡고 바다도 잡는 거 같애. 그거는 맞춰줘야 되지, 그것도 안허고 위에서는, 저렇게난 김태환지사(웃음). 자기가 거기 가도 못허고 저기 가도 못허고, 위에서는 우리 부락으로 와주랜 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무조건 밀고 붙이는 거야. <사례 14>

우리 큰 지도를 보고 얘기해보자. 요만한 콩 만한 나라에 제주도도 요~만한거 하나 무인도를. 솔직히 말해서 무인도에 요만한 섬에 기지를 해서 뭐하니? 나는 그거를 이해가 안가고. 나는 정말 이명박이나 다른 사람한테 육지로 보내라 이거야. 육지로. 육지에 기지를 더 확장하던가. 도서는 발전 안하니까 육지로 거주지 이 제주도가 뭐가 필요해. 그대로 놔두라 이거야, 제주도는. 정~ 하고 싶으면 '바당'은 아니다 이거야. '바당'은 그대로 개발 할라면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더라고. 내가 무식한 머리로도 생각해보면은이 들어와져 진입하져 왔다갔다. 아니, 화

순은 다 뚫렸잖아. 위미도 가깝잖아. 거기서 여기 들어올라면 여 도로 뚫는 거만
도 어마어마 한거야. <사례 9>

<사례 14>와 <사례 9>의 주민은 이제 기지건설의 예정지였던 다른 두 마을들과 지형을 비교하면서, '바당'마을에 기지가 올 수 없는 혹은 와서는 안 되는 근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다른 마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없음"의 마을로서 결핍을 이야기했던 주민들은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취약함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취약함은 던고 일어서야 할 극복의 대상이거나 혹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내세움으로써 정치적인 자원으로 다시 위치지어진다.

2. '발전'의 재의미화와 장소성(placeness)의 생산

도시에서의 삶은 특정한 마을공동체를 제외하고, 거주지와 그것에 속한 공간(place)이 자신(self)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때의 공간은 숙식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한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농사 아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땅을 기반으로 살지 않는 삶의 방식은 그것이 삶의 주요 축인 사람들과는 '주민'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¹⁰⁷⁾ 그런 의미에서 "나가 바당(바다)이지. 그런 바당을 어떻게(어떻게) 짜를텐가"라는 탄식은 '주민됨'이라는 것의 다른 소속양식을 보여준다.

'바당'마을에서는 군사기지가 '발전'의 맥락에서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평화담론에서는 '발전'에 대해 "군사기지로 인해 발전된 적은 없다"¹⁰⁸⁾라거나, '발전'담론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는 그만큼 제주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발전'이란 이제껏 그 자체로 진리인 듯한, 도전받지 않아왔던 개념이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에 대해 평화담론에서는 군사기지가 '발전'시설로 말해지고, 이에 주민들이 설득되는 것에 대한 당혹해 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은 거짓이므로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생산하였다.

107) 비슷한 맥락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이슈가 된 대추리에서의 구호는 (대내외적으로 유명해진) "올해도 농사짓자" 뿐만 아니라, "같이 살자", "계속 살자"였다. 이처럼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핵심은 관계("같이")와 지속성("계속")이다.

108) 「2007 해군기지 시찰보고서」 p.54 중.

그런데 '발전'이라는 것은 시장친화적인 발전에서부터 자기-주도적 발전(self-directed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혹은 생태개발(ecodevelopment)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즉, '발전'은 자연적이거나 역사적으로 단일한 경험이라 아니라 역사적 과정의 생산물이다(Escobar, 2001:195).

하지만 무엇이 '발전'인지, 그것은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인지,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기지반대담론은, 역설적으로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활용되는데 기여한다. 동시에 주민을 '발전'담론의 외부에 위치시킴으로써, 기존 범주들의 바깥에 있는 '순수한 외재성'으로, 이해불가능한 타자로 인식되도록 탈역사화·자연화 해왔을 뿐이다.

주민들의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은 군사기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의 권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 주민들은 그 욕망의 한 축이었던 '발전'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분리해낸다.

군사기지라면은 우선은 국가에서 하는 거라.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토지문제라는 것도 다 빼앗긴다는 생각밖에 안들어. 한마디로. 개인업체가 들어설 때는 우리가 어느정도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봐 줄 수가 있는데, 국가 상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는 어느정도의 나이 드신 할머니 정도가 아니면 거의 알아. 알ان게. <사례 17>

<사례 4> 이녕(이렇게) 노력을 하면 될건디. 노력을 안해. 공짜로 먹을려고 하는 거지. 도둑놈이지. 말하자면이?

<사례 13> 날도둑놈이지 날도둑놈. 마을 팔아먹는 도둑놈.

<사례 4> 경해도(그렇게 해도) 자기네 말에는 부락 발전시키려고. 마을 발전시키려고 하노라고. 그렇게 말해.

<사례 13> [강조하며] '발전을 위해서'.

<사례 4> 그 뜻이 맞아야지 발전이 되느냐하면 군인들이 와서 발전이 되느냐. 그냥 개인들이 와서 무신 큰 어디 회[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에서 와서 무신 공원을 맨든다든가 하면 혹시 발전이 될런지. 군인들이 와서 난 발전되캥 하는건.

<사례 13> 이리 들어와서 큰 호텔이라도 지서부넨. 칼라호텔[서귀포에 있는 KAL 호텔을 말하는 것임] 같은 거라도 뭐라고 지서그넨(지어서) 관광버스라도 왔다갔

다, 관광객들이라도 왔다갔다 허면은 그거는 발전이 되지게.

<사례 4> 그렇지.

<사례 13>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

<사례 4> 이 부락 사람들 월급 생활도 할 수 있고.

<사례 13> 우리도 가그넨 요 김이라도 뽑아서 우리도 하루 품팔이씩이라도 얻어 먹을 수가 있지. 저기 기지가 들어와그넨 총 뽑아들면 우리가 얻어먹을 수가 있어? 없지. 우리 멍청한 생각에서도.

이때의 국가는 주민의 의지(will)대로 제어할 수 없는 권력을 의미한다. 군사기지 건설문제로 '바당'주민들이 국가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주민들의 뭉을 "빼앗거나", "총으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존재로 재의미화 되었다.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발전'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프로젝트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바당'마을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을 환경감시활동을 해서 획득하게 된 환경부 지정 '생태우수마을' 자격을 반납하였다. 그리고 이 증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움으로써 그것이 상이든 벌이든 국가에 의한 규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망 좋고, 이렇게 땅도 좋고. 밀감밭도 최고로 받거든? 제주에서. 하요보다 더 받아 우리. 하요 위미가 밀감 최곤디 우리가 이젠 최고 받아. 땅이 여기가 좋으니까. 과연 이 땅을, 보상을 받아. 보상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만한 땅을 살 수가 있는가, 어른들은 그 생각을 하더라고. 그니까 이 사람도 얘기 듣고 저 사람도 얘기 들으면서도 자기 땅을 지키젠 허면은 한 쪽만 생각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이쪽 막 생각을 나눠서 허는 거라. 경허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나는 거지. '아차, 아니다' 싶은 거지. 이대로가 좋은거로구나지. 이대로가 좋아. 길 안 넓혀도 좋아.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평화롭고 이정도면 좋지 뭘 더 원하는데.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발전이라? 우리 이렇게 살아도 발전. 아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가 발전이주 한꺼번에 왕창 들어오는 것이 무사 발전이라. 우리 생각에는. 우리 경 생각해. [우리끼리] 같이 앉으면서 얘기하면서도. 막 길이 넓혔다고 발전 아니. 절대 아니. 좁은 길에서라도 얼마든지 발전 할려면은 의논하면서도 발전 할 수 있는거. 나는 경 생각해. 좀 넓혔다고, 좀 뭔가 갖다 났다고 해서 발전인거 아니. 이제 하원도 아파트도 여러 개 생겼어. 이젠 하원 주민들 막 후회해. 왜? 타

지방 사람들이 왕 사니까 도둑도 많고, 옛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마을은 아파트도 하나 어신 마을이라. 이 마을은. 막 후진 허던 해여. 후진 허던 해여. 우린 이것이가 좋아. 후진 것이 아니. 게난 하원 사람, 월평도 마찬가지. 조그만한 아파트 있주게. 그니까 아파트 자체 이시면(있으면) 인구수는 늘지 몰라도 분위기가 합이 안된다는 거라. 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니까 똑 아파트가 이서서, 우리도 아파트가 없어서 에이 우리 마을 제일 후지다 후지다 해신디(했는데), 막상 해군기지 문제로 알아가니까 어서도(없어도) 된다 이거지. 그냥 우리끼리 이서그네(있는 채로) 살명 좋주만은 이렇게 합(단합)은 안 돼. 우리가 [아직 기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합된 거라. 나 생각은 경해. 게 아니? <사례 17>

<사례 17>을 포함해 많은 주민들은 "아파트가 없어서 가장 후졌던" 자신의 마을을 "이대로가 좋은거로구나"라는 말로서 다시 위치짓는다. 외부에 의해 부여되고, 또 그 외부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구체적 장소(place) 안에서 구체적 삶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발전'은 "우리끼리 이서그네 살명 좋은" 상태를 뜻한다. 이는 구체적 장소에 근간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자본, 국가, 지배이론 속에서 파생되는 추상적 보편성에 근거한 '발전'이기보다는, 일상적 삶의 우선권을 재확인하는 장소성(placeness)을 창조하는 것이다(Dirlik, 1999). 또 이는 "옛것을 존중하라"거나 "열린 사고를 가지라"는 사회의 요구와도 합치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Anzaldúa, 2007).¹⁰⁹⁾

군사기지에의 저항을 바탕으로 얻어진 경험은 이렇게 주민을 자연화·비역사화·비문화화 했던 이분법에 균열의 공간을 만든다. 이를 통해, 평화를 만든다는 것(peace-making)이 폭력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기획하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며, 이는 주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의 욕망까지도 충족시키는 새로운 '발전'의 의미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기지가 들어오면 어떻 할꺼고, 안 들어오면 어떻 할꺼냐? 여기서 사는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하지 않겠나. 나는 그게 걱정인거. <사례 20>

109) 비슷한 맥락으로, 토착미국인 작가 Gerald Vizenor는 토착미국인들의 지속적인 변화 속의 생존을 survival이 아니라 survivance라는 말로 대체한다. survival이 낡은 오랜 삶의 방식이 살아남는 것을 의미한다면, survivance는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지속-발전의 기예이다(Gerald Vizenor, 1994).

우리는 "대추리까지 가는거, 평택 사태까지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계자들한테도 그렇게 공언을 했수다게. "우린 두려울게 없다. 대추리처럼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린 피할 생각이 없다. 우린 변함이 없다.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서 이것을 해라." 이런 요구를 줄기차게 하는 거. <사례 15>

한편, 이렇게 재의미화된 장소(place)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사례 20>의 말처럼, '버티며', 일상에서 해 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새로운 정치성을 만들어낸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장소(place)에 속한 주체로서, 이 장소를 둘러싼 투쟁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거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민됨'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걱정과 불안, 그리고 그 요구의 절박함을 동반한다.

그러나 사는 곳과 같이 사는 사람이 주요한 삶의 축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개념과 상상을 가지지 않는 이 '주민됨'의 자리는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공포에 직면하면서도 <사례 15>의 말처럼 이곳에서 "피할 생각이 없게끔" 하는 정치적 자원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VII. 결론을 대신하여: 평화운동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군사기지건설 예정지인 제주도 '바당'마을의 참여관찰을 통해,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험·역사·사회경제적 조건 등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지는 폭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추상과 당위로서만 존재했던 기존의 평화 개념을 구체적인 장소에 기반한(place-based) 주민들의 삶의 논리를 통해 재의미화 하고자 하였고, 이를 평화만들기(peace-making)의 정치학으로 위치짓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당'마을에 작동되는 군사적 폭력은 기존의 방식처럼 회유나 협박의 방식이 아니라 “~이 아님”이라는 담론적 형태를 통해 작동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소)제국형 구조'로 형성됨으로써, 굳이 국민 내부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특히 이러한 군사적 폭력은 '적의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시화 되기 쉽다. 그리고 이는 '유치'를 통해 생존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발전방식과 호응하여, 이를 통해 군사기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발전시설'로서 의미화 되며, 군사기지 역시 '유치'의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지건설이 가시화 되면서 주민들은 군사적 폭력에 내재된 모순과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부정된 폭력을 발견하거나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발전'으로서 의미화되어 특정한 폭력의 행위자가 없거나 감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로를 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분열되거나, 땅-바다에 대한 주도권을 점차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일상을 조정하는 힘으로서도 작동되어, 주민들을 '가만히 있는' 대상으로서 간주하거나, 주민과 땅-바다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로서 스스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주민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극복 혹은 부정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민됨'의 위치에서 국가의 소속양식과, 삶의 장소성(placeness)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구성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평화의 개념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간 여성주의 평화연구에서는 남성들의 핵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징집, 군대, 전쟁 등의 메커니즘이 성별화된 구조를 은폐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전쟁-평화'라는 허구적인 이분법을 깨기 위하여, '일상화된 전쟁(폭력)'의 구조의 작동방식을 드러내면서 일상의 곳곳에 배어있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이 진행된다면 될 수록 군사적 폭력의 힘은 '우리'를 얹매이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서 위치지어졌고, 이는 '우리'를 더욱 약자화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¹¹⁰⁾. 그리고 이런 구도는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한동안 담론의 정체를 겪기도 하였다. 군사주의 비판담론이 폭력의 형태를 고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이를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했고, 한편으론 폭력을 더욱 미시화된 권력의 형태로 분석할수록 이를 탈출할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정체와 무력감은 사실상 이러한 논리구조가 갖는 예정된 결과이기도 하다.¹¹¹⁾

폭력(을 비롯한 모든 권력)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생산되고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것과, 그 일상을 구축하는 '군사적 폭력'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되어야 하며, 그것은 특정한 시·공간에 근거한 경험을 통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언제나 실험용 쥐와 같은 실험대상이었다"는 제주의 한 시민사회활동가의 말처럼, 이러한 변화된 폭력 패러다임의 최전선에 제주 '바당'마을이 있는 것이다.

110) 특히 독재정권에 대한 경험과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징병제로 인해 '강력한' 군사주의적 사회라고 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은 이러한 분석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111) 본 연구자가 2005~6년까지 속해 있었던 소규모의 페미니스트 평화그룹에서는 해소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공유했다. 하나는 군사주의 비판담론을 생산하면 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미시적인 권력망으로 인해 담론의 생산자가 무력감에 빠진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현장(field)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가·남성중심적인 담론과의 투쟁은 구체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는 사실상 하나의 문제로 인해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는 폭력, 국가, 남성 등의 범주를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범주를 더욱 추상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 권력의 효과와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은 곧 국가로 통하고, 이는 보편으로서 편재(遍在)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없는 공간(placeless)으로 위치지워지기 쉽다. 그러나 군사적 폭력은 '바당'마을이 '적정지'가 된 것처럼 국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땅-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place)에 대한 사유가 너무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피스로드맵이나 평화체제론(평화국가)과 같이 큰 그림은 있으나 '지금-이곳'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물음을 막는 방식의 운동, 또 평화를 갈등관리나 마음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운동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사유하지 않는 '평화'개념은 곧 상층 중심 담론으로 독점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화가 폭력과 관계 속에서 수동적이고 규범적으로 정의되었던 기존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위계화된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민 내부의 권력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도청, 국가와 연결됨으로써 이를 통해 다시 내부를 들여다보는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한편, 군사기지가 '발전'과 '폭력'의 효과를 왕복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군사적 폭력'으로 묶어서 명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되지 못한 고민으로 남아있다. 군사적 폭력이 추상적인 위협이나 동원/배제의 형태가 아니라 오키나와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될 때, 이를 무엇이라 명명할 것인가? 이는 다시 '폭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의 '폭력'은 무엇에 대한 침해 혹은 박탈인가? 이러한 남아있는 물음들은 후속 작업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주도가 점차로 '외지인'의 욕망을 통해 구성되고 있고, 이 때문에 '바당'마을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토지의 외지인 소유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땅 없는 자들이 '유치'를 더욱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파는 조사를 통해야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해군기지의 담론구성방식, 군사담론의 지역화된(localized) 논리구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등의 요소들은 오키나와의 경험에 많은 부분 빚졌다. 그리고 이 논의가 그들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사한 맥락이 발견될 때마다 이를 각주로 인용·참조하였다. 본 연구가 제주-서울, 여성-남성, 자연(환경)-문화 등의 이분화된 구도에 질문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한다면, 제주-오키나와 간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을 통해 군사기지와 함께 살아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의 경험과 교차시켜 본다면 국민국가에 갇히지 않은 경험세계들이 좀 더 풍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경숙(2009), “지역적 맥락에서 본 제주농촌지역의 성매매 지형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 과정에서 ‘피리’마을 주민과 다방종사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 강인화(2007), “한국사회의 병역거부 운동을 통해 본 남성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미간행.
- 고미숙(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 책세상.
- 구갑우(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 권인숙(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청년사.
- 김동춘(2000), “국가폭력과 사회계약”, 『근대의 그늘』, 당대.
- 김석준(1997), “제주지역의 선거(1948~1992): 개발적 검토와 재해석”, <탐라문화> 제17호.
- 김성례(2001),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흔적』 제2권, 문화과학사.
- 김엘리(2004), “군사화와 성의 정치”, 민주법학연구회, <민주법학> 통권 25호.
- 김은실(2002), “지구화, 국민국가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19집.
- _____(2004), “지구화 시대 근대의 탈영토화된 공간으로서 이태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변화하는 여성문화 움직이는 지구촌』, 푸른사상.
- _____(2008),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을 질문한다”,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 김창민(1992), “범주로서의 친족: 제주도의 켄당”, <한국문화인류학> 제24집.
- _____(2005), “마을과 친족, 그리고 문화”,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민속연구> 제14집.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김현영(2002), “병역의무와 근대적 국민정체성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논문, 미간행.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혜진(2007), “집합행동의 프레임 구성과정에 대한 연구 : 부안·경주의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 다카사토 스즈요(2000),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보장 -안전보장 재정의를 향해: 군대 장기 주류에 있어서 오끼나와의 체험”
- 박경(2003), “새만금지역의 여성 삶과 갯벌의 관계에 대한 생태여성주의적 접근 : 부안 '그레'마을 여성들의 '갯살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미옥(1999), “폐기물 소각정책의 집행과 주민저항”,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집 4호.
- 박종배(1994), “지역주민운동과 쓰레기처리정책과의 관계 : 김포 매립지 지역주민운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미간행.
- 서동진(2005), “자기계발의 의지, 자유의 의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_____(2009), 『디자인 멜랑콜리아』, 현실문화연구.
- 서정무(1996), “환경정책에 있어서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환경관리학회지>, Vol.2 No.1.
- 송경언(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47,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 _____(2006), 『어촌과 관광: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 연구』, 한국학술정보.
- 심영희(2007), 『세계화와 여성안보』, 한울아카데미.
- 양길현(2006), 『평화번영의 제주정치』,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총서 3, 으뜸.
- 오미영(2001), “군사화에 의한 젠더 위계체제 강화”, 신라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오정준(2003), “제주도 지역개발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7권 2호.
- 우석훈(2008a), 『촌놈들의 제국주의』, 개마고원.
- _____(2008b), 『괴물의 탄생』, 개마고원.
- 유철인(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島嶼性):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 제1집.
- _____(1998), “지역연구와 제주도: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연구> 제 13집.
- 윤경노(2001), 『향토 '바당'(개정증보판)』, 디딤돌.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윤희린(2003), “사이버 공간속의 여성 현실-여성 네티즌의 공간적 체험을 중심으로”, <사상> 2003년 봄호(통권 제56호).
- 이규열(2000), 『중장기 위협 평가 및 국가 안보 전략』, 한국국방연구원.
- 이기욱(1984),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 이미숙(2006), “환경운동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 : 부안 반핵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상철(1995), “제주사회변동론 서설”, 『제주사회론』, 한울.
- 이상환(2008), “전염병과 인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2집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이신화(2001), “탈북자와 인간안보”, <계간 사상>, 제13집 1호.
-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이영민 · 허남혁(2001), “농촌지역 환경갈등과 농촌주민 환경운동의 역할과 의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집 4호.
- 이정주(1999),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임동근(200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개발주의의 만남”, <문화과학> 제46호, 문화과학사.
- 전쟁을반대하는여성들(WAW) 편집팀(2003),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도서출판 다음.
- 정연신(2008), “오кина와의 기지화 · 군사화에 관한 연구”, 정근식 외 편저, 『오кина와 미군기지의 정치사회학 제1권: 기지의 섬, 오кина와』, 논형.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 _____(2006), “제주 여행”, 유이 엮음, 『여행 좋아하세요?』,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제주 4·3 유적지 기행』, 제주 4·3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편, 서울: 학민사.
- 제주도 문화예술과·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4), 『(제주여성) 전승문화: 삶과 문화이야기』.
-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2004),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
- _____(2006), 『(제주여성의 생애) 살았시난 살았주』.
- 조성윤(1992a),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시 탑동 개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제56호.

_____(1992b), “제주의 관광개발과 주민의 각종 반대운동”, <제주발전연구> 제4호, 제주발전연구소.

_____(1995) “제주도 도시개발의 기본구조”,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_____(1997), “제주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심포지움- 제주인의 문화정체성을 찾아서”, 제주문화포럼 발표.

조순경(1992), “여성학의 발전과 한국사회학의 변화”,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9집.

조이여울(2002), “여성과 소수자의 눈으로 본 평화담론”, <여성과 평화>, 14호.

진현영(2007), “제주시 신시가지의 공간적 의미에 관한 연구: 연동·노형 신시가지 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최용환(1997), “협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주민 저항의 해결방안”, <우암논총>, 제17집.

허남춘 외(2007), 『제주의 음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

현기영(1979), 『순이삼촌』, 창작과 비평사.

홍성철(2007),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황금희(1999),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황석규(1985), “도시 내 상층 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번역서>

가리타니 고진(1997),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민음사.

가야트리 스피박(2005),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 사라져가는 현재의 역사를 위하여』, 태혜숙·박미선 공역, 갈무리.

_____(2008), 『다른 세상에서』, 태혜숙 옮김, 여이연.

강상중·요시미 순야(2004), 『세계화의 원근법: 새로운 공공공간을 찾아서』, 임성모·김경원 공역, 이산.

거다 러너(2006), 『왜 여성사인가: 한 역사가의 치열한 삶과 사상을 들여다보며』, 강정하 옮김, 푸른역사.

다나 해러웨이(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옴김, 동문선.

도미야마 이치로(2002), 『전장의 기억』, 임성모 옴김, 이산.

_____ (2009), 『폭력의 예감』, 손지연·김우자·송석원 공역, 그린비.

라클라우·무페(1990),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김성기 외 옴김, 터.

래나토 로잘도(2000), 『문화와 진리』, 권숙인 옴김, 대우학술총서 483, 아카넷.

메릴 원 데이비스(2005), 『인류학- 하룻밤의 지식여행』, 정해영 옴김, 김영사.

문승숙(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 국민 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 이현정 옴김,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사카이 나오키(2005), 『번역과 주체 : '일본'과 문화적 국민주의』, 후지이 다케시 옴김, 이산.

_____ (2008), 『일본, 영상, 미국 : 공감의 공동체와 제국적 국민주의』, 최정욱 옴김, 그린비.

스티븐 코헨·린다 샤이어스(1997), 『이야기하기의 이론』, 임병권 외 옴김, 한나래.

신시아 인로(2003), "매매춘의 동반자들", 『그들만의 세상 : 아시아의 미군과 매매춘』, 김윤아 옴김, 잉걸.

아르준 아파두라이(2004), 『고삐 풀린 현대성』, 차원현·채호석·배개화 공역, 현실문화연구.

아리프 딜릭(2005), 『포스트 모더니티의 역사들 : 유산과 프로젝트로서의 과거』, 황동연 옴김, 창비.

에드워드 홀(2002), 『숨겨진 차원: 공간의 인류학』, 최효선 옴김, 한길사.

요네야마 리사(2002), "기억의 미래화에 대해",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코모리 요우이치·타카하시 테츠야 엮음, 이규수 옴김, 삼인.

요한 갈통(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외 옴김, 들녘.

주디스 버틀러(2003), "문화의 보편성",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 애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마사 너스봄 외, 조슈아 코언 편, 오인영 옴김, 삼인.

_____ (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옴김, 문학동네.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2008), 『누가 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옴김, 산책자.

켄 실버스타인(2007), 『전쟁을 팝니다』, 정인환 옴김, 이후.

테사 모리스-스즈키(2006),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 아이누와 식민주의』, 임성모

옴김, 산처럼.

피터 W. 싱어(2005), 『전쟁 대행 주식회사』, 유강은 옴김, 지식의 풍경.

호미 바바(2002), 『문화의 위치 :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옴김, 소명출판.

<외국문헌>

Mulvey, Laura(1985),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in *Movies and Methods*, ed. Bill Nichol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vol.2.

Fabian, Johannes(1983), *Time and the Other: How Anthropology Makes Its Object*, Columbia University Press.

Silverman, Kaja(1983), *The subject of semiotics*, Oxford University Press.

De Man, Paul(1983), *Blindness and Insight: Essays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second edition, revised, with an introduction by Wlad Godzic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Anzaldua, Gloria(2007), *Borderlands : the new mestiza = La frontera*,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3rd ed.

Escobar, Arturo(2001), *Places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balization* / edited by Roxann Prazniak and Arif Dirlik,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Dirlik, Arif(2001), *Places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balization* / edited by Roxann Prazniak and Arif Dirlik, Lanham, MD : Rowman & Littlefield.

Griffiths, Gareth(1994), "The Myth of Authenticity", in *De-Scribing Empire: Post-Colonialism and Textuality*, ed. Chris Tiffin and Alan Lawson, London: Routledge.

Brydon, Diana(1991), *Past the Last Post: Theorizing Post-Colonialism and Post-Modernism*, ed. Ian Adam and Helen Tiffin,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Anzaldua, Gloria(2007), *Borderlands : the new mestiza = La frontera*, 3rd ed, Aunt Lute Books.

- Vizeno, Gerald(1999), *Manifest Manners: Narratives on Postindian Survivanc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carry, Elaine(1985), *Body in Pa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World*, Oxford Univ. Press.
- Cohn, Carol(1987), "Sex and Death in the Rational World of Defense Intellectuals", *Signs*, Vol.12, No.4.
- Maturana, Humberto and Varela, Francisco J. (1987), *The Tree of Knowledge: The Biological Roots of Human Understanding*, Boston.

<신문 및 방송 기사>

- "제주지역 아토피 유병률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제민일보』, 2008년 1월 30일자.
- "연산호 군락이 존재함을 인정", 『제주의 소리』, 2008년 9월 25일자.
-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 『국방일보』, 2008년 4월 2일자.
- "이승만과 이명박... '농지개혁'과 '종부세 대못 뽑기': '건국의 아버지'의 사유재산 침해사", 『프레시안』, 2008년 9월 25일자.
- "온 섬 격렬한 논쟁·갈등 휩싸여", "제주 60대 사건(46)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정반대운동", 『제민일보』, 2005년 11월 28일자.
- 장정길 칼럼, "화순항 해군부두를 말한다", 『제주일보』, 2002년 11월 22일자.
- 김동주 칼럼,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4주년을 맞아] 군사기지와 ‘평화의 섬’의 양립가능 주장은 ‘지식범죄’다", 『제주의 소리』, 2009년 1월 20일자.
- "해군기지는 '친환경 관광 미항 기능 갖춘 세계적인 해군기지'", 『국방일보』, 2008년 4월 2일자.
- 우석훈 칼럼, "우리에게 제주란 무엇인가", 『한겨레신문』, 2008년 7월 30일자 .
- "제주 60대 사건: (46)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정반대운동", 『제민일보』, 2005년 11월 28일자.
- "李 대통령, 해군기지 언급 '어떻게' 나왔지?... '설왕설래'", 『제주의 소리』, 2009년 6월 3일자.
- "해군 측은 산호초는 있으나, 매우 적다고 했으며, 친환경공법을 동원해 공사할 예정", 『제주의 소리』, 2008년 9월 25일자.
- "'산호 군락지 없다던 해군주장 거짓'...추가조사 촉구", 『제주의 소리』, 2009년 3

월 27일자.

"권력의 표준어 경상도 말", 『한겨레21』 제708호, 2008년 5월 1일자.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단독 입수", 『제주KBS 뉴스9』, 2009년 1월 19일자 보도.

<기자회견 및 토론회 자료집 · 보고서>

고유기(2006), "군사기지, '기회의 역사'로 거듭나는 제주미래의 중대한 도전 - 제주도 군사기지", 『2006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오성근(2007), "남성의 의식 변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개인의 일상경험을 중심으로」, 제주여성회.

이삼성(2007),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넘어서: 제주-오키나와-타이완의 동아시아 평화벨트를 상상하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코리아연구원 주최, 「대안적 동북아 평화구상과 '평화국가' 만들기」.

이서향(2002), "국제자유도시와 안전보장",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해양 안보』, 해군본부 주최, 「제9회 함상토론회」.

이준규(2007), "제주 비핵 · 평화지대화'를 위한 제안", 국회의원 현애자 · 남원읍 연합청년회 주최, 「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이춘근(2007), "제주도 해군기지와 한국의 해양 전략", 2007년 3월 31일 세미나 발제 논문.

임동근(2008), "신자유주의 시대 공간의 정치학", 문화연대 주최 문화정책 월례포럼 (4월), 「신자유주의 공간의 정치학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장정길(2002), "동북아 해로에 있어서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해양 안보』, 해군본부 주최, 「제9회 함상토론회」.

정삼만(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안전보장", 제주해양연맹 주최, 「2002 제주해양연맹 심포지움」.

주영하(2009), "음식의 국민화와 향토음식-국민음식에 포섭되는 제주도음식", 1950년대 여성문화장 기획 세미나 4탄 발표문.

제주도(2006), 『제주도지-산업경제』, 제4편, 제주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2005), 「2005 한반도 평화보고서」.

채진영, 2008, "'바당', 평화에 물들다", 『2008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해군본부(2007), "해군기지 사업추진계획".

한국은행(2000), 『제주지역 경제구조의 특성과 시사점』.

해양수산부(2002), 『제주도 문섬 주변 해양생태계 보전 방안 연구』.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2009), 「SIPRI ARMS TRANSFERS DATA, 2008」.

<영상자료>

김지훈(2004), "목포는 항구다"

김환태(2009), "국경은 없다"

박광현(2005), "웰컴 투 동막골"

송일곤(2005), "깃"

임찬상(2004), "효자동 이발사"

장규성(2003), "선생 김봉두"

<홈페이지>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 <www.hanjak.or.kr>

■ ABSTRACT

**The Peace-Making Politics in the Contestations of Discourses
on Military Base in Jeju Island**

Lee Bora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raise a question on the method and viewpoint that the concept of violence and peace is interpreted from the standpoint of local people.

So far, studies on military violence(militarism) have generally focused on sufferings caused by power, authority, contamination, etc. viewing 'violence' itself in the context of militarism, male chauvinism, and mechanism of mobiliz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ruggles against violence have been narrowly assessed in the way of 'witnessing' suffering("victimized people") or calling victims as political subjects("true peace"). And the concept of 'peace' established through these ways has become to mean only keeping, not spoiling something they originally have.

However, the frame of violence and suffering from this point of view was a bit pre-given and per-determined. This kind of analysis has been possible since military violence in Korean society was based on

experience originating from military dictatorship, conscription system,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etc. But military violence in 'Badang' Village in Jeju island was being developed through the way of guaranteeing 'a better life', rather than using traditional carrot and stick, and military base was also being regarded as 'development facility', not as 'abominable fac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is situation that 'Badang' Village competed with other regions to 'attract' military base, we needed non-conventional, new frame of analysis, and the concept of violence and peace had to be redefined and reconstructed as peace-making process.

I interviewed villagers, activists, military personnels and civil servants working for provincial government in depth, residing in 'Badang' Village for 3 months. And experiencing villager-being process, I also raised questions concerning the meaning of forming 'relationship' with villagers, the issue of performative identity, the vernacular and the standard language, and power issue surrounding gender.

Research findings and conclusions are:

- 1) Military base entering Jeju 'Badang' Village was not being forced under the context of people's obligation and role, but being accessed as opportunities for local people to utilize in order to actualize 'a better life'. This is basically attributable to altered structure of national defense in Korea which is now maintained and functioned to solve basic living issues, rather than to invade upon enemies. Therefore, local people was accepting discourse on establishing military base which was persuaded in the most localized language, rather than peace discourse appealing to universality and principle.
- 2) As 'Badang' villagers became to face against national government, defense ministry, Jeju provincial offices, they started to become aware

of violence as premise or effect of discourse on military base. As military violence concealed its presence, it made villagers point out each other as primary factor of causing violence, reversed hegemony over 'Badang' village, or made villagers realize violence as something objectifying themselves.

3) With recognition on these kinds of violence, villagers became to know that 'building up military base' was denying or overcoming the way of life which they had stuck to, and began to raise questions on mode of nation and placeness of their life. And, 'being-villager' was not only criticizing violence but also planning their future to be 'better'.

I intended to prove that military violence is not fixed and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since 2000 and also peace isn't inherent, and rather the product of recognition and finding.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statement "Present military is 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past" that military personnel used to mention exactly reveals the character of violence functioning in 'Badang' Village now. What happens in 'Badang' is different from the 'past' violence. So, violence is freshly revealed and recognized where 'past' violence cannot be copied as violence is functioning situationally in the specific time and pl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lucidate how the local people's body, the land and sea, and their identity is redefined and recognized. That's the reason why we should take notice of the political context under the specific time and place, so to speak, the placeness, in speaking of violence.